

(최종편집일 : 2013.11.22)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조영재 · 유학열 · 윤정미 · 이관률 · 박경철 · 엄성준 · 김정하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내용 및 방법	4
1) 연구내용	4
2) 연구방법	5

제2장 이론적 고찰

1. 마을의 개념 및 기능	7
1) 마을의 개념	7
2) 마을의 기능	10
2. ‘한계마을정책’의 일반적 개념	12
3. 선행연구	16
1) 국내 연구동향	16
2) 국외(일본) 연구동향	18
4. 국내·외 관련 정책	23
1) 국내 관련 정책	23
2) 국외 관련 정책	28
5. 소결	38

제3장 충남 농촌마을의 현재와 미래

1. 자료의 수집	40
2. 농촌마을의 구성요인	41
3. 농촌마을 구성요인별 특성분석	42
1) 인구요인	42
2) 주민역량요인	44
3) 사업실적요인	45
4) 마을공동체요인	46
5) 도농교류요인	46
6) 분석결과의 종합	47

제4장 한계마을 관련 농촌마을 실태조사 및 분석

1. 조사개요	51
1) 조사 목적 및 방법	51
2) 한계마을 유형화	53
2. 농촌마을 주민의식 조사 및 분석	57
1) 조사 및 분석개요	57
2) 일반적 특성	58
3) 사람의 공동화	63
4) 토지의 공동화	71
5) 공동체의 공동화	75
6) 정책투입 및 정책수요	80
7) 과소고령마을 및 과소비고령마을의 특성분석	86
8) 분석결과의 요약	103
3. 농촌마을 공간구조 조사 및 분석	107
1) 분석의 범위 및 방법	107
2) 공간적 특성 인자 도출	110

3) 데이터 구축	114
4) 유형별 금산군 공간 특성	128
5)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공간특성분석	140
6) 소결	146
4. 농촌마을 정주실태 조사 및 분석	148
1) 조사 및 분석개요	148
2) 마을인구 및 정주환경 변화 실태	150
3) 토지이용 및 환경변화 실태	163
4) 공동체 활동의 현황과 변화 실태	171
5) 마을주민의 인식과 정책적 태도	178
6) 소결	184
5. 종합고찰	188

제5장 한계마을정책 추진방향

1. 한계마을정책 개념 재정립	195
2. 한계마을정책의 기본원칙 및 의의	199
1) 기본원칙	199
2) 의의 및 필요성	202
3. 한계마을정책 방향	204
1) 기본방향	204
2) 존속마을의 정책방향	205
3) 준한계마을의 정책방향	207
4) 한계마을의 정책방향	213

제6장 결 론

1. 요약 및 결과	217
2. 향후 과제	220
참 고 문 헌	222
부록 1. 농촌지역 한계마을 실태 및 주민의식 조사표	223
부록 2. 한계마을 주민대표 조사표	229

〈표 차례〉

<표 1- 1> 전국 읍·면 지역의 연도별 고령인구 증가 추이	1
<표 1- 2> 농어촌 마을(행정리 기준)의 규모별 구성 비율 변화	1
<표 2- 1> 마을 관련 용어의 비교	7
<표 2- 2> 커뮤니티의 구성요소(Hillery, 1995)	9
<표 2- 3> 한계화(限界化)에 따른 마을의 구분(大野晃, 2008)	12
<표 2- 4> 광특회계 편성체계	23
<표 2-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유형 및 내용	26
<표 2- 6> 한계마을 관련 직접지불제도	27
<표 2- 7> 일본의 과소대책사업 실적(2009년)	30
<표 2- 8> 도쿠시마현 집락재생 프로젝트 시책	36
<표 2- 9> 이론적 고찰의 주요 결과	39
<표 3- 1> 농촌마을 조사항목과 내용	40
<표 3- 2> 농촌마을의 구성요인(요인분석)	42
<표 3- 3> 충남 농촌마을의 인구요인 특성	43
<표 3- 4> 충남 농촌마을의 주민역량요인 특성	45
<표 3- 5> 충남 농촌마을의 사업실적·마을공동체·도농교류요인 특성	47
<표 3- 6> 충남 농촌마을의 일반모습	48
<표 4- 1> 농촌마을 유형별 분포	54
<표 4- 2> 금산군 농촌마을의 유형구분	55
<표 4- 3> 성별과 직업	58
<표 4- 4> 연령 및 거주기간	59
<표 4- 5> 인구와 기타 변수간의 상관관계	59
<표 4- 6> 인구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60
<표 4- 7> 고령인구비율과 기타 변수간의 상관관계	61
<표 4- 8> 고령인구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62

<표 4-9> 인구	63
<표 4-10> 고령화	64
<표 4-11> 빈집 수 및 빈집 비중	65
<표 4-12> 최근 5년간 전입인구	66
<표 4-13> 방문객 수 및 방문목적	67
<표 4-14> 마을인구 및 소멸가능성	68
<표 4-15> 인구감소의 요인	69
<표 4-16> 마을의 발전전망	70
<표 4-17> 주요 소득원	71
<표 4-18> 가구당 연평균 소득수준	72
<표 4-19> 전체 농경지 중 휴경지 비율	73
<표 4-20> 휴경지의 변화추이	74
<표 4-21> 휴경지 증가의 원인	75
<표 4-22> 마을공동체의 조직	76
<표 4-23> 마을공동체의 활동	77
<표 4-24> 마을의 도농교류	78
<표 4-25> 마을공동체의 유지 및 향후 전망	79
<표 4-26> 공공사업의 수행마을	80
<표 4-27> 공공사업의 투자규모	81
<표 4-28> 공공사업의 마을발전효과	82
<표 4-29> 소멸마을의 대응방안	83
<표 4-30> 소멸마을 정책의 필요성	84
<표 4-31> 소멸마을의 대응정책	85
<표 4-32> 정책수요	86
<표 4-33>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인구 및 고령화	87
<표 4-34>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전입인구 및 방문객	88
<표 4-35>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전망 및 소멸가능성	89

<표 4-36>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소득원 및 소득수준	90
<표 4-37>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휴경지	91
<표 4-38>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마을공동체	92
<표 4-39>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마을공동체 활동	93
<표 4-40>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도농교류	94
<표 4-41>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마을공동체 유지 및 변화	95
<표 4-42>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공공사업	96
<표 4-43>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마을발전효과	97
<표 4-44>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소멸마을 대응정책	98
<표 4-45>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소멸마을 정책 필요성	99
<표 4-46>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소멸마을 유지정책 필요성	100
<표 4-47>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대응정책	101
<표 4-48>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정책수요(우선순위)	102
<표 4-49> 농촌마을 유형별 특성의 종합	104
<표 4-50> 농촌마을 공간구조 분석 범위	107
<표 4-51> 문헌 검토에서 도출된 특성인자	111
<표 4-52>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로 도출된 특성인자	113
<표 4-53> 공간적 특성을 포함한 인자 재도출	113
<표 4-54> 최종 지표	114
<표 4-55> 최종 지표	115
<표 4-56> 4개 유형에 따른 도로율 분포	128
<표 4-57> 4개 유형에 따른 도로 접근성 분포	130
<표 4-58> 4개 유형에 따른 지가 분포	132
<표 4-59> 4개 유형에 따른 경사도 분포	134
<표 4-60> 4개 유형에 따른 군청 접근성 분포	136
<표 4-61> 4개 유형에 따른 읍면 접근성 분포	138
<표 4-62>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공간 분석 현황	140

<표 4-63> 도로율 표준화에 따른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 분포	142
<표 4-64> 지가 표준화에 따른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 분포	143
<표 4-65> 군청 접근성 표준화에 따른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 분포	144
<표 4-66> 경사도 표준화에 따른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 분포	145
<표 4-67> 조사대상 한계마을과 피조사자 현황	150
<표 4-68> 한계마을의 인구 현황	151
<표 4-69> 한계마을 주민의 향후 인구 변화 전망과 그 이유	156
<표 4-70> 한계마을의 주요 교통 및 도로 여건과 주민 평가	162
<표 4-71> 한계마을 주민의 영농형태 및 겸업소득 유무	164
<표 4-72> 한계마을의 전답 비율과 유휴면적 현황	165
<표 4-73> 마을 내 물 환경 변화와 경관 훼손 실태	170
<표 4-74> 한계마을의 공동체조직 현황	172
<표 4-75> 마을 내 공동체 활동 및 외부 활동 현황	173
<표 4-76> 마을 내 공동체 시설 현황	175
<표 4-77> 한계마을 주민의 계속 정주 여부와 주민 친화도	177
<표 4-78> 마을의 발전 상태와 다른 마을과의 정책적 차별 여부	179
<표 4-79> 한계마을의 정책 수혜 여부 및 정책투입 우선순위	182
<표 4-80> 8개 한계마을에 대한 재평가 결과와 그 이유	186
<표 5- 1> 한계마을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	197
<표 5- 2> 한계마을정책 대상 및 기본방향	205
<표 5- 3> 존속마을의 정책방향	206
<표 5- 4> 농어촌서비스 기준	209
<표 5- 5> 준한계마을의 정책방향	211
<표 5- 6> 한계마을의 정책방향	216
<표 6- 1> 한계마을정책 방향	219

〈그림 차례〉

<그림 1- 1> 연구 흐름도	6
<그림 2- 1> 마을의 3대 주요 기능	11
<그림 2- 2> 일본 집락기능 재편강화 사업의 예(오카야마현 사례)	33
<그림 2- 3> 도쿠시마 집락재생 프로젝트 추진체계	35
<그림 4- 1> 한계마을 관련 마을조사 개요	52
<그림 4- 2> 농촌마을의 유형화	53
<그림 4- 3> 금산군 농촌마을의 유형별 분포	56
<그림 4- 4> 우리나라 농촌마을의 재유형화	105
<그림 4- 5> 우리나라 한계마을의 결정요인	106
<그림 4- 6> 농촌마을 공간구조 분석 범위	108
<그림 4- 7> 분석 절차	109
<그림 4- 8> 금산군 도로데이터 구축	116
<그림 4- 9> 행정리별 도로율 분석 결과	117
<그림 4-10> 행정리 도로 접근성 지도 구축	118
<그림 4-11> 행정리별 도로 접근성 분석 결과	118
<그림 4-12> 필지별 지가 데이터 구축	119
<그림 4-13> 행정리별 최대 지가 분석 결과	120
<그림 4-14> 경사 데이터 구축	121
<그림 4-15> 행정리별 평균 경사분석 결과	121
<그림 4-16> 군청으로부터의 접근성 데이터 구축	122
<그림 4-17> 행정리별 군청 최단 접근성 분석 결과	123
<그림 4-18> 읍면사무소로부터의 접근성 데이터 구축	124
<그림 4-19> 행정리별 읍면사무소 최단 접근성 분석 결과	124
<그림 4-20> 행정리별 휴경지 비율	125
<그림 4-21> 금산군 논밭데이터 구축	126

<그림 4-22> 행정리별 논밭 비율 분석결과	127
<그림 4-23> 4개 유형의 도로율 분포	128
<그림 4-24> 도로율에 따른 마을별 분포도	129
<그림 4-25> 4개 유형의 도로 접근성 분포	130
<그림 4-26> 도로 접근성 표준화에 따른 분포도	131
<그림 4-27> 4개 유형의 지가 분포	132
<그림 4-28> 지가 분석에 따른 분포도	133
<그림 4-29> 4개 유형의 경사도 분포	134
<그림 4-30> 경사도 분석에 따른 분포도	135
<그림 4-31> 4개 유형의 군청 접근성 분포	136
<그림 4-32> 군청접근성에 따른 분포도	137
<그림 4-33> 4개 유형의 읍면 접근성 분포	138
<그림 4-34> 읍면 접근성에 따른 분포도	139
<그림 4-35>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도로율 분포	142
<그림 4-36>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지가 분포	143
<그림 4-37>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군청 접근성 분포	144
<그림 4-38>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경사도 분포	145
<그림 4-39> 한계마을의 주요 측정 지표	149
<그림 4-40> 마을 내 방치된 빈집(오항2리(좌), 용화3리(우))	152
<그림 4-41> 마을 내 새로 진입한 가구(백암3리)	154
<그림 4-42> 새롭게 확포장 된 마을 내 진입도로(오항2리)와 마을버스 정류장(백암3리)	161
<그림 4-43> 마을 내 유휴농지(오항2리(좌), 보광리(우))	166
<그림 4-44> 마을 내 공동체시설인 마을회관(오항2리<좌>), 마을정자(보광리<우>)	176
<그림 4-45> 한계마을 판단지표	189
<그림 5- 1> 한계마을정책 기본 프로세스	196
<그림 5- 2> 한계마을정책의 상세 프로세스	198
<그림 5- 3> 한계마을정책의 기본원칙(전제조건)	202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농촌지역은 심각한 과소화·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소멸의 가능성이 있는 마을과 실제 소멸하는 마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성주인, 2012)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읍·면이 2000년 24.9%에서 2010년 39.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어촌 마을(행정리 기준)의 가구수 구성도 60호 이상의 마을은 감소하고 60호 미만의 마을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전국 읍·면 지역의 연도별 고령인구 증가 추이

구 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증감률 (2000-2010)
	2000년	2005년	2010년	
일반 읍·면	5.5	6.9	8.1	2.7
고령(화) 읍·면	12.7	16.0	17.9	5.1
초고령 읍·면	24.9	34.0	39.7	14.7
전체	15.3	19.1	21.0	5.7

자료 : 성주인, 2012

〈표 1-2〉 농어촌 마을(행정리 기준)의 규모별 구성 비율 변화

구 분	20호 미만	20-59호	60-99호	100-149호	150호 이상	합계
2005년	2,048 (5.7)	17,780 (49.3)	8,174 (22.7)	3,253 (9.0)	4,786 (13.3)	36,041 (100.0)
2010년	3,091 (8.5)	19,281 (52.8)	7,291 (20.0)	2,525 (6.9)	4,308 (11.8)	36,496 (100.0)

자료 : 성주인, 2012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과소화·고령화에 대비하여 농촌마을의 재생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소멸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한계마을정책’으로 마을재생도모 및 마을의 재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계마을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상태의 마을을 의미한다. 일본은 이러한 한계마을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농교류, 정주대책 마련, 지역산업 육성, 생활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재편의 방안으로 행정적 재편, 기능적 재편, 공간적 재편 등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한계마을 등 향후 소멸의 가능성이 높은 마을과 실제 소멸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한계마을과 같은 농촌지역 실태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도입 및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1990년대 들어 농정의 방향이 농업에서 농촌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에 있어 합리적인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즉, 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에 있어 농촌지역의 실태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와 사업 실효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한계마을 등 향후 소멸의 가능성이 높은 마을과 실제 소멸되고 있는 마을도 일반마을과 동일하게 정책적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가칭)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농촌 마을의 과소화·고령화 등의 실태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칭)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충남(또는 시군) 농촌마을의 커뮤니티 및 정책투입 현황 등 한계마을 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주목적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바람직한 추진 방안(한계마을정책)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과소화·고령화되고 소멸되어 가는 농촌마을을 어떻게 재생 또는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남도 3 농혁신정책의 새로운 정책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마을정책은 한계마을에 국한하지 않고 非한계마을이 한계마을로 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그리고 한계마을 및 소멸마을은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한 주된 연구내용으로서 ①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고찰, ② ‘한계마을정책’의 개념 정립, ③ 충남 농촌마을의 일반현황 분석, ④ 한계마을 관련 농촌마을 실태조사 및 분석, ⑤ 한계마을정책 추진방안 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고찰

농촌지역의 과소화·고령화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과제, 그리고 정책적 대응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현황을 점검하고, 일본의 한계마을정책 등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분석하여 충남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② ‘한계마을정책’의 개념 정립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한계(限界)마을’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계마을정책’의 목적과 나아가야 할 기본원칙 등의 개념을 재정립한다. 그리고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계마을을 구분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충남에 적용 가능한 기준(안)을 설정한다.

③ 충남 농촌마을의 일반현황 분석

2012년도 충청남도 농촌마을 자원조사결과와 농어업총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농촌마을의 실태를 분석하고, 충남 농촌마을의 존속과 소멸의 관점에서 개략적인 미래모습을 제시한다. 그리고 충남 농촌마을의 일반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세조사 분석틀을 설정한다.

④ 한계마을 관련 농촌마을 실태조사 및 분석

1~3개 시·군 또는 농촌마을의 개략적인 유형을 중심으로 20개 내외의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설정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사례지역의 실태조사 및 주민의식조사 등을 실시한다. 특히, 조사

에서는 농촌마을의 정책투입 현황도 함께 조사한다.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농촌마을의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농촌마을의 유형화를 통하여 한계마을의 특징을 정리하여 한계마을에 어떠한 정책적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 한계마을정책과제를 도출한다.

⑤ (가칭)한계마을정책 추진방안 제시

이상의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한계마을 및 한계마을정책의 개념을 재정립한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에서 적용 가능한 (가칭)한계마을정책의 방향과 정책(안)을 제시하고, 충청남도 농촌마을의 소멸과 재편이라는 측면에서의 논의의 근거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연구방법

① 현장밀착형 연구

현장방문 및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태 및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한다.

② 관련주체 참여 및 협력 연구

농어촌 주민,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참여에 의한 세미나, 워크숍, 자문회의 등의 개최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전문가 및 국외(일본 등) 전문가와의 협력연구를 통한 국내·외 정책 및 사례조사·분석을 실시한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고찰

1. 마을의 개념 및 기능

1) 마을의 개념¹⁾

마을의 등장은 인간이 삶의 방식을 떠돌기에서 머물기로 바꾸면서 부터이며,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것은 농업혁명 이후의 일이다(김형국, 2002).

‘마을’의 사전적인 의미는 ①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②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의 두 가지를 뜻한다. 마을과 관련된 영어의 용어로는 ‘settlement’, ‘village’, ‘hamlet’, ‘community’ 등이 있는데, 전자의 맥락은 ‘village’와 유사하다. ‘village’는 집단화된 정주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hamlet’ 보다 큰 개념으로 인구 수백에서 수 천명 정도의 규모로,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없으면 ‘hamlet’이라 하고, 교회가 있으면 ‘village’로 지칭한다. 그리고 ‘settlement’는 단순한 인간의 정주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village’보다 협의적 개념이다.

〈표 2-1〉 마을 관련 용어의 비교

구분	hamlet/settlement	village	community
공간적 범위	몇 가구	소규모	소규모
주요초점	가구	물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상호작용)

또한, 후자의 개념은 ‘community’와 유사하다. ‘마을’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역성, 사회적 상호작용 및 공동의 유대라는 세 요소로 구성된,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지닌 공동체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며(이종창, 2010), 지역(area 또는 region)이라는 용어가 물리적인 지역적 범주를 의미하는 반면, 마을(neighborhood)은 물리적인 범주보다는 인근 지역에 거주

1) 2011년 충남발전연구원 전략과제 “충청남도 희망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추진모형 및 실천전략”의 7~9page의 내용을 인용함

하는 사람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주로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마을은 커뮤니티(communitiy)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호, 2007). ‘community’는 공통된 가치를 형성하게 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증대하게 하며, 일반적으로 ‘community’는 ‘household’보다 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마을은 물리적인 범위만을 뜻하지 않고 ‘마을사람들’ 또는 ‘마을공동체’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일정한 지역적 범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 ‘우리 이웃’이라는 공통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는 단위이며(이호, 2006), ‘집단을 이룬다는 것(공통요소)’, 그리고 ‘지리적 영역’, ‘공동의 유대감’,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마을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연결된 공간적 범위를 의미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동일한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는 사회적 범위도 의미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은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주민집단들로 정의할 수 있고(송인하, 2010), 영어의 ‘village’의 개념과 ‘community’의 개념을 포괄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village와 community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동질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가질 뿐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가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마을의 공간적 범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규정될 수 있으며, 예컨대 하나의 village 내에 수개의 community가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수개의 village를 포함하는 하나의 community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communitiy)의 구성요소로 Hillery(1995)는 크게 물리적 시설과 지리를 의미하는 ‘지역적 영역(area)’과 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일상생활, 혹은 정치적 영역에서 드러나는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일정한 시간을 두고 구성되는(constructed) 정체감으로써 ‘공통의 묶음(common ties)’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3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 2-2>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의 구성요소를 재구분해 보면, 크게 기능적인 요소와 영역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사람의 거주지로서의 ‘정주기능’, 다양한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생산기능’, 휴식·휴양과 함께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여가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적인 측면에서는 지리적 영역과 물리적 시설을 의미하는 ‘공간’과 공동체와 유대감의 요소가 되는 ‘사람’,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관계’로 구성된다.

〈표 2-2〉 커뮤니티의 구성요소(Hillery, 1995)

구분		주요한 차원	하위영역	공간적 범위
지역적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 - 환경 - 시설 - 형태 - 사회적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 거리, 밀도 - 기후, 토지, 식물 - 오픈스페이스, 상점, 여가, 작업장, 가정, 도로 - 디자인 유형, 쇠퇴정도 - 가족지위, 경제적 지위, 인종, 이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 Block face - 기능적 or 제한된 영역 - 도시의 구분된 영역 - 도시 - 지역 - 국가
사회적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과 시설사용 - 비공식적 상호작용 - 상호적, 비공식적 협동 - 공식조직 - 정치적 참여 - 지원환경 - 경제적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 여가, 작업장 - 근린활동, 이웃, 가족 - 도구적, 정보적 - 커뮤니티, 교회, 축제 - 투표, 회의 - 자선, 정부 	
인지적 정체성 (공통의 묶음, common ties)	지각과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적 정체성 - 인지적 지도화 - 정체성 - 상징적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짓기 - 지도화, 경계설정 - 인종, 사투리, 성, 연령, 의복 - 상징적 꾸밈, 영역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자 : 외부자 (거주자 : 근로자)
	정서적 (태도와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의 상징성 - 감정과 애착 - 평가 - 성기심 - 안전-방어 - 권한부여 - 장소의 외관 - 잠재적 내포/참여 - 정의적 - 공통가치 - 감정이입, 소속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의 고양 - 뿌리찾기 - 장소만족감, 평가 - 불만족 - 위협과 공포 - 통제정도 - 사회적 병리, 불만족 - 상호부조에 대한 기대 - 미와 질서 - 사람에 대한 영향과 응집 - 공통의 감정 	

2) 마을²⁾의 기능

농어촌 마을이 갖고 있는 기능에는 국토관리 기능, 생활환경 보전 기능, 지역문화 계승 기능, 지역산업 창출 기능 및 지역자치 기능 등 다양하다.

① 국토관리 기능: 마을자원 관리기능, 생산보완기능으로 생산환경, 마을자원의 유지·보전은 넓은 의미로 국토 전체를 관리한다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② 생활환경 보전 기능: 농산촌마을의 전통적 풍경(경관)은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 인해 형성된 것이다. 자연과 조화한 생활의 지혜를 통해 자연생태계와의 완충 지대로서의 역할을 해 옴으로써 농산촌마을 생활환경이 보전될 수 있다.

③ 지역문화 계승 기능: 그 지역만의 개성, 특성을 살린 독창적 문화는 지역주민에게 고향이라는 의식과 귀속의식을 배양하며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 삶의 만족을 향상시켜주는 큰 역할을 한다. 지역고유의 전통예능 등은 도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그 가치와 평가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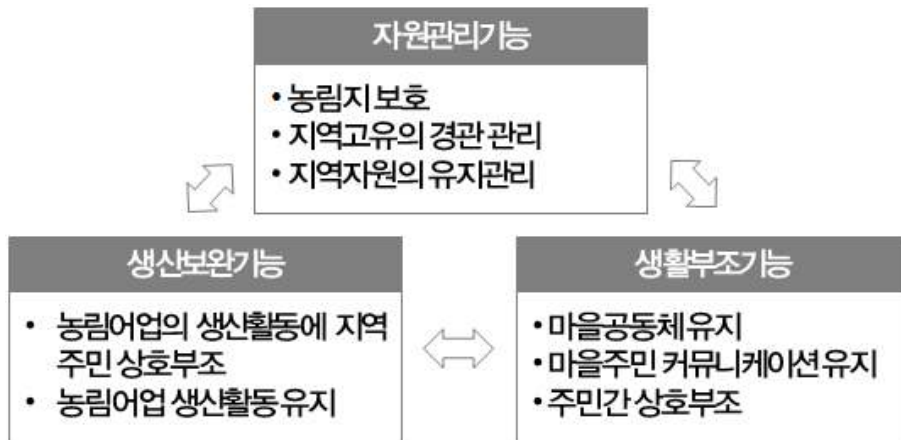
④ 지역산업 창출 기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교통의 발달에 따라 농촌지역주민의 행동과 정보가 광역화되면서 지역자원에 대한 평가도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자원이 재평가되면서 새로운 지역산업의 창출의 기회도 많아졌다.

⑤ 지역자치 기능: 농산촌지역은 합의형성의 토대로 지역자원 관리, 지역자치를 해 나가는 곳이 많다. 마을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마을 문제를 풀어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일본 총무성 집락관련 자료에는 마을기능을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협력하면서 생활을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생활부조(扶助) 기능'과 농림수산업 등 지역의 생산 활동을 유지, 향상을 위한 '생산보완 기능', 그리고 농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자원을 유지, 관리하는 '지역자원관리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라 설명하고 있다.

생활부조 기능을 형성하는 활동으로는 공동체 유지 활동, 커뮤니티 활성화 활동, 지역주민 친목도모 활동 등이 있으며, 생산보완기능과 관련된 활동은 품앗이, 공동퇴비 마련, 공동 농기계 사용 등이 있다. 또한 자연관리 기능은 농지, 지역고유의 경관, 문화 등을 유지, 계승하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2) 여기서 말하는 마을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연부락 또는 행정리 단위의 집락을 의미함



〈그림 2-1〉 마을의 3대 주요 기능

2. ‘한계마을정책’의 일반적 개념

한계(限界)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 의하면 ‘힘이나 책임, 능력 따위가 다다를 수 있는 범위, 어떤 지역과 지역을 구분 짓거나 가르는 선’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로 ‘한계에 다다르다’, ‘한계가 드러나다’ 등의 ‘임계(臨界)’의 의미로 ‘한계농지’, ‘한계기업’, ‘한계수입·비용’ 등의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한계(限界)마을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오노아끼라(大野晃)가 65세 이상 인구의 50%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³⁾유지가 한계에 달한 상태를 일컬어 제기된 용어이다. 오노아끼라(大野晃)는 또한 한계마을을 포함하여 마을의 한계화 정도에 따라 ‘존속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 ‘소멸마을’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표 2-3〉 한계화(限界化)에 따른 마을의 구분(大野晃, 2008)

마을 구분	기준	내용	세대구성
존속 마을	5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50% 이상	후계자가 확보되어 있고, 공동체의 기능을 차세대에 계승시키는 마을	젊은 부부세대 취학아동세대 후계자 확보세대
준한계 마을	5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50% 이상	현재는 공동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후계자 확보가 어렵고, 한계마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	부부만의 세대 준노인부부세대
한계 마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50% 이상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상태	노인부부세대 독거노인세대
소멸 마을	인구, 세대수 없음	완전히 무거주지가 되어, 마을이 소멸된 상태	-

한편, 오노아끼라(大野晃)는 마을이 존속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생산, 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공동체와 마을 구성원 간 협력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둘째는 젊은 부부세대, 취학아동세대, 후계자확보세대, 새로운 젊은 부부세대가 마을 내에서 끊이지 않고 주기적으로 순환되는 것이다.

3) 농어촌지역의 공동체 기능이란 생활적 기능과 생산적 기능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생활적 기능에는 마을축제 계승, 생활환경 유지, 주민자치회(총회)활동의 원활한 유지 등이 있으며 생산적 기능에는 농산물의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을 의미함

오니시다까시(大西隆)는 오늘날 농산어촌에서는 다면적(多面的)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3가지의 공동화(空洞化)에 의해 농산어촌지역 마을의 기능이 한계에 달한 상태를 한계마을이라고 정립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3가지의 공동화라는 것은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마을(공동체)의 공동화’를 의미한다. ‘**사람의 공동화**’라는 것은 마을인구 감소의 원인이 최근에 들어서 사회적 감소에서 자연적 감소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화가 진전되는 것과 동시에 새롭게 태어나는 인구도 줄어들면서 고령자의 사망에 의해 지역 내의 인구가 확실히 줄고 있는 현상을 뜻한다. ‘**토지의 공동화**’는 농림지의 황폐화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농업 후계자가 부족해짐에 따라 경작포기, 농지(산지)황폐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세대가 근근이 농업활동을 해 오면서 토지이용·관리를 유지해 왔으나, 고령은퇴농가가 급증하면서 농림지의 관리주체가 급감하고 있다. 특히 조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의 토지 공동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마지막의 ‘**마을(공동체)의 공동화**’는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처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마을 기능의 저하에 의해 정체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지역(마을)자원의 관리능력 저하, 공동생산, 판매 등 공동영농작업의 불가능, 마을의 전통 예능 계승능력 저하, 토지이용 관리능력 등이 현재의 마을 구성원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한계마을과 유사한 개념으로 ‘과소(過疎)마을’이 있다. 과소는 사전적으로 어느 지역의 인구가 지나치게 적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밀(過密)과 상대적인 어휘이다. 의미상으로 보면 과밀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지역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며, 일정 지역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다른 지역보다 적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결과론적 개념이다(정기환 외, 1993). 조준범(2009)은 과소마을을 과소화에 따른 일정한 시점에서의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마을의 규모와 밀도 등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사한 개념으로 ‘오지(奧地)마을’이라는 용어도 있다. 오지의 사전적 의미는 해안이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의 땅, 두메산골이라는 표현하기도 한다. ‘오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오지의 범위는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이라고 규정되어있다. 단, 여기서의 오지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면단위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과소마을’과 ‘오지마을’은 모두 넓은 의미의 한계마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한계마을이라는 범위 내에 ‘과소마을’, ‘오지마을’ 등이 있고, 이와 같은 개념으로 ‘낙후(新畧력)

지역' 또는 '개발촉진지역' 등과 함께 '고령마을', '공동화마을' 등이 있다.

한편, '정책'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정부나 정치 단체, 개인 등이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 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존의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계마을'의 개념을 정리하면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인하여 생활적 기능, 생산적 기능 등의 마을의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이라 할 수 있고, '한계마을정책'은 '한계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방침과 수단'으로 정의 할 수 있다.

※ 기타 한계마을 관련 구분기준 사례

1. 일본 법률상의 중산간지역 구분 기준

구 분	기 준 지 표
특정농산촌법에 따른 「특정 농산촌지역」	① 경사도 1/20 이상의 발면적이 전체 발면적의 50%이상, 단, 전체 발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의 33% 이상 ② 경사도 15° 이상의 논면적이 전체 논면적의 50% 이상, 단, 전체 논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의 33% 이상 ③ 임야율 75% 이상 (상기의 한 가지에 해당) ④ 15세 이상 인구에 있어 농림업 종사자 수의 비율이 10% 이상, 또는 총 토지면적에 있어 농림지 비율이 81% 이상
산촌진흥법에 따른 「진흥산촌」	① 임야율 75% 이상 ② 인구밀도 116명/km ² 미만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소지역」	① 인구감소율 25% 이상 ② 인구감소율 20% 이상으로 65세 이상 인구율 16% 이상 ③ 인구감소율 20% 이상으로 15세 이상 30세 미만 비율 16% 이하 (상기의 한 가지에 해당) ④ 재정력지수 0.44 이하

2. EU 회원국의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

		독 일	프랑스	영 국
대 상 지 역	산악 지역	① 표고 800m 이상 또는 ② 표고 600m 이상이고 경사도 18% 이상	① 표고 700m 이상(일부지역은 600m 또는 800m 이상) 또는 ② 경사도 20% 이상 등	없음
	보통 조건 불리 지역	① 농지평가지수 28 이하 ② 인구밀도 130명/km ² 이하 ③ 취업인구의 15% 이상이 농업에 종사	① 농용지 1ha 당 생산액이 전국평균의 80% 미만 ② 인구밀도가 전국평균의 50% 이하 ③ 취업인구의 15% 이상이 농업에 종사	① 목초지 면적이 농용지 면적의 70% 이상 ② 1인당 노동소득이 전국평균의 80% 이하 ③ 도시 등을 제외한 인구밀도 55명/km ² 이하 ④ 도시 등을 제외한 취업인구의 30% 이상이 농업에 종사

자료 : 일본농림수산구조개선국, 1999,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 검토회 자료집, p.63

3. 선행연구

1) 국내 연구동향

국내 연구에 있어 '한계마을'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전무하며, 유사한 개념으로 '과소화 마을', '낙후지역'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조준범(2009)은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과소화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장흥군을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의 과소화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소마을을 과소화에 따른 일정한 시점에서의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마을의 규모와 밀도 등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마을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과소 또는 과소화 관련 변수, 마을입지특성 변수, 마을생활환경수준 변수 등으로 나누어 총 21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과소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작여건(경지율, 임야면적율, 답면적율), 기초생활권 접근성(읍면소재지거리, 초등학교 및 중학교 거리), 마을표고, 지역중심접근성(주요도로거리, 군소재지거리), 읍면 순서로 나타나며, 과소화속도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정도는 지역중심접근성(주요도로거리, 군소재지거리), 경작여건(경지율, 임야면적율, 답면적율), 세대구성원 규모(세대당 인구 및 연평균 세대당인구증감율), 생활유지능력(연간생활비자력충당비율, 타지역 거주자녀수)의 순서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병기(2010)는 "농촌 과소화 실태와 전망" 연구에서 농촌 과소화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농촌과소화의 실제 모습을 전망해 보며, 농촌과소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오랜 기간 누적된 농촌의 과소화 및 노령화로 말미암아 최소한의 공동체 유지가 힘들 정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향후 10년 후면 사례 농촌마을의 경우 지금보다도 42% 더 줄어들고, 또 80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농촌 활성화 방향의 농촌정책 기조는 과소화 되고 노령화된 농촌 현실에 비추어 그 적합성과 효과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촌만의 한정된 시각으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즉, 많은 농촌마을들이 해체되는 모습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거듭나게끔 적극적인 농촌 지역사회 유지·관리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지, 또 아니면 급격한 해체 과정에서 오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농촌마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소극적 차원의 농촌지역사회 유

지·관리 방안을 모색하든지 등에 대한 정책 안목과 입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한경원(2012)은 "낙후지역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에서 유럽연합의 정책동향, 우리나라의 낙후지역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향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상당수 낙후지역이 인구 50% 이상이 고령인구가 되는 한계마을이 되고 공동체가 해체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를 고려한 개발전략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낙후지역 지역개발의 기본방향으로 ① 과거 낙후지역 개발은 국가가 주도하였으며 향후 하향식 접근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기획과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자원의 융·복합 상품화, 지역특화발전을 도모하고, ② 낙후지역은 국가 및 국민 통합적 접근의 정책을 처방하여야 하며, ③ 소규모 행정구역 단위의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는 효율성 저하, 지역 간의 소모적 경쟁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쉬우며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기능지역 단위에서 추구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④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융·복합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낙후지역 정책의 향후과제로 ① 낙후지역 개념 정립 및 선정지표 개선, ② 소득과 일자리 창출 강조, ③ 지역의 자구적 노력 강화, ④ 지역주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⑤ 재정 및 법률의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성주인 등(2012)은 "농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과 재정비 방향" 연구에서 농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 실태 및 관련 현행정책을 진단하고 농어촌 마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행정리)의 가구수가 20호 미만을 과소화 마을로 정의하였으며, 2005년에는 과소화 마을이 한 개 이상 분포하는 읍·면이 전체 읍·면 중 약 41%인 661개이었으나, 2010년에는 전체의 63%인 884개 읍·면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과소화가 진행되는 농어촌 마을의 상당수는 물리적 생활환경이 저하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을의 공동체 기능도 퇴조하고 있는 양상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① 장래 농어촌의 공간구조 변화 방향을 고려한 정책 투입이 이루어지도록 마을 정주 여건 고찰, ②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의 성격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 ③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기존 마을 재정비와 연계한 5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지를 보다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개발사업 내용 재편, ② 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민의 귀농·귀촌 수요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빈집과 기존 농가 주택의 적극적인 리모델링·활용 방안 모색, ③ 마을 재정비 확대 추진을 위해 기존 법제도 등에 어떠한 제약이 있을지 분석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검토, ④ 귀농·귀촌인의 공동체 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기여를 유도함으로써 약화되는 마을공동체를 보완할 새로운 농어촌 공동체 형성을 지원, ⑤ 중앙정부 자원에서는 농어촌 마을의 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창우(2013)는 "농어촌 과소화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특성별 유형분석 차별화 전략" 연구에서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 마을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어촌 마을의 과소화,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농어촌마을에서는 주거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소득원 개발이나 작목반 구성 등의 움직임도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주거여건 개선사업과 수익사업 등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농어촌 과소화 마을을 노령인구와 노후주택비율 등의 특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과소화 마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개별 마을 차원으로만 과소화 마을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인접 농어촌 과소화 마을과의 연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국외(일본) 연구동향

일본의 '한계마을'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재생', '재편', '소멸'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재생'이라는 관점은 고령화·과소화 되고 있는 마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재생시켜야 하는 관점으로, 이와 관련하여 오노아키라(大野晃, 2005)는 한계마을은 유역사회권의 기본단위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역사회창출 및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현실화와 구체적 대책 필요함을 이야기 하고 있고, 다카오카즈요시(高野和良, 2005)는 한계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집단의 재구축에 의한 사회연대의 재생', '고령자들의 생애현역 사회 만들기'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오모리켄이치(大森研一, 2005)는 마을의 소멸은 곧 사회적 손실을 의미하며 한계마을 소멸의 최종적 피해자는 마을주민임으로 반드시 재생되어

야 함을 역설하였으며, 오타키리도쿠미(小田切徳美, 2009)는 농산촌 재생은 생활의 시점에서 재생을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지역의 힘으로 만들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오니시다카시 등(大西隆, 2011)은 한계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관광을 도입하여 유지하고 지역의 이주자에 의한 개발과 공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재편’의 관점은 고령화·과소화 되고 있는 마을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재편시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모리타히데노리(森田秀則, 2008)는 마을단독의 재생은 어려운 실정이며 여러 마을로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의 재편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재편의 방법으로는 ‘행정적 재편’, ‘기능적 재편’, ‘공간적 재편’을 들고 있다. ‘행정적 재편’은 인근 마을과의 통합·합병이나 중심마을로 한계마을의 흡수, 행정구역의 변경 등 행정적 측면에서 재편성을 도모하는 방법이고, ‘기능적 재편’은 중심마을의 기능 강화, 마을간의 협력에 상호보완 대책 마련, 가까운 초등학교를 단위로 복수의 마을이 새로운 광역적 조직을 형성하여 마을기능을 분담, NPO에 의한 기능보완 등 기능적 측면에서 재편성을 도모하는 방법이며, 마지막으로 ‘공간적 재편’은 마을의 소멸 등에 의한 마을의 공간적 이전 및 재편성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셋째, ‘소멸’의 관점은 이미 한계에 달한 마을은 과감하게 소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관점으로, 이와 관련하여 하야시나오키(林直樹, 2010)는 농촌지역활성화는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모든 마을을 전부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힘을 보전하면서 정해진 자원을 선택과 집중하는 ‘철퇴(撤退)의 농촌계획’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최근 일본은 농림수산성(2005)과 국토교통성(2006)을 중심으로 한계마을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전체 마을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50% 이상인 마을은 7,878개 마을로 전체의 12.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이미 기능유지가 곤란한 마을은 2,917개 마을(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 이내에 소멸가능성이 있는 마을은 423개 마을, 소멸가능성이 높은 마을은 2,220개 마을로 모두 2,643개 마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농촌개발기획위원회(2007)는 ① 마을 한계화의 요인과 과정, ② 한계화 되고 있는 마을의 지원 방법, ③ 마을 한계화의 억제전략, ④ 한계화 마을의 소멸전략 등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마을 한계화의 요인과 과정

○ 한계마을의 발생은 마을내부의 다양한 원인과 특징에 결부되어 나타나고, 인구 및 가구수,

고령화 등의 수치만 가지고 발생요인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o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인구와 가구수가 원래부터 적었던 마을이 거주자가 타지역으로 이주해 나감으로써 마을이 한계화에 이르게 되었으며,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에는 열악한 생활환경이 한계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됨.
- o 한계화의 과정을 보면 우선, '한계화 초기'에는 인구의 급감과 함께 마을기능이 일부 약화되지만 마을전체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한계화 중기'에는 인구가 더욱 감소하고 어느 단계 이후부터는 마을의 기능이 급격히 전면적으로 약화되며, '한계화 말기'에는 마을의 인구가 수 명 정도 되어 마을기능이 완전히 소멸됨.
- o **마을의 한계화에 있어 주목할 점**은 첫째, 마을기능의 약화에 있어 임계점이 존재한다는 것과 둘째, 마을의 기능은 인구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이미 상실되고 기능의 상실에서 인구의 완전 소멸까지는 비교적 장시간이 걸린다는 점임. 인구가 완전히 소멸된 후에는 간혹 외지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음.

② 한계화 되고 있는 마을 지원의 기본원칙 및 방법

- o 기본원칙 : 마을기능 저하의 '임계점'까지 최대한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단일의 지표로 한계마을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마을 주민에게는 마을이 분명하고 강한 애착이 있음.
- o 지원방법 1 : 주민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의한 지원 - 마을 구성원 스스로가 마을의 미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선택의 방향은 크게 '이전형(移轉型)', '단독형(單獨型)', '통합형(統合型)', '연합형(連合型)'이 있음.
 - 이전형(移轉型) : 기본적인 경우로 마을재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독형(單獨型) : 여러 마을의 연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통합형(統合型) : 여러 마을의 연계가 필요하고, 기존 조직(공동체)의 기능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합형(連合型) : 기존 조직(공동체)의 기능을 남겨두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여러 마을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o 지원방법 2 : 외부의 코디네이터에 의한 지원 - 마을의 자치기능이 상실된 경우 외부의 코디네이터에 의해 마을의 대책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코디네이터는 공무원, 농협직원, 대

학교수, 민간컨설팅회사 전문가 등이 있음.

③ 마을 한계화의 억제전략

o 기초생활환경의 유지 및 기반확충

- 의료, 복지, 교통, 안전, 정보통신 등의 각 분야에 있어 최저한의 기능유지는 기본이 되는 과제이며, 이는 귀농·귀촌 등의 인구유치의 기본 전략이기도 함.

o 활동범위의 광역화 및 협력적 문제해결

- 광역의 지역을 설정하여 그 가운데 다양한 그룹과 세대, 지역 외 인재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동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함.

o 토지자원이나 사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명확화

- 토지자원의 현황을 알고 있는 세대가 사망하기 전에 자원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소유권과 관리책임이 불명확한 토지나 사유재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서라도 이용권한을 집적·관리할 필요가 있음.

o 지역자원 관리의 효율화 : 조방적 공간관리의 모색

- 토지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조방적이고 이용의 효율적인 공간관리수법의 구축이 필요(에너지, 농작업 등)하며, 주택의 경우는 4계절 정주가 아닌 여름 등 계절적 이용을 적극 검토하고, 이러한 토지와 주택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활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유자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창구의 마련이 필요함.

o 관망하지 않은 행정의 자세

- 한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행정이 항상 예의주시하여 마을주민에게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동참할 필요가 있음.

o 농업의 기능 후퇴에 대응하는 대책마련

- '중산간지역직접지불제도'나 농지·수자원·환경보전대책 등 농업의 기능저하에 대응한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④ 한계화 마을의 소멸전략

- o 주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작성
 - 주민 스스로 장래에도 농업을 할 수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를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임.
- o '마을지킴이'를 고려한 정책추진
 - 마을 한계화 억제전략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마을 소멸이 진행될 경우, 남아있는 주민은 '마을지킴이'로서 삶의 질을 마지막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소멸시키는 방법도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o '마을지킴이'의 임무
 - 마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마을이 존속하고 있는 한 주민 합의에 의해 마을내 분포하는 농림지와 주택을 관리하고 마을이 축적하고 있는 지식과 재산을 보전하는 활동이 필요함. 또한, 마을을 구성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소멸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함.

4. 국내·외 관련 정책

1) 국내 관련 정책

우리나라의 국토발전전략은 크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의 3차원의 발전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권은 다시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유형별 지원은 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개편된 광역·지역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의 포괄보조금 사업에 근거하고 있다. 광특회계는 광역발전계정,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3개 계정에 6개 사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광역발전계정은 광역경제권 지원을 위한 시·도 간 연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각 부처가 지역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 지역개발계정은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분되며, 이중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성장촉진지역 등 기초생활권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신청한도(계속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표 2-4〉 광특회계 편성체계

계정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편성방식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시·도 자율편성사업	-	④시·도자율편성사업 * 기초생활권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시·군·구	②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⑤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부처직접편성			③부처직접 편성사업	⑥부처직접 편성사업

자료 : 기획재정부(2012), “2013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이러한 지원사업 중 한계마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하며(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7호), 총 70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 지원의 경우 ‘지역접근성시설지원’과 ‘성장기반시설지원’의 내역별로 지원했다. 먼저 지역접근성시설의 경우 관광휴양사업(리조트, 골프장, 스키장, 온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특화사업(화훼단지, 도예단지, 한우육성단지 등 소득기반 조성), 기반시설 설치(도로 등 접근교통망 시설,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원했다. 접근교통망, 소득기반 조성 등에 시·군별로 500억 원 내외를 지원했다.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성장촉진지역 내 중소기업에게 소득·법인세 50% 감면 등 세제혜택도 제공하였다. 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사항을 실시계획 승인으로 갈음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도 제공하였다. 성장기반시설지원의 경우,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08~17)에 따라 소득증대, 생활·생산기반시설 및 환경·복지시설 등을 지원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7개 시·군에 총 1,550억 원을 지원했다.(한경원, 2012)

또한, 특수상황지역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등의 지역을 말하며, 이중 접경지역은 15개 시·군이 해당된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지원의 경우 생활기반 구축, 지역소득 증대 및 경관 개선, 지역역량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까지 2,756억을 투자하였는데 종전의 도로 포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소득 창출 위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접경지역의 경우 접경 특성화 마을을 선정하여 개발모델과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에 주력하였다. 도서지역의 경우 섬이 가진 고유한 콘텐츠와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를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였다. 그리고 섬의 고유 자원과 주변 지역을 연계할 경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명품섬 Best 10’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2,884억원을 투

자하여 지역공동체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 기반구축과 지역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다(한경원, 2012).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은 여전히 지역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보다는 정주여건 인프라 확충 등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추진을 볼 수 있고, 또한 지역의 여건과 특성, 개발수요에 상당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성장 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지정되면 자구 노력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미리 정해진 국고보조율을 적용 받고 있어 지자체의 자구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한경원, 2012).

이 외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 한계마을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농산어촌지역은 전체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청년층의 도시로 이동 및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여 마을 공동화현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마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을 향상함과 더불어 기초생활수준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 유형으로는 중심기능강화를 위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어촌의 소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새로운 커뮤니티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사업, 열악한 생활기반과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마을은 어느 정도의 역량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되고 사업이 추진된다는 측면에서 과소화·고령화되고 침체된 한계마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일부 직접지불금제도(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경관보전직접지불 등)가 한계마을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으나 그 규모나 실적이 미미한 수준으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 한계마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부재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자원과 여건을 갖고 있는 농어촌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표 2-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유형 및 내용

구 분	세부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비 고
【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Ⅰ-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지역역량강화 지원가능 *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은 경관개선으로 분류 * 소득사업은 지양 ○ 지원조건(4년간, 국고 70%, 지방비 30%) - 100억 원 범위에서 사업성에 따라 차등지원 * 2013년부터는 면단위는 70억 원	<통합된 사업> ·소도읍육성사업 ·거점면소재지 정비사업
	【Ⅱ】 권역단위 종합정비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지역 역량 강화 중심 - 지역소득증대 지원가능 ○ 지원조건(5년간,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규모 : 권역규모에 따라 25억 원 ~70억 원 * 2013년부터는 25~50억 원	<통합된 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Ⅲ】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Ⅲ-1】 신규마을조성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 마을규모에 따라 30억 원 범위에서 지원	<통합된 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Ⅲ-2】 기존마을정비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지원조건 (국고 70%, 지방비 30%) - 실비기준지원(한도액 초과시 지방비 부담)	<통합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Ⅳ】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Ⅳ-1】 농촌생활환경 정비	○ 지원내용 - 종합정비(읍면소재지, 권역단위) 대상지역 이외지역에 개별단위로 지원하는 기반시설, 농어촌경관개선, 문화복지, 환경보전, 농어촌 체험시설, 농어촌생활 용수개발 등의 시설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 농촌생활 환경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통합된 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농색농촌체험마을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 ·살기좋은도시만들기사업 등
	【Ⅳ-2】 농업생산기반 조성	○ 지원내용 -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 개발 등의 농업생산 지원시설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통합된 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Ⅳ-3】 마을공동소득 창출 및 문화조성	○ 지원내용 - 마을공동소득창출, 마을공동문화조성 ○ 지원조건(2년,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규모 : 소득창출 5억원, 문화조성 2억원	<통합된 사업> ·없음 *2013년부터 신규시범사업

〈표 2-6〉 한계마을 관련 직접지불제도

구분	목적	대상	지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 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이고, 경지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 리, 도서지역은 읍·면지역 모 든 법정리	논·밭·원 50원/㎡, 초지 25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 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 여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 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 지급 - 경관협약 마을주민에 대한 경관보전활동 비용 지원	- 경관작물 170 만 원/ha, 준경관 작물 100만 원/ha - 마을경관보전 활동비 : 협약면 적에 비례하여 15만 원/ha

2) 국외 관련 정책

(1) 프랑스의 농촌재활성화지구(zone de revitalisation rurale)⁴⁾

농촌재활성화지구는 1995년 2월에 제정된 LOADT법에 의해 창시된 개념으로 농촌지역 중 인구밀도가 매우 낮아 사회경제적 개발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개발 우선 농촌지역(TRDP: Territoires ruraux de developpement prioritaires)’을 정의하고 이 중에서도 취약한 지역을 농촌재활성화지구(ZRR)라 명하였다.

농촌재활성화지구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인구 기준: 강통, 아롱디스망 혹은 EPCI에 속한 코뮌연합체로 인구밀도가 31명~33명/km²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사회경제적 기준⁵⁾: 상기의 인구 기준에 부합하면 다음의 세 가지 사회경제적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인구가 감소하였는가, ②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였는가, ③ 농업활동인구가 국가 평균의 2배(8.3%) 이상
- 제도 기준: 세금 부과와 자율성을 지닌 EPCI

농촌재활성화지구 선정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통해서 낙후 지역 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촌재활성지구 내 창업 혜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2014년까지 전액 또는 부분적 감면)
- 장인업 혹은 상인: 인구 2,000명 이하의 코뮌에서 기존 폐쇄한 장인산업 사업장을 다시 열거나 상업 부문의 새로운 사업장을 창업할 때 제정 보조
- 비상업 부문: 창업 시 이윤에 대한 세금 감면, 지방세 감면, 보건의료 부문 전문직의 경우 농촌재활성지구 내에서 함께 모여서 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할 경우 이윤에 대한 세금 감면
- 부동산 소유주: 국립 주거청의 지원을 받아 임대료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조, 수리한 사람은 토지세를 감면, 주택을 새로 건설하거나 리노베이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40% 감면
- 관광업 투자자: 관광 지구 내에 위치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를 주는 자에게 소득세

4) 본 내용은 「해외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성주인외,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집(R669) p. 41~55 원본 그대로 인용하거나 참고하였음을 밝힘

5) 사회경제적 기준은 강통 혹은 아롱디스망 단위로 조사. 인구밀도가 5명/km² 이하의 강통이나 아롱디스망에 속한 코뮌은 사회경제적 기준 부합 조건과 관계가 없이 농촌재활성화지구에 편입

를 할인해 줌.

2012년 12월 현재 13,082개의 코뮌이 농촌재활성화지구로 선정되었다. 이 숫자는 프랑스 전체 코뮌 수의 1/3 이상이며, 선정된 지구의 위상은 영구적, 임시, 조건부로 다양하다. 선정된 지구는 매년 국토개발관련 부서의 시행령으로 수정하고 있다.

(2) 일본의 과소화 대책사업

일본은 1960년대 이후의 고도 경제성장의 여파로 농산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젊은층 인구가 급속도로 이동하였다. 도시지역은 인구의 집중에 의한 과밀 문제가 발생한 한편, 농산어촌지역에서는 주민의 감소에 의해 지역사회의 기초적 생활 조건의 확보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이른바 과소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은 이러한 과소지역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70년 10년간의 한시법으로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⁶⁾’이 제정되었을 정도로 40여 년 전부터 농촌지역의 과소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후 10년마다 시대적 특성과 실정에 맞는 과소지역 대책법이 제정되어 왔다.

- 1970년~79년: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
- 1980년~89년: 과소지역진흥특별조치법
- 1990년~99년: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
- 2000년~09년: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이와 같이 일본 과소지역 시정촌, 관계 도도부현, 중앙정부는 4차례 걸쳐 제정된 과소대책입법하에서 서로 일체가 되어 시대에 대응한 과소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과소지역은 공공시설의 정비 수준 등에 있어 전국과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며 제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현저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진전, 장래의 전망이 불투명한 집락의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성주인 외 2012: 200)

한편 일본 과소지역은 안전한 식료나 물, 에너지의 공급, 국토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의 토대로 실효 기한의 6년간 연장하였다. 즉 과소지역 자립 촉진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0년 4월에 시행되었다.

6) 이 법률에서의 과소지역이란 연율 2% 넘게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지역사회의 기반이 변동하고, 생활수준 및 생산 기능의 유지가 곤란해지고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2010년도에 과소지역 시정촌이 실시한 과소 대책 사업의 사업 액수는 총액으로 약 1조 1,810억 엔이다. 이 중 소프트사업의 2010년도 실적액은 총사업 액수의 11.8% 정도이다.

분야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 통신 체계의 정비가 전체의 25.9%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 환경의 정비 23.6%, 산업의 진흥 19.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프트사업의 사업비를 분야별로 보면 고령자 보건 복지가 24.8%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의 진흥 24.4%, 교통 통신체계의 정비 16.6%, 의료의 확보 1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일본의 과소대책사업 실적(2009년)

구 분	총사업비 (백만 엔)	소프트사업비 (백만 엔)	소프트사업비 비율
산업의 진흥	229,038 (19.4%)	33,914 (24.4%)	14.8%
교통통신체계의 정비	305,710 (25.9%)	23,075 (16.6%)	7.5%
생활환경의 정비	278,293 (23.6%)	6,516 (4.7%)	2.3%
고령자 등의 보건복지	110,286 (9.3%)	34,437(24.8%)	31.2%
의료의 확보	67,370 (5.7%)	18,019(13.0%)	26.7%
교육의 진흥	152,525 (12.9%)	10,412(7.5%)	6.8%
지역문화의 진흥	12,525 (1.1%)	1,719(1.2%)	13.7%
집락 정비	10,156 (0.9%)	5,625(4.0%)	55.4%
그 외	15,095 (1.3%)	5,184(3.7%)	34.3%
총액	1,180,998 (100.0%)	138,901(100.0%)	11.8%

자료 : 성주인 외 2012. p.203.

일본의 경우 과소지역(한계집락)의 대책으로 크게 3가지 기본 방향이 있다.

첫째는 집락의 주변지화(周邊地化)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행정기관까지 거리가 먼 집락, 즉 지형적으로 말단에 위치하는 집락일수록 집락의 규모가 작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집락기능의 유지가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렇듯 조건이 매우 불리한 작은 집락의 공간적인 주변지화, 제도적인 주변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행정이 이러한 집락의 실정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집락기능의 유지 상황, 주민의

장래거주의향 등의 엄밀한 파악이 요구된다.

둘째는 집락 실정에 맞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집락은 지역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이며,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최저한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공간이다. 여기에서의 사회적 서비스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보, 생활환경기반의 정비, 식료품·생활필수품의 조달, 우편·금융서비스, 의료·복지 등의 생활지원서비스를 의미한다. 과소지역에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주변 집락과의 연대,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민간사업자, NPO(NGO)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집락기능의 통합 및 일상생활을 지탱해 주는 공공시설과 사회적 서비스의 집약화·복합화, 복수의 집락이 연대한 교통수송서비스의 제공, 민간 사업자에 의한 일상품판매의 순회서비스 등이 있다.

셋째는 주민참여의 집락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지와 참여에 의한 집락활성화에는 지역문화의 계승, 집락 경관의 보전, 지역축제의 계승 등이 있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지역 어드바이저를 집락에 파견해 집락 활성화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참고: 일본 과소지역 대책사업 사례

【고향 C&C모델 사업】

1. 사업목적: 과소지역 내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유휴시설 포함)을 활용(Create)하고 정비(Clearance)함에 따라 주민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며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
2. 사업내용: 기초지자체가 빈집 및 유휴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고 빈집의 소유자, 관련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활용, 정비계획을 수립
3. 사업대상시설: 숙박시설, 체험학습시설, 교육문화시설, 산업진흥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고령자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1. 사업목적: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과소지역에 고령자의 자주적 활동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고령자 중심의 생산·창작활동, 집회, 연수, 휴양 등이 가능한 다목적 시설 조성
2. 사업대상기준
 - 고령자의 자주적 활동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
 - 노인회 등에 의한 생산·창작활동, 연수, 집회, 휴양 등 고령자 중심의 다목적 기능을 하는 시설
 - 고령자 비율이 원칙적으로 10% 이상
 - 유사한 시설이 없는 지자체
3. 사업대상시설: 노인복지시설, 집회시설, 교양시설, 생산관련시설, 실습시설, 보건체육시설 등

【과소지역 집락재편 정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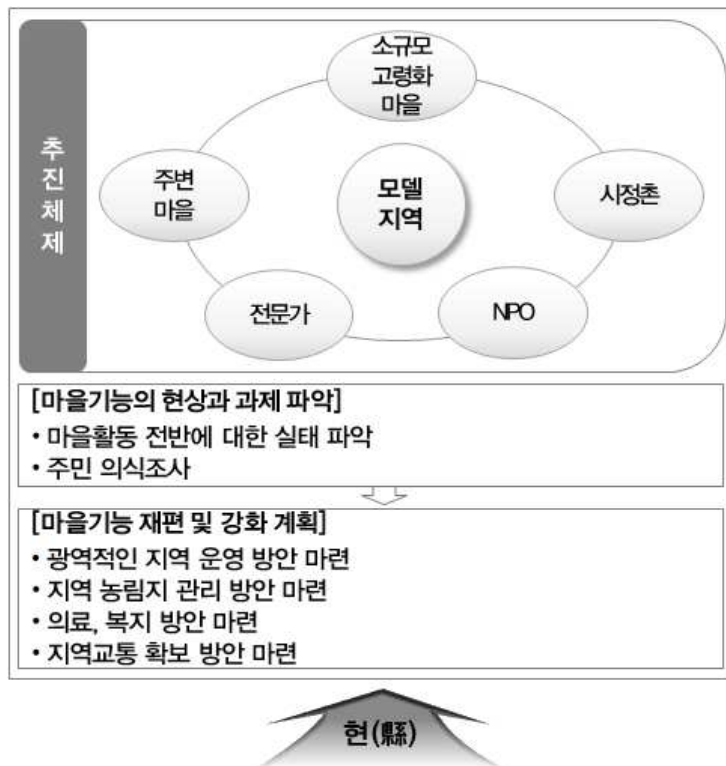
1. 사업목적: 과소지역에 속하며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의해 집락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집락이거나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확보가 어려운 집락 및 이러한 집락에 산재(散在)되어 있는 주거를 중심집락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등 집락을 재편
2. 사업내용:
 - 집락이전사업: 집락 전체를 중심 집락으로 이전
 - 오지마을 독거주택 이전사업: 중심집락과 동떨어진 독거주택 이전 사업
 - 정주촉진단지정비사업: 정주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일본 집락기능 재편 강화사업(오카야마현의 사례)

오카야마현의 집락기능 재편 강화사업은 과소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의해 휴경지 증가, 산림 황폐 및 생활의 최소 기초단위인 집락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지역사회의 활력 역시 저하된다는 위기의식을 배경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오카야마현은 단독으로 집락기능의 유지가 곤란한 소규모 고령화 집락이 존재하는 9개 집락을 모델로 선정하여 타 집락으로 집락 운영을 옮겨가는 집락기능 재편 강화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사업추진의 기본 방향은 ① 지역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② 집락기능에 대한 엄밀한 조사 분석, ③ 집락기능 재편·강화 계획 수립(지역주민 주도), ④ 단계적 시범사업 추진이다.

특히 집락기능에 대한 조사 항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생활기능으로 도로, 하수도 등 생활기반, 교통수단, 고령자 세대를 위한 돌보미 시스템 등이 그 예다. 둘째는 산업기능으로 일자리 확보, 특산품 개발, 농업소득 확보 등이 있으며, 셋째는 교류기능으로 지역주민간의 교류, 도시민과의 교류, 귀농·귀촌 촉진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 2-2〉 일본 집락기능 재편 강화사업의 예(오카야마현 사례)

(4) 도쿠시마 집락재생 프로젝트

도쿠시마(徳島)현의 경우 1,708개의 집락 가운데 한계집락이 606개로 전체 집락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계집락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60.7%로 무척 높다. 집락 세대수 평균을 살펴보면 한계집락의 경우 14.6세대로 전체 평균 32.7세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집락 평균 인구 또한 한계집락은 28.7명으로 전체 평균 79.4명의 1/3 수준이다.

도쿠시마현 한계집락이 안고 있는 과제로는 ① 지역을 이끌어 갈 리더 부족으로 집락 내에서 행해지는 공동작업, 행사가 곤란, ② 주요 산업이 1차 산업이 쇠퇴함으로써 집락 내 고용 창출의 어려움, ③ 인구가 감소하고 1차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산림도 황폐해짐에 의해 야생동물 피해가 급증, ④ 집락을 떠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빈집이 발생 집락 경관을 해침, ⑤ 농업 후계자의 감소에 의한 휴경지 및 황폐한 산림 증가, ⑥ 대중교통 수단이 열악해짐에 따라 생활·공공서비스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집락재생 프로젝트는 크게 '안전·안심의 확보', '지역자원의 활용', '인재확보·육성', '매력발신' 4개의 분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첫째, '안전·안심의 확보' 분야에서는 고령자 돌보미 시스템 구축, 일상생활 용품 구매 도움, 방재·자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지역자원의 활용' 분야에서는 새로운 지역 비즈니스 창출, 유흥자산 활용, 산림자원 활용, 관광·교류 추진, 특산물 개발·판매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인재확보·육성' 분야에서는 정보발신력이 있는 인재를 유치, 집락외부 응원단 구성 등 집락을 이끌어 갈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넷째, '매력발신' 분야에서는 사진전 등을 통한 집락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발신하거나 지역 문화, 전통예능을 활용한 이벤트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쿠시마 집락재생 프로젝트'는 집락재생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시책으로 '미래를 여는 웃음 가득찬 집락'이라는 비전을 설정 상기의 4개 분야로 나눠 다양한 세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그림 2-3 참조).

미래를 여는 웃음 가득찬 마을



도쿠시마 집락재생 프로젝트

〈그림 2-3〉 도쿠시마 집락재생 프로젝트 추진체계

〈표 2-8〉 도쿠시마현 집락재생 프로젝트 시책

분야	구분	시책		
(1)안전 · 안심 의 확보	고령자 돌보미 시스템	IT를 활용한 고령자 돌보미 네트워크 구축 돌보미 활동협력기관과의 연계		
	쇼핑 · 이동지원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약자 대책 시스템 주민 이동수단 확보 서비스 구축		
	방재 · 자치 강화	야생동물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다양한 주체에 의한 숲만들기 집락의 방재력 강화, 고립화 대책 마련 ICT를 활용한 자치회의 단결력 강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	ICT를 활용한 새틀라이트 오피스 ⁷⁾ 전개		
	유희자산 활용	빈집 활용이 가능한 운용시스템 전개 휴경지 재생 약선요리, 약초재배 보급 에너지의 지산지소 추진		
	산림자원 활용	다양한 주체에 의한 숲자원 활용		
(2) 지역자원의 활용	관광 · 교류 추진	옛집 활용을 통한 체재형 관광 추진 농가민박 추진 체험형 교육여행 추진 집락경관의 유지 관리 공중 무선랜 확대 커뮤니티카페 네트워크 추진		
	특산품 개발 · 판매 촉진	지역 특산품 개발, 판매 촉진 야생동물의 식육, 요리 활용		
	(3) 인재확보 · 육성	인재 확보	정보발신력 등을 소유한 인재 유치 귀농 · 귀촌자 지원체계 구축 지역활성화 협력대, 집락지원인 유치 농산어촌 보전, 활성화 촉진 집락의 외부 응원단 확보 전문가 등과의 인적지원 체계 구축 지역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인재 확보	
		인재 육성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진흥책 마련 지역리더 육성 특허 등을 활용한 인재 육성	
		(4) 매력발신	영상 발신	집락경관 등의 영상콘텐츠 축적 사진전 등을 통한 집락 매력 발신
			이벤트 발신	집락 특산품 한정 판매, 전시 판매 지역문화, 전통예능을 활용한 이벤트 개최

7) satellite office, 사원의 거주지에 가까운 도시 주변부(농촌지역)에 위치하면서, 본사와 정보 통신기기로 연결한 소규모 사무실

(5) 일본 총무성의 농산어촌 인재 지원 사업

① 지역력 창조 어드바이저 사업(地域力創造アドバイザー事業)

‘지역력 창조 어드바이저 사업’이란 과소화,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농산어촌지역에 역량을 갖춘 지방공공단체 직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지역인재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인재 네트워크에 등록된 자는 지역력 창조 어드바이저로서 농산어촌에 파견, 지역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2013년 6월 현재 지역인재네트워크에 등록자 수는 총 271명이며, 이 가운데 민간전문가가 237명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공공단체 직원이 21명, 관련단체(조직)가 13명 순이다.

실제로 어드바이저를 활용할 경우 지역별로 연간 10일 이상 활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여비, 사례금 등)는 특별교부세로 일정 금액 지급이 가능하다.

② 마을만들기 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

지방자치단체가 3대 도시권을 비롯하여 도시지역의 주민을 마을만들기 협력대로서 위촉하는 제도로 위촉된 협력대는 해당 농산어촌에 이주 주민등록 해야 한다. 마을만들기 협력대의 활동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농산어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보면, 수자원 보전·감시 활동, 환경보전 활동, 주민 생활지원 활동, 각종 마을 행사 지원 활동(마을축제, 전통예능 계승, 도농교류, 6차산업 등) 등이다. 협력대원에게는 생활비 등의 지원 명목으로 350만 엔(약 40백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③ 집락 지원원 제도(集落支援員制度)

해당 지역(마을)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인재를 집락지원원으로 위촉하여 마을의 상황파악, 실태조사, 주민들 간 화합 도모 등의 활동을 한다. 집락지원원에게는 220만 엔(약 25백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5. 소결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도출한 일반적인 한계마을의 개념은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인하여 생활적·생산적 기능 등의 마을의 기능 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한계마을정책은 한계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방침과 수단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외에 한계마을과 관련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마을을 구분하는 주된 기준으로는 고령인구비율과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2가지가 방법이 있다. 즉,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50% 이상인 마을과 가구수 20호 미만의 마을은 기존 연구와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주요한 정량적 기준이며, 이 외에도 표고 및 경사도, 인구감소를 및 인구밀도 등도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두 가지의 지표로 한계마을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볼 때, 한계마을 여부를 개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한계마을을 판단하는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마을의 한계화에 있어 사람·토지·마을(공동체)의 공동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접근성 역시 한계마을의 중요한 요인이 됨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오니시다카시(大西隆)가 이야기 하고 있는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마을(공동체)의 공동화가 우리나라 농촌 마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한계마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함께, 기초생활권이나 지역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한계마을의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계마을의 재생, 재편, 소멸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즉, 한계마을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재생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새로운 행정적·기능적·공간적인 재편의 방법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어차피 소멸될 마을을 바람직하게 소멸되는 방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소멸을 거론하기에는 정서적으로나 여러 상황에 비추어 시기상조의 감은 있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을의 미래를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조속히 마련될수록 마을의 한계화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중요한 열매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계마을에 직접 대응하는 정책과 사업이 부재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한계마을 실태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논의의 진행과 함께 과소지역 집락재편 정비 등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섯째, 한계마을 대응을 위해서는 행정, 주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마을의 한계화에 있어 결코 행정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무엇보다 마을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심각히 고민하고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지역사회는 한계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고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주체의 네트워크에 의한 대응이 필요하다.

〈표 2-9〉 이론적 고찰의 주요 결과

구 분	내 용	비 고
한계마을 정의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인하여 생활적·생산적 기능 등 마을의 기능 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	오노아끼라 (大野晃)
한계마을정책 정의	한계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방침과 수단	
한계마을 원인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마을(공동체)의 공동화	오니시다까시 (大西隆)
한계마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50% 이상인 마을	오노아끼라 (大野晃)
	가구수 20호 미만의 마을(과소화마을)	성주인 (2010)
과소화 영향요인	경작여건(경지율, 임야면적율, 답면적율), 기초생활권 접근성(읍면소재지 거리, 초·중학교 거리), 마을표고, 지역중심접근성(주요도로 거리, 군소재지 거리) 등	조준범 (2009)
한계마을 논쟁점	재생, 재편(행정적·기능적·공간적 재편), 소멸	일본
마을 한계화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두 가지 지표로 한계마을을 판단하기에는 무리 - 마을기능 약화에 각 마을별로 상이한 임계점 존재 - 인구소멸전 마을기능이 상실되고, 이후 완전한 소멸까지는 비교적 장시간 소요 	일본 (사)농촌개발 기획위원회 (2007)

제3장 충남 농촌마을의 현재와 미래

1. 자료의 수집

충남지역 농촌마을의 일반적인 모습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1년 12월 부터 2012년 1월 까지 이루어진 마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마을조사 자료는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농어촌 자원조사의 일환으로 16개 시군 4,544개 마을(행정리)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한 것이다. 당시 조사는 시군의 행정기관 및 일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실제 조사는 대부분 해당 마을의 이장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조사항목은 총 1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농촌마을 조사항목과 내용

항 목	세 부 내 용	단 위
인 구 수	2011년 현재의 마을인구	명
가 구 수	2011년 현재의 마을가구수	호
청장년인구수	2011년 현재 마을의 15~64세 인구	명
전입인구수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마을의 전입인구수	명
마을기금	마을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을기금	백만원
마을경제조직수	작목반, 연구회, 어촌·어업계 등의 주요 경제조직 수	개
마을경제조직 인원수	작목반, 연구회, 어촌·어업계 등의 주요 경제조직의 회원수	명
공동체수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마을내 공동체 조직의 수	개
마을리더수	이장, 새마을지도자, 추진위원회 등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마을의 리더수	명
주민교육 참여자수	최근 3년간 영농기술교육을 제외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주민의 수	명
마을방문객수	2010년 한해 동안 도농교류, 체험관광 등을 통해 마을을 찾은 방문객의 수	명
공공지원사업비	최근 5년간 공공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역개발사업비의 총액	백만원
자체추진사업비	최근 5년간 마을자체적으로 추진한 마을개발사업비의 총액	백만원
마을발전계획 수립여부	마을 자체적으로 수립된 문서화된 계획서	유/무

조사결과 천안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의 3,824개 마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마을자원조사 중에서 자료가 부정확한 12개 마을을 제외한 3,812개 최종적으로 DB로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에서 조사하여 구축한 농촌마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충남 농촌마을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충남 농촌마을의 일반적 모습을 찾기 위해서 우선 조사항목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요인분석은 농촌마을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농촌마을의 일반적 모습을 개별 변수별로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평균, 중위수, 최빈값, 표준편차, 사분위수 등을 분석하여 충남 농촌마을의 일반적 특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변수들이 충남 농촌마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2. 농촌마을의 구성요인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된 14개 항목 중에서 척도의 문제(명목척도 항목)로 요인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마을발전계획수립여부를 제외한 13개 변수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수행한 이유는 농촌마을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요인분석결과에 의하면, 고유 값이 1 이상인 요인이 총 4개 추출되었고, 전체 설명력은 63.22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구성요인을 5가지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추출된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요인은 인구수, 청장년인구수, 가구수, 전입인구수이고, 제2요인은 경제조직인원수, 경제조직수, 마을리더수, 주민교육참여자수, 제3요인은 자체추진사업비, 공공지원사업비, 제4요인은 공동체수, 마을기금, 그리고 제5요인은 마을방문객수 등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제1요인은 인구요인, 제2요인은 주민역량요인, 제3요인은 사업실적요인, 제4요인은 공동체요인, 그리고 제5요인은 도농교류요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유형화하거나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들 5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 농촌마을의 구성요인(요인분석)

구 분		요 인				
		1	2	3	4	5
인 구	인 구 수	.974	-.001	-.008	.006	.023
	청년인구	.970	-.004	-.010	.009	.026
	가 구 수	.939	.006	-.007	.012	.086
	전입인구	.646	-.028	.004	-.044	-.093
주민역량	경제인원수	.008	.831	.004	.113	.082
	경제조직	-.050	.828	.002	.154	.040
	마을리더수	.009	.484	.006	-.040	-.193
	교육참여자	-.003	.369	.144	-.272	.083
사업실적	자체사업비	-.005	.014	.779	.060	-.010
	공공사업비	-.006	.051	.741	.002	.004
공 동 체	지역공동체	-.014	-.001	-.083	.763	-.012
	마을기금	-.008	.094	.177	.582	.025
도농교류	방 문 객	.008	-.025	-.006	-.009	.970
고 유 값		3.197	1.819	1.187	1.010	1.004
설 명 력		24.592	13.993	9.131	7.767	7.719
누적설명력		24.592	38.585	47.715	55.483	63.202

3. 농촌마을 구성요인별 특성분석

1) 인구요인

충남지역 농촌마을의 인구요인을 인구수, 가구수, 청장년인구수, 그리고 전입인구수 등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지역 농촌마을의 평균 인구는 245.19명이고, 중위수는 147.00명, 최빈값은 120.00명이다. 그리고 최소인구는 6명이고, 최대인구는 6,443명이며, 표준편차는 371.49명이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인구는 일반적으로 120명에서 150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농촌마을에 따라 인구규모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에서 한계마을로 규정하고 있는 인구 50명 이하의 마을은 전체 가구의 약 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충남 농촌마을의 인구요인 특성

구 분		인 구			
		인구수	가구수	청장년 인구수	전입 인구수
단 위		명	호	명	명
평 균		245.19	107.10	155.66	44.02
표준편차		371.49	157.11	268.56	193.41
중 위 수		147.00	67.00	85.00	5.00
최 빈 값		120.00	50.00	52.00	0.00
분 위 수	100%	6,443.0	3,454.0	4,510.0	5,788.0
	99%	2,000.0	744.0	1,393.0	727.0
	95%	810.0	347.0	545.0	167.0
	90%	447.0	201.0	298.0	80.0
	75%	230.0	102.0	142.0	23.0
	50%	147.0	67.0	85.0	5.0
	25%	98.0	45.0	51.0	0.0
	10%	67.0	32.0	30.0	0.0
	5%	54.0	27.0	22.0	0.0
	1%	35.0	19.0	10.0	0.0
	0%	6.0	4.0	1.0	0.0

둘째, 충남 농촌마을의 평균 가구수는 107.10호이고, 중위수는 67.00호, 최빈값은 50.00호이다. 그리고 가구수의 최소값은 4호이고, 최대값은 3,454호이며, 표준편차는 157.1호이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가구수는 일반적으로 50호에서 60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농촌가구의 평균 인원이 2명이라고 가정할 때, 평균 인구규모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마을의 가구수는 인구와 동일하게 농촌마을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남 농촌마을의 평균 청장년인구수는 155.66명이고, 중위수는 85.00명, 최빈값은 52.00명이다. 그리고 청장년인구수의 최소값은 1명이고, 최대값은 4,5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일반적인 청장년인구수는 52명에서 85명이라고 할 수 있다. 청장년인구수도 농촌마을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충남 농촌마을의 평균 전입인구수는 44.02명이고, 중위수는 5.00명, 그리고 최빈값은 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입인구수의 최소값은 0.0명이고, 최대값은 5,788.0명며, 표준편차는 193.41명이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일반적인 전입인구수는 5명 이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입인구수 또한 인구와 동일하게 농촌마을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민역량요인

충남 농촌마을의 주민역량요인의 특성은 마을경제조직수, 마을경제조직인원수, 마을리더수, 주민교육참여지수 등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촌마을의 평균 마을경제조직수는 0.56개이고, 중위수와 최빈값은 0.0개이다. 그리고 마을경제조직의 최소값은 0.0개이고, 최대값은 20.0개이며, 표준편차는 1.08개이다. 한편 마을경제조직이 1개라도 있는 농촌마을은 전체 마을의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촌마을에는 마을경제조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농촌마을의 경제조직인원수는 평균적으로 11.64명이지만, 중위수와 최빈값은 0.0명이다. 그리고 마을경제조직인원수의 최소값은 0.0명이고, 최대값은 390.0명, 표준편차는 27.71명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촌마을에는 마을경제조직인원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마을경제조직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약 25%의 농촌마을에서 경제조직인원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농촌마을의 마을리더는 평균 5.84명이고, 중위수는 5.0명, 최빈값은 4.0명이다. 한편 마을리더의 최소값은 0명이고, 최대값은 62.0명, 그리고 표준편차는 3.35명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촌마을에는 4~6명의 마을리더가 있고, 농촌마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농촌마을의 주민교육참여지수는 평균 5.69명이지만, 중위수와 최빈값은 0.0명이다. 그리고 주민교육참여지수의 최소값은 0.0명이고, 최대값은 1,500.0명, 표준편차는 35.64명이다.

따라서 주민역량의 다른 변수에 비해서 주민교육참여자수는 농촌마을별로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촌마을의 경우 주민교육참여자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10% 정도의 마을에서만 주민교육참여자수가 있다고 하겠다.

〈표 3-4〉 충남 농촌마을의 주민역량요인 특성

구 분		인 구			
		마을경제 조직수	마을경제 조직인원수	마을 리더수	주민교육 참여자수
단 위		개	명	명	명
평 균		0.56	11.64	5.84	5.69
표준편차		1.08	27.71	3.35	35.64
최 빈 값		0.0	0.0	4.0	0.0
분 위 수	100%	20.0	390.0	62.0	1,500.0
	99%	4.0	130.0	12.0	100.0
	95%	3.0	61.0	11.0	30.0
	90%	2.0	38.0	11.0	8.0
	75%	1.0	12.0	8.0	0.0
	50%	0.0	0.0	5.0	0.0
	25%	0.0	0.0	3.0	0.0
	10%	0.0	0.0	2.0	0.0
	5%	0.0	0.0	0.0	0.0
	1%	0.0	0.0	0.0	0.0
	0%	0.0	0.0	0.0	0.0

3) 사업실적요인

충남 농촌마을의 사업실적은 크게 공공지원사업비와 자체추진사업비로 구분해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농촌마을이 추진한 공공지원사업비는 평균적으로 251.83백만 원이지만, 중위수와 최빈값은 0.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지원사업비의 최소값은 0.0백만 원, 최대값은 150,000.0백만 원, 표준편차는 3,282.41백만 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는 공공지원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없고, 약 25%의 농촌마을에서 공공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하겠다.

둘째, 농촌마을이 추진한 자체추진사업비는 평균 11.68백만 원이지만, 공공지원사업비와 동일하게 중위수와 최빈값은 0.0백만 원이다. 그리고 자체추진사업비의 최소값은 0.0백만 원, 최대값은 279.41백만 원, 표준편차는 297.41백만 원이다. 따라서 전체 농촌마을의 약 5%만이 자체추진사업비가 있고, 대부분의 농촌마을은 자체추진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마을공동체요인

마을공동체요인은 마을공동체수와 마을기금으로 구분해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마을공동체를 살펴보면, 농촌마을의 마을공동체는 평균적으로 7.51개이고, 중위수와 최빈값은 3.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최소값은 0.0개, 최대값은 444.0개이고, 표준편차는 28.87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마을에는 대부분 3개 정도의 마을공동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0%의 농촌마을에서는 마을공동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촌마을의 마을기금은 평균 23.95백만 원이고, 중위수는 7.0백만원, 최빈값은 0.0백만 원이다. 마을기금의 최소값은 0.0백만 원이고, 최대값은 4,000.0백만 원, 표준편차는 120.95백만 원이다. 따라서 농촌마을에는 대체적으로 7.0백만 원 정도가 마을기금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마을기금이 없는 마을이 10%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도농교류요인

농촌마을의 도농교류의 지표로는 마을방문객수를 사용하였다. 농촌마을의 마을방문객수는 평균 1,384.00명이지만, 중위수와 최빈값은 0.0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을방문객수의 최소값은 0.0명, 최대값은 1,000,000.0명, 표준편차는 23,361.19명이다. 따라서 마을방문객수는 농촌마을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 90% 정도의 농촌마을에서는 마을방문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충남 농촌마을의 사업실적·마을공동체·도농교류요인 특성

구 분		사 업 실 적		마 을 공 동 체		도농교류
		공공지원 사업비	자체추진 사업비	마을 공동체수	마을 기금	마을 방문객수
단 위		백만 원	백만 원	개	백만 원	명
평 균		251.83	11.68	7.51	23.95	1,384.00
표준편차		3,282.41	279.41	28.87	120.95	23,361.19
최 빈 값		0.0	0.0	3.0	0.0	0.0
분 위 수	100%	150,000.0	15,000.0	444.0	4,000.0	1,000,000.0
	99%	3,260.0	100.0	150.0	320.0	10,000.0
	95%	413.0	8.0	5.0	67.0	250.0
	90%	208.0	0.0	4.0	40.0	0.0
	75%	86.5	0.0	3.0	20.0	0.0
	50%	0.0	0.0	3.0	7.0	0.0
	25%	0.0	0.0	2.0	1.0	0.0
	10%	0.0	0.0	0.0	0.0	0.0
	5%	0.0	0.0	0.0	0.0	0.0
	1%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6) 분석결과의 종합

충남 농촌마을의 특성을 인구, 주민역량, 사업실적, 마을공동체, 도농교류의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충남 농촌마을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요인 측면에서 볼 때, 충남 농촌마을의 인구수는 120명~150명 내외, 가구수는 50~67가구 내외, 청장년 인구수는 52명~85명, 그리고 전입인구수는 5명 이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마을 인구요인의 특성은 개별 농촌마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민역량요인 측면에서 볼 때, 충남 농촌마을에는 마을경제조직이 없고, 그 결과 마을

경제조직인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을리더의 경우 평균적으로 4~6명이 있지만,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는 주민교육참여자수가 없다고 하겠다. 한편 주민역량요인은 개별 농촌마을에 편차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실적요인 측면에서 볼 때, 충남 농촌마을은 대부분 공공지원사업비와 자체추진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사업실적은 농촌마을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 농촌마을에만 사업추진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6〉 충남 농촌마을의 일반모습

구 분		일반적 농촌마을	마을별 편차	비 고
인구 요인	인 구	120명 ~ 150명	매우 큼	50명 이하는 전체 마을의 5% 수준임.
	가 구 수	50호 ~ 60호	큼	27호 이하는 전체 마을의 5% 수준임.
	청장년인구수	52명 ~ 80명	매우 큼	전체 마을의 1%는 청장년인구가 없음.
	전입인구수	5명 이내	매우 큼	전체 마을의 25%는 전입인구가 없음
주민 역량	마을경제조직수	없음	낮음	전체 마을의 25%만 마을경제조직이 있음.
	마을경제조직인원수	없음	보통	전체 마을의 25%만 마을경제조직인원수가 있음.
	마을리더수	4~6명	낮음	마을리더가 없는 경우는 전체 마을의 10% 수준임.
	주민교육참여자수	없음	보통	전체 마을의 10%만 주민교육참여자수가 있음.
사업 실적	공공지원사업비	없음	매우 큼	전체 마을의 25%만 공공지원사업비 있음.
	자체추진사업비	없음	매우 큼	전체 마을의 5%만 자체추진사업비 있음.
마을 공동체	마을공동체수	3개	보통	전체 마을의 10%는 마을공동체가 없음.
	마을기금	7백만 원	보통	전체 마을의 10%는 마을기금이 없음.
도농 교류	마을방문객수	0명	매우 큼	전체 마을의 90%는 마을방문객수가 없음.

넷째, 마을공동체요인 측면에서 볼 때, 마을공동체수는 평균 3개 정도가 있고, 마을기금은 7백만 원 정도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을공동체수는 농촌마을별로 편차가 크지 않지만, 마을기금은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도농교류요인 측면에서 볼 때, 충남 농촌마을의 마을방문객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을방문객수는 농촌마을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 농촌마을의 구성요인 중 농촌마을별로 편차가 큰 것은 인구요인, 사업실적요인, 도농교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역량요인과 마을공동체요인은 농촌마을별로 편차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주제인 한계마을을 구분하는 변수로는 상대적으로 편차가 큰 인구요인과 최소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마을공동체요인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역량요인과 사업실적요인, 그리고 도농교류요인은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 낮거나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즉 이들 요인을 한계마을의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다수의 농촌마을이 한계마을로 구분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제4장 한계마을 관련 농촌마을 실태조사 및 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및 방법

본 장에서는 충청남도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제 한계마을 관련 조사·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한계마을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논의하였던 한계마을의 기준을 재점검하여 우리나라 특히 충남의 농촌마을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점검하고 또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한계마을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정책적 투입실태와 수요가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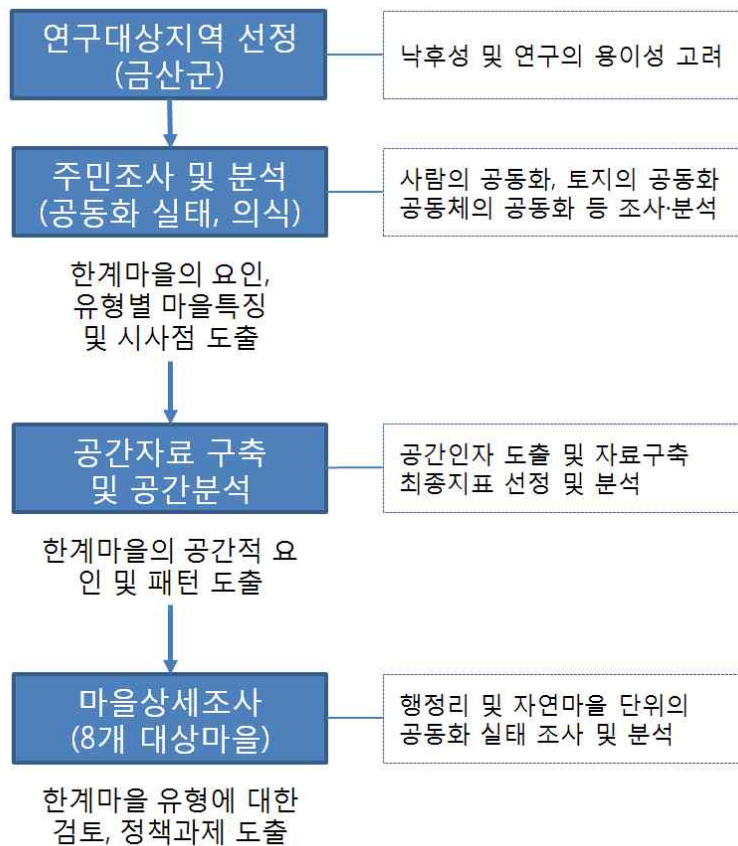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 금산군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금산군은 충남 남동부에 위치하는 기초자치단체로 일반 시·군에 비해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연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한계마을정책 연구에 최적의 지역이라 판단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조사는 주로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결과의 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50명과 고령인구비율 50%를 기준으로 과소고령마을, 과소비고령마을, 비과소고령마을, 비과소비고령마을의 4가지 유형을 설정하였다.

세부조사로는 우선 금산군의 전체 마을(행정리) 이장을 대상으로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 실태와 기타 정책투입 현황과 주민의식 실태에 대한 주민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구 및 고령인구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고 한계마을을 구분하는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별 마을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금산군 전체의 공간자료를 구축하여 한계마을 관련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간자료 구축 및 분석은 역시 한계마을(인구와 고령화)에 미치는 공간적 요인과 패턴을 찾아내고 유형별 마을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실제 금산군의 일부 마을(자연마을)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마을은 4가지 유형 중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뿐만 아니라 비과소고령마을과 비과소비고령마을도 대상마을로 선정하여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자연마을단위에서의 한계마을정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등을 조사·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설문조사 및 공간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의 검증과 함께 한계마을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한계마을의 특징 및 정책과제, 그리고 한계마을정책의 방향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림 4-1〉 한계마을 관련 마을조사 개요

2) 한계마을 유형화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한계마을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실태를 한계마을과 비한계마을로 구분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계마을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학술적·정책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농촌마을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마을 유형화의 목적은 첫째, 선행연구에서 구분하고 있는 한계마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실제 농촌마을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둘째, 선행연구의 구분기준이 한계마을 적용에 타당한지 검증하는데 있다.

일본의 경우 한계마을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50% 이상을 한계마을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에서는 20가구 이하를 과소화마을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수수 대신 거주인구 50명을 적용하고, 또한 65세 이상 인구비율(고령인구비율) 50%를 적용하여 농촌마을을 <그림 4-2>과 같이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그림 4-2> 참조).

즉, 인구규모를 중심으로 거주인구가 50명을 초과하면서 고령인구비율이 50% 이하인 유형은 비과소비고령마을, 고령인구비율 50%를 초과하는 유형은 비과소고령마을로 분류하고, 마찬가지로 거주인구가 50명 이하이면서 고령인구비율이 50% 이하인 유형을 과소비고령마을, 고령인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유형은 과소고령마을로 분류하였다.

		인구규모	
		50명 초과	50명 이하
고령인구비율	50% 이하	비과소비고령마을	과소비고령마을
	50% 초과	비과소고령마을	과소고령마을

〈그림 4-2〉 농촌마을의 유형화

물론, 과소와 비과소, 고령과 비고령의 4가지 농촌마을로 유형화한 것은 본 연구의 가정이며 한계마을을 유형화한 것은 아다. 즉, 아직 어떤 농촌마을이 한계마을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림 4-2>과 같은 농촌마을의 4가지 유형별로 그 특성을 분석해서 우리나라에서 한계마을의 범주를 재설정하고자 한다.

상기와 같은 인구규모와 고령인구비율을 기준으로 금산군의 254개 농촌마을을 유형화할 경

우, 과소고령마을은 15개 마을, 과소비고령마을은 8개 마을, 비과소고령마을은 156개 마을, 그리고 비과소비고령마을은 75개 마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마을의 유형별 분포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특정 읍·면에 특정 유형의 농촌마을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75.3278$, prob=0.0001). 즉, 과소고령마을은 제원면(33.3%)과 남일면(20.0%), 진산면(20.0%) 많이 분포되어 있고, 과소비고령마을은 제원면(37.5%)과 군북면(25.0%)에, 그리고 비과소비고령마을은 금산읍(34.7%)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과소고령마을은 10개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4-1〉 농촌마을 유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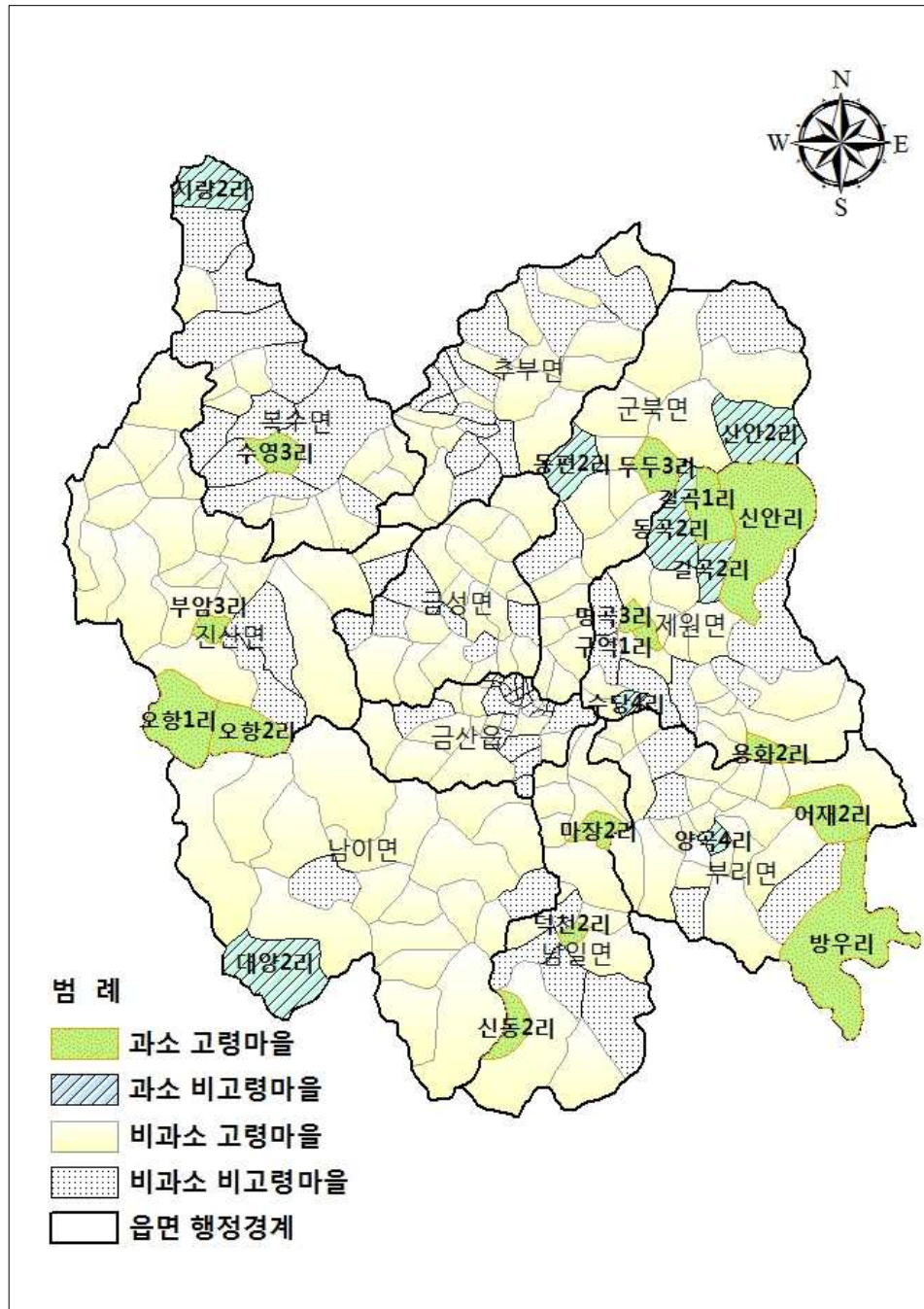
(단위: 마을(행정리)수, %)

구 분	전 체	과소고령마을	과소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전 체	254 (100.0)	15 (100.0)	8 (100.0)	156 (100.0)	75 (100.0)
금산읍	39 (15.4)	0 (0.0)	0 (0.0)	13 (8.3)	26 (34.7)
금성면	23 (9.1)	0 (0.0)	0 (0.0)	17 (10.9)	6 (8.0)
제원면	28 (11.0)	5 (33.3)	3 (37.5)	14 (9.0)	6 (8.0)
부리면	28 (11.0)	2 (13.3)	1 (12.5)	21 (13.5)	4 (5.3)
군북면	20 (7.9)	1 (6.7)	2 (25.0)	15 (9.6)	2 (2.7)
남일면	19 (7.5)	3 (20.0)	0 (0.0)	12 (7.7)	4 (5.3)
남이면	20 (7.9)	0 (0.0)	1 (12.5)	17 (10.9)	2 (2.7)
진산면	27 (10.6)	3 (20.0)	0 (0.0)	21 (13.5)	3 (4.0)
복수면	23 (9.1)	1 (6.7)	1 (12.5)	11 (7.1)	10 (13.3)
추부면	27 (10.6)	0 (0.0)	0 (0.0)	15 (9.6)	12 (16.0)

주: $\chi^2=75.3278$, df=27, prob=0.0001

〈표 4-2〉 금산군 농촌마을의 유형구분

유형	읍면	해당 마을 (행정리)
과소 고령 마을 (15)	제원	구억1, 길곡1, 명곡3, 신안, 용화2
	부리	방우, 어재2
	군북	두두3
	남일	덕천2, 마장2, 신동2
	진산	부암3, 오항1·2
	복수	수영3
과소 비고령 마을 (8)	제원	길곡2, 동곡2, 수당4
	부리	양곡4
	군북	동편2, 산안2
	남이	대양2
	복수	지랑2
비과소 고령 마을 (156)	금산	상2, 상옥2·4·5, 신대1, 아인1·2, 양지1, 읍지1·2, 중도7, 하옥2
	금성	대암, 도곡1·2, 두곡2, 마수1·2, 상가1, 양전1·2·3, 의총2, 파초2, 하류1·2, 하신1·2, 화림1
	제원	구억2, 금성1·2, 대산1·2, 동곡1, 명곡1, 수당1·2, 용화1, 저곡1·2, 제원1, 천내3
	부리	관천, 불이1·2, 선원2, 수통2, 신촌1·2·3, 양곡1·2·3, 아래1, 예미1·2, 창평1·2·3, 평촌1·2, 현내1·2
	군북	내부1·2·3, 동편1, 두두1·2, 보광, 산안1, 상곡1, 외부1, 조정, 천을, 호티1·2·3
	남일	덕천1·3, 마장1·3, 상동1·2, 신동1, 신정1, 신천1, 초현1, 황풍1·2
	남이	건천1·2, 구석1·2, 대양1, 매곡1, 상금, 석동1·2, 성곡1·2, 역평1, 하금1·2·3, 흑암1·2
	진산	교촌1·2, 두지1·2, 막현, 만악2·3, 묵산1·2, 부암1·2, 석막, 엄정, 읍내1·2·3, 지방1·2·3, 행정1·2
	복수	곡남1·2·3, 구례1·2·3, 다북1, 신대2, 용진1·2·3
	추부	마전1·2·5·7, 비례1, 서대1·2, 성당2, 신평2, 요광2·3, 용지1·2, 자부, 장대2
비과소 비고령 마을 (75)	금산	상1·3·4·5·6·7·8·9·10, 상옥1·3, 신대2, 아인3, 양지2, 중도1·2·3·4·5·6·8·9·10, 하옥1·3·4
	금성	두곡1, 상가2, 양전4, 의총1, 파초1, 화림2
	제원	명곡2, 명암, 수당3, 제원2, 천내1·2
	부리	선원1·3, 수통1, 현내3
	군북	상곡2, 외부2
	남일	신정2, 신천2, 읍대, 초현2
	남이	매곡2, 역평2
	진산	만악1, 삼가1·2
	복수	다북2, 묵소, 백암1·2·3, 수영1·2, 신대1·3, 지랑1
	추부	마전3·4·6·8·9, 비례2, 성당1, 신평1, 요광1, 장대1, 추정1·2



〈그림 4-3〉 금산군 농촌마을의 유형별 분포

2. 농촌마을 주민의식 조사 및 분석

1) 조사 및 분석개요

우리나라의 한계마을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충남 금산군을 사례로 하여 농촌마을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금산군의 254개 마을(행정리)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촌마을의 조사기간은 2013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 까지 총 15일간 수행하였고, 설문조사는 개별 마을별로 조사자가 방문하여 이장을 대상으로 한 대면인터뷰 조사로 수행되었다.

조사결과 금산군 254개 마을에 대한 농촌마을의 현황자료가 확보되었다. 본 연구가 한계마을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은 개별 농촌마을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일본의 경우 한계마을을 인구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그리고 공동체의 공동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 토지, 공동체의 3가지 관점에서 농촌마을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외에 농촌마을에서 추진된 각종 공공지원사업과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우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거주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비율(고령인구비율)’을 기준으로 이 두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인구의 많고 적음과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정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는 주로 주민인식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한 마을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가설검증은 유의수준 0.05%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관련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인구규모와 고령인구비율을 기준으로 과소고령마을, 과소비고령마을, 비과소고령마을, 비과소비고령마을의 4가지로 농촌마을을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4가지 농촌마을로 유형별로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의 차이가 있는지를, 그리고 일반적인 마을특성과 마을정책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유형별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χ^2 -test와 분산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산분석의 경우 사후검증을 위해서 duncan-test를 수행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유의수준 0.05%에서 수행하였

다.

2) 일반적 특성

(1) 응답자의 일반특성

조사대상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체 응답자의 95.7%는 남자이고, 여자는 4.3%에 불과하다. 이는 농촌마을의 4개 유형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직업도 대부분 농업(91.3%)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 또한 농촌마을의 4개 유형별로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본 조사의 응답자의 성별과 직업은 동일하다고 하겠다.

〈표 4-3〉 성별과 직업

(단위: 명, %)

구 분		전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전 체		254 (100.0)	15 (100.0)	8 (100.0)	156 (100.0)	75 (100.0)
성 별	남	243 (95.7)	14 (93.3)	7 (87.5)	151 (96.8)	71 (94.7)
	여	11 (4.3)	1 (6.7)	1 (12.5)	5 (3.2)	4 (5.3)
직 업	농 업	232 (91.3)	15 (100.0)	8 (100.0)	149 (95.5)	60 (80.0)
	상 업	11 (4.3)	0 (0.0)	0 (0.0)	4 (2.6)	7 (9.3)
	서비스업	5 (2.0)	0 (0.0)	0 (0.0)	2 (1.3)	3 (4.0)
	없 음	5 (2.0)	0 (0.0)	0 (0.0)	1 (5.3)	4 (5.3)
	기 타	1 (0.4)	0 (0.0)	0 (0.0)	0 (0.0)	1 (1.3)

주: 성별 $\chi^2=2.1452$, df=3, prob=0.5428

직업 $\chi^2=18.9447$, df=12, prob=0.0889

조사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9.19세이고, 해당 농촌마을의 거주기간은 평균 46.13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마을의 4개 유형별로 볼 때, 연령과 거주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개 농촌마을 응답자의 평균 연령과 거주기간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는 60세 전후 이고, 거주기간은 46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표 4-4〉 연령 및 거주기간

구 분	전체 (평균)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F값 (prob)
연령(세)	59.19	60.13	57.38	58.73	60.13	0.75 (0.5226)
거주기간(년)	46.13	49.87	40.63	46.65	44.91	0.49 (0.6917)

(2) 농촌마을의 일반특성

실제 거주인구를 중심으로 기타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 4-5)과 같다. 인구수와 가구수는 0.902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고령인구비율 -0.429, 방문객수 0.265, 소득수준 0.269, 휴경지 비율 0.133 등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외의 변수는 모두 ± 0.2 이하의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한편, 상관성이 낮아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공동체수, 도농교류수, 투자된 사업비는 인구수와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특이한 결과를 보였다.

〈표 4-5〉 인구와 기타 변수간의 상관관계

	가구수	고령인구 비율	전입 인구	방문객수	인구 변화	소득 수준	휴경지 비율
상관 계수	0.902	-0.429	0.017	0.265	0.202	0.269	0.133
유의 확률	0.000	0.000	0.789	0.000	0.001	0.000	0.033
	휴경지 변화	공가수	공동체수	공동체 활동수	도농 교류수	공동체 활동변화	사업비
상관 계수	0.136	-0.074	-0.022	-0.122	-0.112	0.076	-0.037
유의 확률	0.030	0.242	0.721	0.053	0.075	0.229	0.559

인구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구수 이외에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표 4-6〉 인구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상수		-.352	.725
가구수	.894	27.087	.000
고령비율	-.008	-.255	.799
전입인구	.019	.636	.525
방문객수	.000	.007	.994
인구변화	.001	.022	.982
소득수준	.049	1.480	.140
휴경지비율	-.005	-.162	.872
휴경지변화	-.026	-.796	.427
공가수	-.019	-.606	.545
공동체수	.002	.077	.939
공동체활동수	.027	.862	.390
도농교류수	-.007	-.217	.828
공동체활동변화	-.009	-.274	.784
사업비	-.005	-.160	.873
수정된 R ² : 0.808 / F : 76.814 / 유의확률 : 0.000			

또한, 고령인구비율을 중심으로 기타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령인구비율과 인구수는 -0.429, 가구수는 -0.458, 소득수준 -0.339, 휴경지변화 -0.206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외의 변수는 모두 ± 0.2 이하의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한편, 마찬가지로 상관성이 낮아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공동체수, 도농교류수는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 특이한 결과를 보였다.

〈표 4-7〉 고령인구비율과 기타 변수간의 상관관계

	인구수	가구수	전입 인구	방문객수	인구 변화	소득 수준	휴경지 비율
상관 계수	-0.429	-0.458	-0.085	-0.168	-0.247	-0.339	-0.089
유의 확률	0.000	0.000	0.177	0.007	0.000	0.000	0.158
	휴경지 변화	공가수	공동체수	공동체 활동수	도농 교류수	공동체 활동변화	사업비
상관 계수	-0.206	0.089	0.002	0.141	0.065	-0.111	-0.092
유의 확률	0.001	0.156	0.007	0.024	0.300	0.077	0.202

고령인구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수, 소득수준, 사업비만이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나머지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인구비율이 높을수록 가구수와 소득수준이 감소하고, 휴경지의 비율은 더욱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구수와 고령인구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부분의 독립변수와 의 유의성을 찾기가 힘이 들었고, 이는 마을마다 인구수와 고령인구비율을 결정하는 마을의 특징이 모두 상이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고령인구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상수		4.983	.000
인구	-.036	-.284	.777
가구수	-.314	-2.444	.015
전입인구	-.049	-.795	.427
방문객수	-.010	-.162	.871
인구변화	-.047	-.646	.519
소득수준	-.211	-3.276	.001
휴경지비율	.065	.989	.324
휴경지변화	-.134	-2.081	.038
공가수	.014	.225	.822
공동체수	.004	.058	.954
공동체활동수	.040	.676	.500
도농교류수	.095	1.509	.133
공동체활동변화	-.108	-1.637	.103
사업비	-.006	-.093	.926

수정된 R² : 0.274 / F : 6.958 / 유의확률 : 0.000

3) 사람의 공동화

(1) 인구 및 고령화

① 인구

금산군 농촌마을의 평균 인구는 200.82명이고, 가구수는 89.82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마을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의 경우, 과소고령마을은 32.53명, 과소비고령마을은 42.75명, 비과소고령마을은 134.15명, 그리고 비과소비고령마을은 390.0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과소비고령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농촌마을은 인구규모가 소규모라고 평가할 수 있다($F_{값}=14.59$, $prob=0.0001$). 그리고 가구수를 살펴보면, 과소고령마을은 24.13호, 과소비고령마을은 23.50호, 비과소고령마을은 65.96, 그리고 비과소비고령마을은 159.67호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과소비고령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농촌마을의 가구수도 소규모라고 할 수 있다($F_{값}=20.21$, $prob=0.0001$).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농촌마을의 4개 유형 중에서 비과소비고령마을은 인구와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인 것에 반해, 그 외 3개 농촌마을은 인구와 가구의 규모가 소규모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비과소고령마을의 경우도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에 비해 인구와 가구의 규모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9〉 인구

구 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F값 (prob)
인구(명)	200.82	32.53 ^b	42.75 ^b	134.15 ^b	390.03 ^a	14.59 (0.0001)
가구 수(호)	89.82	24.13 ^b	23.50 ^b	65.96 ^b	159.67 ^a	20.21 (0.0001)

② 고령화

농촌마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살펴보면, 65세 인구는 평균 82.69명이고, 전체 마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농촌마을의 4개 유형별로 세분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과소고령마을은 25.73명, 과소비고령마을은 15.88명, 비과소고령마을은 86.81명, 그리고 비과소비고령마을은 92.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과소비고령마을과 비과소고령마을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반면,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F_{값}=7.05$, $prob=0.001$). 즉 농촌마을의 인구규모가 클수록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인구도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과소고령마을은 80.22%, 과소비고령마을은 36.70%, 비과소고령마을은 67.03%, 비과소비고령마을은 30.13%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소고령마을의 고령화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과소비고령마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소비고령마을과 비과소비고령마을은 고령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_{값}=197.30$, $prob=0.0001$). 따라서 농촌마을의 인구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고령화율이 낮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표 4-10〉 고령화

구 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F값 (prob)
65세 이상 인구수(명)	82.69	25.73 ^b	15.88 ^b	86.81 ^a	92.64 ^a	7.05 (0.0001)
65세 인구의 비중(%)	55.95	80.22 ^a	36.70 ^c	67.03 ^b	30.12 ^c	197.30 (0.0001)

③ 빈집

최근 농촌마을에서 빈집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금산군의 농촌마을에는 평균 3.91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4개 농촌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소고령마을은 5.20호, 과소비고령마을은 2.25호, 비과소고령마을은 4.24호, 비과소비고령마을은 3.15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개 농촌마을 유형별로 빈집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_{값}=1.63$, $prob=0.1827$).

그러나 농촌마을의 가구수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촌마을의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마을의 빈집 비중은 7.60%이지만, 과소고령마을은 22.40%, 과소비고령마을은 10.25%, 비과소고령마을은 7.53%, 비과소비고령마을은 4.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빈집 수는 4개 유형별로 차이가 없지만, 가구수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소고령마을은 빈집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과소비고령마을과 비과소고령마을, 그리고 비과소비고령마을의 빈집 비중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F_{값}=19.99$, $prob=0.0001$). 그러므로 빈집의 비중은 농촌마을의 인구규모에 따라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1〉 빈집 수 및 빈집 비중

구 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F값 (prob)
빈집 수(호)	3.91	5.20	2.25	4.24	3.15	1.63 (0.1827)
가구 수 대비 빈집 비중(%)	7.60	22.40 ^a	10.25 ^b	7.53 ^{bc}	4.52 ^c	19.99 (0.0001)

(2) 인구변화 및 향후 전망

① 전입인구

최근 귀농귀촌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5년간 농촌마을로 이주한 전입인구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촌마을별로 최근 5년간 이주한 전입인구는 10명 미만이 7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4개 농촌마을에서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chi^2=18.7214$, $prob=0.3735$). 따라서 농촌마을의 4개 유형별로 전입인구의 차이가 없고, 대부분 농촌마을에서 10명 미만이 외부로부터 이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최근 5년간 전입인구

(단위: 마을수, %)

구 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전 체	229 (100.0)	12 (100.0)	6 (100.0)	145 (100.0)	66 (100.0)
10명 미만	163 (71.2)	12 (100.0)	5 (83.3)	102 (70.3)	44 (66.7)
10명~50명 미만	59 (25.8)	0 (0.0)	1 (16.7)	40 (27.6)	18 (27.3)
50~100명 미만	3 (1.3)	0 (0.0)	0 (0.0)	2 (1.4)	1 (1.5)
100명 이상	4 (1.8)	0 (0.0)	0 (0.0)	1 (0.7)	3 (4.6)

주: $\chi^2=19.7214$, $df=9$, $prob=0.3735$

② 방문객 수 및 방문목적

농촌마을의 연간 방문객 수는 100~1,000명 미만이 40.1%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이 1,000명 이상(24.0%), 50~100명 미만(15.8%), 그리고 50명 미만(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마을의 4개 유형별로 구분해 볼 때, 방문객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chi^2=15.0195$, $prob=0.0904$).

한편 농촌마을의 방문목적은 대부분 가족, 친지, 출향인의 방문(68.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주변지역 방문을 목적으로 한 단순방문(25.2%), 도농교류 및 체험관광(6.3%) 등으로 농촌마을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목적은 4개 농촌마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모든 마을에서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과 단순방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과소고령마을의 경우 다른 3개 마을에 비해서 도농교류 및 체험관광을 위한 방문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31.9273$, $prob=0.0002$).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농촌마을의 방문객 수는 농촌마을의 4개 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반면, 방문목적에 있어서는 농촌마을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소고령마을의 경우 다른 농촌마을에 비해서 관광목적에 위한 방문 비중이 높다고 하겠다.

〈표 4-13〉 방문객 수 및 방문목적

(단위: 마을수, %)

구 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전 체		254 (100.0)	15 (100.0)	8 (100.0)	156 (100.0)	75 (100.0)
방문 객 수	50명 미만	40 (15.8)	3 (20.0)	2 (25.0)	24 (15.4)	11 (14.7)
	50~100명 미만	51 (20.1)	3 (20.0)	2 (25.0)	35 (22.4)	11 (14.7)
	100~1,000명 미만	102 (40.1)	7 (46.7)	4 (50.0)	67 (43.0)	24 (32.0)
	1,000명 이상	61 (24.0)	2 (13.3)	0 (0.0)	30 (19.2)	29 (38.7)
방문 목적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	173 (68.1)	11 (73.3)	6 (75.0)	121 (77.6)	35 (46.7)
	주변지 방문을 목적으로 한 방문	64 (25.2)	2 (13.3)	2 (25.0)	24 (15.4)	36 (48.0)
	도농교류, 체험관광 일반관광	16 (6.3)	2 (13.3)	0 (0.0)	10 (6.4)	4 (5.3)
	기 타	1 (0.4)	0 (0.0)	0 (0.0)	1 (0.6)	0 (0.0)

주 방문객수 $\chi^2=15.0195$, df=9, prob=0.0904

방문목적 $\chi^2=31.9273$, df=9, prob=0.0002

③ 마을인구 전망 및 소멸가능성

향후 농촌마을의 인구전망에 있어서 전체 인구규모가 서서히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41.7%이고, 현재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30.7%이다. 따라서 농촌마을 인구는 장기적으로 다소 감소하거나 현재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4개의 농촌마을의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5.4890$, prob=0.0127). 우선 과소고령마을과 비과소고령마을은 앞으로 서서히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과소비고령마을과 비과소비고령마을은 유지 혹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과소비고령마을과 비과소비고령마을은 농촌마을의 인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향후 마을의 소멸가능성에 대해서는 81.5%가 소멸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마을의 4개 유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8.1937$, prob=0.0052). 즉 과소고령마을은 다른 3개의 마을유형에 비해서 향후 10년 이후에 소멸할 가능성에 있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농촌마을은 소멸가능성이 낮은 반면, 과소고령마을은 사회적 인구증가가 없을 경우 향후 10년 이후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4〉 마을인구 및 소멸가능성

(단위: 마을수, %)

구 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전 체		254 (100.0)	15 (100.0)	8 (100.0)	156 (100.0)	75 (100.0)
마을 인구 전망	급속히 감소	5 (2.0)	1 (6.7)	1 (12.5)	2 (1.3)	1 (1.3)
	서서히 감소	106 (41.7)	8 (53.3)	3 (37.5)	77 (49.4)	18 (24.0)
	현재규모 유지	78 (30.7)	3 (20.0)	1 (12.5)	46 (29.5)	28 (37.3)
	서서히 증가	64 (25.2)	3 (20.0)	3 (37.5)	30 (19.2)	28 (37.3)
	급속히 증가	1 (0.4)	0 (0.0)	0 (0.0)	1 (0.6)	0 (0.0)
마을 소멸 가능성	향후 5년 이내	1 (0.4)	0 (0.0)	0 (0.0)	1 (0.4)	0 (0.0)
	향후 10년 이내	1 (0.4)	0 (0.0)	0 (0.0)	1 (0.4)	0 (0.0)
	향후 10년 이후	19 (7.5)	3 (20.0)	0 (0.0)	13 (8.3)	3 (4.0)
	소멸가능성이 전혀 없음	207 (81.5)	6 (40.0)	6 (75.0)	126 (80.8)	69 (92.0)
	잘 모르겠음	26 (10.2)	6 (40.0)	2 (25.0)	15 (9.6)	3 (4.0)

주: $\chi^2=25.489$, df=12, prob=0.0127

주: $\chi^2=28.1937$, df=12, prob=0.0052

④ 인구감소의 요인

농촌마을의 인구감소는 소득 및 일자리 감소(51.4%)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낙후된 기초생활 기반(14.4%)과 열악한 복지·의료·교육서비스(10.8%)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마을의 4가지 유형별로 구분해 보아도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chi^2=7.2505$, prob=0.9503). 따라서 농촌마을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4-15〉 인구감소의 요인

(단위: 마을수, %)

구 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전 체	111 (100.0)	9 (100.0)	4 (100.0)	79 (100.0)	19 (100.0)
낙후된 기초생활 기반	16 (14.4)	2 (22.2)	1 (25.0)	11 (13.9)	2 (10.5)
소득 및 일자리 감소	57 (51.4)	5 (55.6)	2 (50.0)	38 (48.1)	12 (63.2)
열악한 복지, 의료, 교육서비스	12 (10.8)	0 (0.0)	1 (25.0)	9 (11.4)	2 (10.5)
외지인의 마을 토지 소유	4 (3.6)	0 (0.0)	0 (0.0)	3 (3.8)	1 (5.3)
인근 거점지역(거점생활권) 으로부터의 접근성 불량	5 (4.5)	0 (0.0)	0 (0.0)	5 (6.3)	0 (0.0)
기 타	17 (15.3)	2 (22.2)	0 (0.0)	13 (16.5)	2 (10.5)

주: $\chi^2=7.2505$, df=15, prob=0.9503

⑤ 마을의 발전전망

향후 농촌마을의 발전전망에 대해서 전체 응답마을의 35.2%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32.7%는 현재 보다 약간 더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현재보다 농촌마을이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은 29.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마을의

4가지 유형에 따라 마을의 발전전망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chi^2=34.2321$, prob=0.0006). 즉 과소고령마을은 향후 현재보다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66.7%)이 지배적인 반면, 그 외 3개 농촌마을은 현재를 유지하거나 향후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향후 농촌마을은 급속한 쇠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구가 과소고령마을은 다른 농촌마을에 비해서 쇠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6〉 마을의 발전전망

(단위: 마을수, %)

구 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전 체	254 (100.0)	15 (100.0)	8 (100.0)	156 (100.0)	75 (100.0)
현재보다 매우 쇠퇴하고 침체될 것임	4 (1.6)	1 (6.7)	0 (0.0)	2 (1.3)	1 (1.3)
현재보다 약간 쇠퇴하고 침체될 것임	71 (28.0)	10 (66.7)	2 (25.0)	51 (32.7)	8 (10.7)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임	92 (36.2)	1 (6.7)	2 (25.0)	51 (32.7)	38 (50.7)
현재보다 약간 더 발전할 것임	83 (32.7)	2 (13.3)	4 (50.0)	50 (32.1)	27 (36.0)
현재보다 매우 발전하여 번성할 것임	4 (1.6)	1 (6.7)	0 (0.0)	2 (1.3)	1 (1.3)

주: $\chi^2=34.2321$, df=12, prob=0.0006

4) 토지의 공동화

(1) 소득원 및 소득수준

① 주요 소득원

농촌마을의 주요 소득원은 밭농사(37.8%)와 논농사(22.8%), 그리고 인삼·약초재배(2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4개 농촌마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우선 과소고령마을은 논농사(40.0%)와 밭농사(33.3%)의 비중이 높고, 과소비고령마을은 인삼·약초재배(50.0%)와 밭농사(37.5%)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과소고령마을은 밭농사(45.5%)와 인삼·약초재배(28.2%)의 비중이, 그리고 비과소비고령마을은 인삼·약초재배(30.7%)와 밭농사(22.7%)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과소고령마을과 비과소고령마을은 논농사와 밭농사가 주요 소득원인 반면, 과소비고령마을과 비과소비고령마을은 인삼·약초가 주요 소득원인 것으로 판단된다($\chi^2=39.4947$, prob=0.0024).

〈표 4-17〉 주요 소득원

(단위: 마을수, %)

구 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전 체	254 (100.0)	15 (100.0)	8 (100.0)	156 (100.0)	75 (100.0)
논농사	58 (22.8)	6 (40.0)	1 (12.5)	35 (22.4)	16 (21.3)
밭농사	96 (37.8)	5 (33.3)	3 (37.5)	71 (45.5)	17 (22.7)
과수, 원예작물 재배	6 (2.4)	0 (0.0)	0 (0.0)	3 (1.9)	3 (4.0)
인삼, 약초재배	74 (29.1)	3 (20.0)	4 (50.0)	44 (28.2)	23 (30.7)
축 산	1 (0.4)	0 (0.0)	0 (0.0)	0 (0.0)	1 (1.3)
기타 직업활동 통한 농외소득	14 (5.5)	1 (6.7)	0 (0.0)	3 (1.9)	14 (13.3)
기 타	5 (2.0)	0 (0.0)	0 (0.0)	0 (0.0)	5 (6.7)

주: $\chi^2=39.4947$, df=18, prob=0.0024

따라서 농촌마을의 주요 소득원은 인구 규모보다는 고령화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촌의 마을의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논농사의 비중이 높고, 반대의 경우에는 인삼·약초와 같은 특용작물의 재배가 높다고 하겠다.

② 소득수준

농촌마을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수준은 1천만 원 이하가 51.6%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36.6%), 2천만 원~3천만 원 미만(11.0%), 그리고 3천만 원~4천만 원 미만(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1천만 원 이하와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이 다수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농촌마을의 4개 유형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과소고령마을은 1천만 원 이하가 76.7%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소비고령마을과 비과소비고령마을은 1천만 원 이하와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이 많은 비중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비과소비고령마을은 다른 3개 유형에 비해서 2천만 원~3천만 원 미만(22.7%), 3천만 원~4천만 원 미만(2.7%)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가구당 연평균 소득수준

(단위: 마을수, %)

구 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전 체	254 (100.0)	15 (100.0)	8 (100.0)	156 (100.0)	75 (100.0)
1천만 원 이하	131 (51.6)	13 (76.7)	4 (50.0)	87 (55.8)	27 (36.0)
1천만 원 ~ 2천만 원 미만	93 (36.6)	2 (13.3)	3 (37.5)	59 (37.8)	29 (38.7)
2천만 원 ~ 3천만 원 미만	28 (11.0)	0 (0.0)	1 (12.5)	10 (6.4)	17 (22.7)
3천만 원 ~ 4천만 원 미만	2 (0.8)	0 (0.0)	0 (0.0)	0 (0.0)	2 (2.7)

주: $\chi^2=28.6930$, df=9, prob=0.0007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농촌마을의 4개 유형별로 가구당 연평균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8.6930$, prob=0.0007). 즉 과소고령마을은 1천만원 이하의 비중이 많고, 반대로 비과소비고령마을은 2천만 원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소비고령마을과 비과소고령마을은 2천만 원 이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촌마을의 유형별로 소득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주요 소득원의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가의 소득원은 농촌마을의 고령화율에 따라 상이하다고 하겠다.

(2) 휴경지

① 휴경지 비율

농촌마을에서 휴경지는 전체 농경지의 20% 미만인 76.8%로 나타났다. 그리고 20~40%인 농촌마을은 20.9%, 40~60% 미만인 농촌마을은 2.4%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촌마을의 휴경지는 전체 농경지의 20% 미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4개 농촌마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chi^2=35.0633$, prob=0.0001).

〈표 4-19〉 전체 농경지 중 휴경지 비율

(단위: 마을수, %)

구 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전 체	254 (100.0)	15 (100.0)	8 (100.0)	156 (100.0)	75 (100.0)
40~60%미만	6 (2.4)	3 (20.0)	0 (0.0)	2 (1.3)	1 (1.3)
20~40%미만	53 (20.9)	7 (46.7)	4 (50.0)	30 (19.2)	12 (16.0)
20%미만	195 (76.8)	5 (33.3)	4 (50.0)	124 (79.5)	62 (82.7)

주: $\chi^2=35.0633$, df=6, prob=0.0001

우선 과소고령마을의 경우는 휴경지의 비중이 20~40%가 46.7%로 가장 높고, 과소비고령마을도 20~40%가 50.0%이다. 반면 비과소고령마을과 비과소비고령마을은 20% 미만이 절대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휴경지의 비중은 인구규모의 관계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즉 과소마을은 휴경지의 비율이 20~40%가 주를 이루는 반면, 인구규모가 큰 농촌마을은 상대적으로 휴경지의 비중이 2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된다.

② 휴경지의 변화추이

휴경지의 과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51.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휴경지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38.6%)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휴경지는 과거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4개 농촌마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아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chi^2=20.7939$, prob=0.0535). 비록 과소고령마을은 다른 3개 유형의 농촌마을에 비해서 휴경지가 서서히 증가한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4개 농촌마을 모두 현재 수준의 유지 및 향후 증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농촌마을의 휴경지는 현재의 수준 혹은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휴경지가 급속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0〉 휴경지의 변화추이

(단위: 마을수, %)

구분	전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전체	254 (100.0)	15 (100.0)	8 (100.0)	156 (100.0)	75 (100.0)
급속히 증가	9 (3.5)	2 (13.3)	1 (12.5)	5 (3.2)	1 (1.3)
서서히 증가	98 (38.6)	7 (46.7)	3 (37.5)	68 (43.6)	20 (26.7)
현재수준 유지	131 (51.6)	4 (26.7)	3 (37.5)	73 (46.8)	51 (68.0)
서서히 감소	15 (5.9)	2 (13.3)	1 (12.5)	9 (5.8)	3 (4.0)
급속히 감소	1 (0.4)	0 (0.0)	0 (0.0)	1 (0.6)	0 (0.0)

주: $\chi^2=20.7939$, df=12, prob=0.0535

③ 휴경지 증가의 원인

농촌마을에서 휴경지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82.2%)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업소득 감소, 경작지 부족, 경작조건 악화 등은 휴경지 증가의 큰 원인으로 작동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촌마을의 4개 유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chi^2=9.9795$, prob=0.3521). 따라서 휴경지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촌마을의 인구 유지와 노동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4-21〉 휴경지 증가의 원인

(단위: 마을수, %)

구 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전 체	107 (100.0)	9 (100.0)	4 (100.0)	73 (100.0)	21 (100.0)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88 (82.2)	9 (100.0)	4 (100.0)	62 (84.9)	13 (61.9)
농업소득 감소	10 (9.4)	0 (0.0)	0 (0.0)	5 (6.9)	5 (23.8)
외지인의 토지소유로 인한 경작지 부족	6 (5.6)	0 (0.0)	0 (0.0)	4 (5.5)	2 (9.5)
자연재해, 환경변화, 접근성 불량으로 인한 경작 조건 악화	3 (2.8)	0 (0.0)	0 (0.0)	2 (2.7)	1 (4.8)

주: $\chi^2=9.9795$, df=9, prob=0.3521

5) 공동체의 공동화

(1) 마을공동체

① 마을공동체의 조직

농촌마을의 대표적인 마을공동체로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추진위원회, 연구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5가지 유형의 마을공동체 중에서 대부분의 농촌마을은 2.66개의 마을공동체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의 농촌마을유형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F_{값}=1.97$, $prob=0.1195$).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촌마을의 주요 마을공동체는 노인회(0.98)와 부녀회(0.9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추진위원회(0.40)이고, 청년회(0.29)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4개 농촌마을 유형별로 구분해 볼 때, 개별 마을공동체의 구성비중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과소비고령마을은 다른 3개 마을유형에 비해서 부녀회($F_{값}=6.34$, $prob=0.0004$)의 구성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4개 농촌마을의 유형별로 마을공동체의 조직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마을의 인구 규모와 고령화에 따라 공동체 조직에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2〉 마을공동체의 조직

구 분		전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F값 (prob)
마을공동체수		2.66	2.33	2.13	2.72	2.65	1.97 (0.1195)
구성 비중 (%)	노인회	0.98	0.93	1.00	0.98	0.97	0.51 (0.6725)
	부녀회	0.91	0.87 ^a	0.50 ^b	0.94 ^a	0.91 ^a	6.34 (0.0004)
	청년회	0.29	0.07	0.38	0.32	0.25	1.72 (0.1639)
	추진위원회	0.40	0.20	0.25	0.43	0.39	1.29 (0.2783)
	연구회	0.01	0.00	0.00	0.01	0.01	0.10 (0.9601)
	기타	0.08	0.27 ^a	0.00 ^b	0.04 ^b	0.12 ^{ab}	4.21 (0.0063)

② 마을공동체의 활동

농촌마을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농작업의 협력, 농기계의 공동사용, 마을토지·시설 공동관리, 마을안길 가꾸기·정비, 개인주택 공동정비, 마을잔치·공동행사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들 6가지 유형의 마을공동체 활동 중에서 농촌마을은 평균 1.50개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4개 농촌마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과소고령마을은 2.20개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과소비고령마을은 1.63개, 과소비고령마을은 1.51개, 비과소비고령마을은 1.32개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과소고령마을은 다른 3개 유형의 농촌마을에 비해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F_{값}=6.29$, $prob=0.0004$).

한편 마을공동체 활동의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활동 중 가장 활발한 것은 마을잔치·공동행사(0.88)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마을안길 가꾸기·정비(0.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마을공동체 활동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4개 농촌마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농작업의 협력과 농기계의 공동사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4개 농촌마을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마을토지·시설 공동관리($F_{값}=6.98$, $prob=0.0002$), 마을안길 가꾸기·정비($F_{값}=3.71$, $prob=0.0122$), 개인주택공동정비($F_{값}=3.37$, $prob=0.0192$), 마을잔치·공동행사($F_{값}=2.77$, $prob=0.0421$)의 경우 모두 과소고령마을이 다른 마을에 비해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3〉 마을공동체의 활동

구 분		전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F값 (prob)
공동작업수		1.50	2.20 ^a	1.63 ^b	1.51 ^b	1.32 ^b	6.29 (0.0004)
구성 비중 (%)	농작업의 협력	0.10	0.20	0.25	0.09	0.08	1.41 (0.2395)
	농기계의 공동사용	0.11	0.13	0.13	0.11	0.12	0.04 (0.9882)
	마을토지/시설 공동관리	0.04	0.27 ^a	0.00 ^b	0.03 ^b	0.04 ^b	6.98 (0.0002)
	마을안길 가꾸기/정비	0.33	0.60 ^a	0.63 ^a	0.33 ^{ab}	0.24 ^b	3.71 (0.0122)
	개인주택 공동정비	0.02	0.13 ^a	0.00 ^b	0.03 ^b	0.00 ^b	3.37 (0.0192)
	마을잔치/ 공동행사	0.88	0.87 ^a	0.63 ^b	0.92 ^a	0.84 ^a	2.77 (0.0421)
	기 타	0.01	0.00	0.00	0.01	0.00	0.42 (0.7405)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농촌마을 공동체 조직은 4개 농촌마을 유형별로 차이가 없으나, 그 활동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즉 과소고령마을이 그 외 3개 유형의 농촌마을에 비해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다양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2) 마을의 도농교류

농촌마을의 도농교류 프로그램은 1사1촌 자매결연, 농촌관광·체험학습, 주말농장, 농가민박 등 숙박, 농산물 직거래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농촌마을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종류는 평균 0.06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는 4개 농촌마을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값=1.09$, $prob=0.3547$).

〈표 4-24〉 마을의 도농교류

구 분		전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F값 (prob)
도농교류 프로그램수		0.06	0.09	0.10	0.06	0.05	1.09 (0.3547)
구성 비중 (%)	1사1촌 자매결연	0.05	0.13	0.00	0.03	0.07	1.43 (0.2335)
	농촌관광 체험학습	0.07	0.13	0.00	0.08	0.03	1.42 (0.2378)
	주말농장	0.00	0.00	0.00	0.01	0.00	0.21 (0.8912)
	농가민박 등 숙박	0.03	0.07	0.00	0.03	0.04	0.40 (0.7512)
	농산물 직거래	0.09	0.07	0.13	0.09	0.09	0.07 (0.9736)
	기 타	0.12	0.13b	0.50a	0.13b	0.07b	4.45 (0.0045)

한편 농촌마을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직거래(0.09)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농촌관광·체험학습(0.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1사1촌 자매결연(0.05)과 농가민박 등 숙박(0.0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개의 농촌마을 유형별로 구분해 볼 때, 5가지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마

을의 도농교류 프로그램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고, 이는 농촌마을의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을공동체 유지 및 변화

농촌마을의 마을공동체의 유지가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농촌마을은 보통(31.5%)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불가능하다고 보는 농촌마을은 33.1%이고, 가능하다고 보는 농촌마을은 3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농촌마을의 마을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공동체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4개 농촌마을 유형에 있어서도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chi^2=15.4635$, $\text{prob}=0.2171$).

〈표 4-25〉 마을공동체의 유지 및 향후 전망

구 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전 체		254 (100.0)	15 (100.0)	8 (100.0)	156 (100.0)	75 (100.0)
마을공동체 유지가능성	절대적으로 불가능	13 (5.1)	1 (6.7)	0 (0.0)	11 (7.1)	1 (1.3)
	불가능	71 (28.0)	3 (20.0)	1 (12.5)	46 (29.5)	21 (28.0)
	보 통	80 (31.5)	7 (46.7)	4 (50.0)	48 (30.8)	21 (28.0)
	약간 가능	73 (28.7)	4 (26.7)	2 (25.0)	45 (28.9)	22 (29.3)
	절대적으로 가능	17 (6.7)	0 (0.0)	1 (12.5)	6 (3.9)	10 (13.3)
마을공동체 향후 전망	매우 침체	18 (7.1)	2 (13.3)	1 (12.5)	11 (7.1)	4 (5.3)
	약간 침체	58 (22.8)	5 (33.3)	1 (12.5)	44 (28.2)	8 (10.7)
	변화 없음	114 (44.9)	5 (33.3)	3 (37.5)	63 (40.4)	43 (57.3)
	약간 활성화	60 (23.6)	3 (20.0)	3 (37.5)	35 (22.4)	19 (25.3)
	매우 활성화	4 (1.6)	0 (0.0)	0 (0.0)	3 (1.9)	1 (1.3)

주: 유지가능성 $\chi^2=15.4635$, $df=12$, $\text{prob}=0.2171$

향후 전망 $\chi^2=14.6822$, $df=12$, $\text{prob}=0.2593$

그리고 향후 마을공동체의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현재와 유사(44.9%)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침체될 것으로 예측하는 마을은 29.9%이고,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마을은 2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농촌마을의 마을공동체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4개 농촌마을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chi^2=14.6822$, prob=0.2593).

6) 정책투입 및 정책수요

(1) 공공사업의 추진

① 공공사업의 수행마을

금산군의 254개 농촌마을 중에서 과소고령마을은 15개, 과소비고령마을은 8개, 비과소고령마을은 156개, 그리고 비과소비고령마을은 75개 분류되었다. 이 중에서 최근 5년간 공공사업을 추진한 농촌마을을 살펴보면, 과소고령마을은 12개(75.0%), 과소비고령마을은 5개(62.5%), 비과소고령마을은 89개(57.1%), 비과소비고령마을은 32개(4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산군에서는 총 138개의 농촌마을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하였고, 유형별로는 비과소고령마을이 89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농촌마을 유형의 수를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에 대한 공공사업 추진이 많았다고 하겠다.

〈표 4-26〉 공공사업의 수행마을

(단위: 마을수, %)

구 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사업투입마을	138	12	5	89	32
사업추진비율	54.3	75.0	62.5	57.1	42.7

② 공공사업의 투자규모

최근 5년간 공공사업을 추진한 농촌마을의 평균 사업비는 45,499.49만 원이고, 주로 종합사

업(22,761.59만 원)과 기초생활(20,544.93만 원)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지문화(1,990.07만 원)와 소득기반(202.90만 원)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마을의 4가지 유형에 따라 평균 사업비의 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값=0.68$, $prob=0.5677$). 따라서 농촌마을의 특성에 따라 공공사업의 규모가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비 규모와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농촌마을의 인구규모와 고령화 등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농촌마을의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과소고령마을은 다른 3개 유형의 농촌마을에 비해서 기초생활의 사업비(117,783.33만 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F값=3.58$, $prob=0.0157$). 그 외 복지문화, 소득기반, 종합사업 등의 경우, 4개 농촌마을 유형에 따른 사업비 규모와 사업내용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공공사업의 투자규모

(단위: 만원)

구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F값 (prob)
총액	45,499.49	121,075.00	8,580.00	42,410.45	31,518.75	0.68 (0.5677)
기초 생활	20,544.93	117,783.33 ^a	7,500.00 ^b	9,451.69 ^b	16,971.88 ^b	3.58 (0.0157)
복지 문화	1,990.07	866.67	1,080.00	2,635.17	759.38	0.23 (0.8745)
소득 기반	202.90	0.00	0.00	280.90	93.75	0.12 (0.9508)
종합 사업	22,761.59	2,425.00	0.00	30,042.70	13,693.75	0.18 (0.9130)

③ 공공사업의 마을발전효과

농촌마을의 공공사업에 대한 마을발전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사업의 마을발전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가 42.5%로 가장 높고, 매우 큰 효과가 있었다가 32.5%로 나타났다. 반면, 효과가 없었다는 비중은 4.1%에 불과하였다. 이는 4개의 농촌마을 유형별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chi^2=11.0355$, $prob=0.5259$). 따라서 농촌

마을의 경우 공공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4-28〉 공공사업의 마을발전 효과

(단위: 마을수, %)

구 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전 체	193 (100.0)	13 (100.0)	6 (100.0)	114 (100.0)	60 (100.0)
전혀 없었음	2 (1.0)	0 (0.0)	0 (0.0)	1 (0.9)	1 (1.7)
없었음	6 (3.1)	0 (0.0)	0 (0.0)	6 (5.3)	0 (0.0)
보 통	40 (20.7)	4 (30.8)	1 (16.7)	24 (21.1)	11 (18.3)
약간 있었음	82 (42.5)	5 (38.5)	3 (50.0)	53 (46.5)	21 (35.0)
매우 크게 있었음	63 (32.6)	4 (30.8)	2 (33.3)	30 (26.3)	27 (45.0)

주: $\chi^2=11.0355$, $df=12$, $prob=0.5259$

(2) 소멸마을의 대응정책

① 소멸마을의 대응방안

향후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소멸마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소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 그리고 소멸되기 전까지는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1%로 나타났다. 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하였다.

한편 소멸마을에 대한 대응정책에 대해서 농촌마을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chi^2=28.4206$, $prob=0.0048$). 우선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은 농촌마을이 소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반면, 비과소고령마을과 비과소비고령마을은 소멸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농촌마을의 입장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마을이 소멸되더라도 다양한 정책적 투입이 이루어질 희망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4-29〉 소멸마을의 대응방안

(단위: 마을수, %)

구 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전 체	254 (100.0)	15 (100.0)	8 (100.0)	156 (100.0)	75 (100.0)
어차피 소멸될 거라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6 (2.4)	1 (6.7)	0 (0.0)	3 (1.9)	2 (2.7)
어차피 소멸될 마을이라면 신규마을 조성 등 다른 방향으로 개발	8 (3.2)	3 (20.0)	0 (0.0)	4 (2.6)	1 (1.3)
소멸되기 전까지는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와 노력 필요	112 (44.1)	4 (26.7)	3 (37.5)	81 (51.9)	24 (32.0)
소멸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과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114 (44.9)	6 (40.0)	5 (62.5)	62 (39.7)	41 (54.7)
잘 모르겠음	14 (5.5)	1 (6.7)	0 (0.0)	6 (3.9)	7 (9.3)

주: $\chi^2=28.4206$, $df=12$, $prob=0.0048$

② 소멸마을 정책의 필요성

농촌마을의 소멸에 대해서는 크게 소멸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소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크게 소멸될 농촌마을에 대한 정책이 국가적 낭비, 성과없음, 낮은 지속가능성, 그리고 다른 경쟁력 있는 마을육성 등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농촌마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농촌마을의 다양한 기능수행, 국토균형발전, 사회적 손실 방지, 마을주민의 피해 최소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농촌마을의 소멸정책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소멸마을의 낮은 지속가능성(0.03)과 다른 경쟁력 있는 마을육성(0.03)에서 소멸마을에 대한 정책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농촌마을에 대한 유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국토균형발전(0.46), 사회적 손실 방지(0.41) 등의 측면에서 농촌마을의 유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멸정책의 필요성보다는 유지정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소멸마을 정책의 필요성

구 분		전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F값 (prob)
소멸 정책 필요 성	국가적 낭비	0.01	0.00	0.00	0.01	0.01	0.17 (0.9178)
	성과없음	0.02	0.07	0.00	0.02	0.01	0.67 (0.5693)
	낮은 자생가능성	0.03	0.27 ^a	0.00 ^b	0.02 ^b	0.01 ^b	10.76 (0.0001)
	경쟁력있는 마을육성	0.03	0.20 ^a	0.00 ^b	0.02 ^b	0.01 ^b	6.30 (0.0004)
유지 정책 필요 성	다양한 기능수행	0.28	0.13	0.25	0.28	0.31	0.63 (0.5963)
	국토 균형발전	0.46	0.27	0.63	0.44	0.51	1.33 (0.2661)
	사회적 손실	0.41	0.40	0.38	0.42	0.39	0.07 (0.9742)
	마을주민의 피해	0.25	0.40	0.13	0.26	0.21	1.04 (0.3771)

③ 소멸마을의 대응정책

소멸되는 농촌마을을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마을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38.2%이다. 반면 소멸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은 5.1%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는 4개의 농촌마을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3273$, prob=0.9461). 따라서 농촌마을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투자와 마을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4-31〉 소멸마을의 대응정책

(단위: 마을수, %)

구 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전 체	254 (100.0)	15 (100.0)	8 (100.0)	156 (100.0)	75 (100.0)
고령화 등으로 마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순리에 맡김	13 (5.1)	1 (6.7)	0 (0.0)	8 (5.1)	4 (5.3)
마을 소멸을 막으려면 반드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	131 (51.6)	9 (60.0)	5 (62.5)	80 (51.3)	37 (49.3)
마을 스스로가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	97 (38.2)	4 (26.7)	3 (37.5)	62 (39.7)	28 (37.3)
개인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마을 소멸을 막아야 한다	12 (4.7)	1 (6.7)	0 (0.0)	6 (3.9)	5 (6.7)
기 타	1 (0.4)	0 (0.0)	0 (0.0)	0 (0.0)	1 (1.3)

주: $\chi^2=5.3273$, $df=12$, $prob=0.9461$

(3) 정책수요

농촌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수요는 크게 보육/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여가, 교통편의, 치안/안전, 정보통신, 주거환경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중에서 정책수요가 가장 높은 항목은 사회복지(6.35), 보건의료(6.21), 주거환경(5.30), 교통편의(5.02)인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치안/안전(3.71), 문화여가(3.61), 보육/교육(3.41), 정보통신(2.39)의 경우 정책수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 농촌마을 유형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유형에 따라 정책수요가 크게 상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주거환경, 교통편의 등은 농촌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농촌마을의 유형에 따라 이들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정책공급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4-32〉 정책수요

구 분	전 체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F값 (prob)
보육/교육	3.41	2.60	4.00	3.30	3.75	1.88 (0.1342)
보건의료	6.21	5.93	6.25	6.17	6.33	0.35 (0.7861)
사회복지	6.35	6.00	5.75	6.54	6.09	1.92 (0.1273)
문화여가	3.61	3.80	3.75	3.64	3.49	0.19 (0.9004)
교통편의	5.02	5.27	4.13	5.17	4.75	1.21 (0.3053)
치안/안전	3.71	3.67	4.63	3.63	3.80	0.69 (0.5614)
정보통신	2.39	2.93	2.50	2.32	2.41	0.74 (0.5263)
주거환경	5.30	5.80	5.00	5.23	5.37	0.41 (0.7488)

7) 과소고령마을 및 과소비고령마을의 특성분석

금산군의 254개 마을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은 한계마을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한계마을의 특성을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의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사람의 공동화

① 인구 및 고령화

〈표 4-33〉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인구 및 고령화
(단위: 명, 호, 명, %, 호, %)

구분	읍면	행정리	인구		고령화		빈집	
			인구	가구수	65세 이상인구	고령화	빈집수	빈집 비중
과소 고령 마을	제원	구역1	37	31	37	100.00	1	3.23
		길곡1	45	25	37	82.22	6	24.00
		명곡3	15	18	15	100.00	3	16.67
		신안	18	15	10	55.56	5	33.33
		용화2	27	19	27	100.00	1	5.26
	부리	방우	44	26	34	77.27	6	23.08
		어재2	12	22	12	100.00	10	45.45
	군북	두두3	25	17	17	68.00	9	52.94
	진산	덕천2	41	25	24	58.54	1	4.00
		마장2	35	25	27	77.14	3	12.00
		신동2	43	17	34	79.07	3	17.65
	진산	부암3	35	31	30	85.71	7	22.58
		오항1	43	37	26	60.47	13	35.14
		오항2	28	19	18	64.29	5	26.32
	복수	수영3	40	35	38	95.00	5	14.29
과소 비고령 마을	제원	길곡2	46	23	20	43.48	3	13.04
		동곡2	40	21	14	35.00	1	4.76
		수당4	35	15	7	20.00	2	13.33
	부리	양곡4	46	23	15	32.61	3	13.04
	군북	동편2	45	21	19	42.22	2	9.52
		산안2	40	20	17	42.50	3	15.00
	남이	대양2	45	35	15	33.33	0	0.00
	복수	지랑2	45	30	20	44.44	4	13.33

② 인구변화 및 향후 전망

〈표 4-34〉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전입인구 및 방문객

구분	읍면	행정리	최근5년간 전입인구	방문객수	방문목적
과소 고령 마을	제원	구억1	1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
		길곡1	10명 미만	1,000명 이상	도농교류, 체험관광, 일반관광
		명곡3	10명 미만	100명~1,000명 미만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
		신안	10명 미만	1,000명 이상	도농교류, 체험관광, 일반관광
		용화2	1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
	부리	방우	10명 미만	100명~1,000명 미만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
		어재2	10명 미만	100명~1,000명 미만	주변지 방문을 목적으로 한 단순방문
	군북	두두3	10명 미만	100명~1,000명 미만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
	진산	덕천2	10명 미만	50명 미만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
		마장2	1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
		신동2	10명 미만	50명 미만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
	진산	부암3	10명 미만	100명~1,000명 미만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
		오항1	10명 미만	100명~1,000명 미만	주변지 방문을 목적으로 한 단순방문
		오항2	10명 미만	100명~1,000명 미만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
	복수	수영3	10명 미만	50명 미만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
과소 비고령 마을	제원	길곡2	1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
		동곡2	10명 미만	50명 미만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
		수당4	10명 미만	50명 미만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
		양곡4	10명 미만	100명~1,000명 미만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
	군북	동편2	1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
		산안2	50명~100 명 미만	100명~1,000명 미만	주변지 방문을 목적으로 한 단순방문
	남이	대양2	10명 미만	100명~1,000명 미만	가족, 친지, 출향인 방문
	복수	지량2	10명 미만	100명~1,000명 미만	주변지 방문을 목적으로 한 단순방문

〈표 4-35〉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전망 및 소멸가능성

구분	읍면	행정리	마을인구전망	마을소멸가능성	인구감소의 요인	마을의 발전전망
과소 고령 마을	제원	구억1	현재규모 유지	소멸가능없음	-	현재 수준 유지
		길곡1	서서히 증가	잘모르겠음	-	매우 발전
		명곡3	서서히 감소	잘모르겠음	소득 및 일자리 감소	약간 발전
		신안	서서히 증가	소멸가능없음	-	약간 발전
		용화2	서서히 감소	향후 10년 이후	기타	매우 쇠퇴
	부리	방우	서서히 감소	소멸가능없음	소득 및 일자리 감소	약간 쇠퇴
		어재2	서서히 감소	향후 10년 이후	기타	약간 쇠퇴
	군북	두두3	서서히 증가	잘모르겠음	-	약간 쇠퇴
	진산	덕천2	서서히 감소	잘모르겠음	소득 및 일자리 감소	약간 쇠퇴
		마장2	현재규모 유지	향후 10년 이후	-	약간 쇠퇴
		신동2	서서히 감소	잘모르겠음	소득 및 일자리 감소	약간 쇠퇴
	진산	부암3	서서히 감소	잘모르겠음	낙후된 기초생활기반	약간 쇠퇴
		오항1	급속히 감소	소멸가능없음	소득 및 일자리 감소	약간 쇠퇴
		오항2	서서히 감소	소멸가능없음	낙후된 기초생활기반	약간 쇠퇴
	복수	수영3	현재규모 유지	소멸가능없음	-	약간 쇠퇴
과소 비고령 마을	제원	길곡2	서서히 감소	소멸가능없음	소득 및 일자리 감소	현재 수준 유지
		동곡2	서서히 증가	소멸가능없음	-	약간 발전
		수당4	급속히 감소	잘모르겠음	열악한 복지 의료 교육서비스	약간 쇠퇴
	부리	양곡4	서서히 감소	잘모르겠음	소득 및 일자리 감소	약간 쇠퇴
	군북	동편2	서서히 증가	소멸가능없음	-	약간 발전
		산안2	현재규모 유지	소멸가능없음	-	현재 수준 유지
	남이	대양2	서서히 증가	소멸가능없음	-	약간 발전
	복수	지랑2	서서히 감소	소멸가능없음	낙후된 기초생활기반	약간 발전

(2) 토지의 공동화

① 소득원 및 소득수준

〈표 4-36〉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소득원 및 소득수준

구분	읍면	행정리	주요 소득원	소득수준
과소 고령 마을	제원	구역1	논농사	1천만 원 이하
		길곡1	인삼약초재배	1천만 원 이하
		명곡3	논농사	1천만 원 이하
		신안	밭농사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용화2	논농사	1천만 원 이하
	부리	방우	인삼약초재배	1천만 원 이하
		어재2	논농사	1천만 원 이하
	군북	두두3	기타 작업활동을 통한 농외소득	1천만 원 이하
	진산	덕천2	논농사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마장2	인삼약초재배	1천만 원 이하
		신동2	논농사	1천만 원 이하
	진산	부암3	밭농사	1천만 원 이하
		오항1	밭농사	1천만 원 이하
		오항2	밭농사	1천만 원 이하
	복수	수영3	밭농사	1천만 원 이하
과소 비고령 마을	제원	길곡2	인삼약초재배	1천만 원 이하
		동곡2	인삼약초재배	2천만 원~3천만 원 미만
		수당4	논농사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부리	양곡4	인삼약초재배	1천만 원 이하
	군북	동편2	밭농사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산안2	인삼약초재배	1천만 원 이하
	남이	대양2	밭농사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복수	지랑2	밭농사	1천만 원 이하

② 휴경지

〈표 4-37〉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휴경지

구분	읍면	행정리	휴경지 비율	휴경지 변화추이	휴경지 증가요인
과소 고령 마을	제원	구억1	20% 미만	서서히 감소	-
		길곡1	20%~40% 미만	서서히 증가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명곡3	20%~40% 미만	현재 수준 유지	-
		신안	40%~60% 미만	급속히 증가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용화2	20%~40% 미만	서서히 증가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부리	방우	20%~40% 미만	서서히 증가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어재2	20%~40% 미만	서서히 증가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군북	두두3	40%~60% 미만	서서히 증가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진산	덕천2	20% 미만	현재 수준 유지	-
		마장2	20% 미만	서서히 감소	-
		신동2	20% 미만	현재 수준 유지	-
	진산	부암3	20%~40% 미만	급속히 증가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오항1	40%~60% 미만	서서히 증가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오항2	20%~40% 미만	서서히 증가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복수	수영3	20% 미만	현재 수준 유지	-
과소 비고령 마을	제원	길곡2	20%~40% 미만	서서히 증가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동곡2	20%~40% 미만	현재수준 유지	-
		수당4	20% 미만	서서히 증가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부리	양곡4	20% 미만	서서히 증가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군북	동편2	20%~40% 미만	급속히 증가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산안2	20%~40% 미만	현재 수준 유지	-
	남이	대양2	20% 미만	서서히 감소	-
	복수	지랑2	20% 미만	현재 수준 유지	-

(3) 공동체의 공동화

① 마을공동체

〈표 4-38〉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마을공동체

구분	읍면	행정리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취업위원회	연구회	기타
과소 고령 마을	제원	구억1	○	○	×	×	×	○
		길곡1	○	×	×	○	×	×
		명곡3	×	○	×	×	×	×
		신안	○	○	×	×	×	○
		용화2	○	○	×	○	×	×
	부리	방우	○	○	×	×	×	×
		어재2	○	○	×	○	×	×
	군북	두두3	○	○	×	×	×	×
	진산	덕천2	○	○	×	×	×	×
		마장2	○	○	×	×	×	○
		신동2	○	○	○	×	×	×
	진산	부암3	○	○	×	×	×	×
		오항1	○	○	×	×	×	×
		오항2	○	×	×	×	×	×
	복수	수영3	○	○	×	×	×	○
과소 비고령 마을	제원	길곡2	○	○	×	×	×	×
		동곡2	○	×	×	×	×	×
		수당4	○	×	×	×	×	×
	부리	양곡4	○	○	×	×	×	×
	군북	동편2	○	×	×	○	×	×
		산안2	○	○	○	×	×	×
	남이	대양2	○	×	○	×	×	×
	복수	지랑2	○	○	○	○	×	×

〈표 4-39〉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마을공동체 활동

구분	읍면	행정리	농작업의 협력	농가계의 공동사용	마을토지 /시설 공동관리	마을안길 가꾸기/정비	개인주택 공동장비	마을잔치/ 공동행사
과소 고령 마을	제원	구역1	○	×	×	○	×	○
		길곡1	○	×	○	○	○	○
		명곡3	×	×	×	○	×	○
		신안	×	×	×	○	×	○
		용화2	×	○	○	○	×	○
	부리	방우	×	×	×	×	×	○
		어재2	×	○	○	○	×	○
	군북	두두3	○	×	×	×	×	×
	진산	덕천2	×	×	×	○	×	○
		마장2	×	×	○	○	○	×
		신동2	×	×	×	○	×	○
	진산	부암3	×	×	×	×	×	○
		오항1	×	×	×	×	×	○
		오항2	×	×	×	×	×	○
	복수	수영3	×	×	×	×	×	○
과소 비고령 마을	제원	길곡2	×	×	×	○	×	×
		동곡2	×	×	×	○	×	○
		수당4	×	×	×	○	×	×
	부리	양곡4	×	×	×	×	×	○
	군북	동편2	○	○	×	○	×	○
		산안2	×	×	×	×	×	○
	남이	대양2	○	×	×	×	×	○
	복수	지랑2	×	×	×	○	×	×

② 마을의 도농교류

〈표 4-40〉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도농교류

구분	읍면	행정리	1세대 자매결연	농촌관광 체험학습	주말농장	농가민박 및 숙박	농산물 직거래	기타
과소 고령 마을	제원	구억1	×	×	×	×	×	○
		길곡1	○	○	×	×	○	×
		명곡3	×	×	×	×	×	×
		신안	×	○	×	×	×	×
		용화2	○	×	×	×	×	×
	부리	방우	×	×	×	×	×	○
		어재2	×	×	×	○	×	×
	군북	두두3	×	×	×	×	×	×
	진산	덕천2	×	×	×	×	×	×
		마장2	×	×	×	×	×	×
		신동2	×	×	×	×	×	×
	진산	부암3	×	×	×	×	×	×
		오항1	×	×	×	×	×	×
		오항2	×	×	×	×	×	×
	복수	수영3	×	×	×	×	×	×
과소 비고령 마을	제원	길곡2	×	×	×	×	○	×
		동곡2	×	×	×	×	×	×
		수당4	×	×	×	×	×	○
	부리	양곡4	×	×	×	×	×	○
	군북	동편2	×	×	×	×	×	○
		산안2	×	×	×	×	×	○
	남이	대양2	×	×	×	×	×	×
	복수	지랑2	×	×	×	×	×	×

③ 마을공동체 유지 및 변화

〈표 4-41〉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마을공동체 유지 및 변화

구분	읍면	행정리	마을공동체 유지가능성	마을공동체 향후전망
과소 고령 마을	제원	구억1	불가능	변화 없음
		길곡1	약간 가능	약간 활성화
		명곡3	보통	약간 활성화
		신안	약간 가능	약간 침체
		용화2	보통	약간 침체
	부리	방우	불가능	매우 침체
		어재2	약간 가능	약간 활성화
	군북	두두3	약간 가능	약간 침체
	진산	덕천2	보통	변화 없음
		마장2	보통	변화 없음
		신동2	보통	변화 없음
	진산	부암3	절대적으로 불가능	약간 침체
		오항1	불가능	약간 침체
		오항2	보통	매우 침체
	복수	수영3	보통	변화없음
과소 비고령 마을	제원	길곡2	약간 가능	약간 활성화
		동곡2	보통	변화없음
		수당4	절대적으로 가능	약간 활성화
	부리	양곡4	보통	변화 없음
	군북	동편2	보통	매우 침체
		산안2	보통	변화 없음
	남이	대양2	약간 가능	약간 활성화
	복수	지랑2	불가능	약간 침체

(4) 정책투입 및 정책수요

① 공공사업의 추진

〈표 4-42〉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공공사업

(단위: 수, 만원)

구분	읍면	행정리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비			
					기초생활	복지문화	소득기반	종합사업
과소 고령 마을	제원	구역1	1	7,200	0	7200	0	0
		길곡1	4	22,100	3000	6500	0	12600
		명곡3	4	11,500	11500	0	0	0
		신안	2	19,500	19500	0	0	0
		용화2	4	1,310,000	1300000	0	0	10000
	부리	방우	0	0	0	0	0	0
		어재2	1	1,500	0	1500	0	0
	군북	두두3	0	0	0	0	0	0
		덕천2	2	22,000	22000	0	0	0
	진산	마장2	2	16,000	16000	0	0	0
		신동2	3	29,600	29600	0	0	0
	진산	부암3	1	3,000	3000	0	0	0
		오항1	3	7,500	7500	0	0	0
		오항2	1	3,000	3000	0	0	0
	복수	수영3	2	0	0	0	0	0
과소 비고령 마을	제원	길곡2	1	20,000	20000	0	0	0
		동곡2	4	7,000	7000	0	0	0
		수당4	3	10,000	5000	5000	0	0
	부리	양곡4	0	0	0	0	0	0
	군북	동편2	0	0	0	0	0	0
		산안2	0	0	0	0	0	0
	남이	대양2	2	5,400	5000	400	0	0
	복수	지랑2	2	500	500	0	0	0

〈표 4-43〉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마을발전효과

구분	읍면	행정리	공공사업의 마을발전효과
과소 고령 마을	제원	구억1	약간 있었음
		길곡1	매우 크게 있었음
		명곡3	보통
		신안	약간 있었음
		용화2	매우 크게 있었음
	부리	방우	-
		어재2	약간 있었음
	군북	두두3	-
	진산	덕천2	약간 있었음
		마장2	매우 크게 있었음
		신동2	보통
	진산	부암3	보통
		오항1	약간 있었음
		오항2	보통
	복수	수영3	매우 크게 있었음
과소 비고령 마을	제원	길곡2	약간 있었음
		동곡2	약간 있었음
		수당4	매우 크게 있었음
	부리	양곡4	-
	군북	동편2	보통
		산안2	-
	남이	대양2	약간 있었음
	복수	지량2	매우 크게 있었음

② 소멸마을의 대응정책

〈표 4-44〉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소멸마을 대응정책

구분	읍면	행정리	소멸마을의 대응방안
과소 고령 마을	제원	구억1	소멸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과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길곡1	소멸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과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명곡3	신규마을조성 등 다른 방향으로 개발
		신안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함
		용화2	최소한의 투자와 노력 필요
	부리	방우	신규마을조성 등 다른 방향으로 개발
		어재2	최소한의 투자와 노력 필요
	군북	두두3	최소한의 투자와 노력 필요
	진산	덕천2	잘 모르겠음
		마장2	소멸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과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신동2	신규마을조성 등 다른 방향으로 개발
	진산	부암3	최소한의 투자와 노력 필요
		오향1	소멸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과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오향2	소멸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과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복수	수영3	소멸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과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과소 비고령 마을	제원	길곡2	소멸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과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동곡2	소멸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과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수당4	소멸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과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부리	양곡4	최소한의 투자와 노력 필요
	군북	동편2	소멸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과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산안2	최소한의 투자와 노력 필요
	남이	대양2	소멸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과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복수	지랑2	최소한의 투자와 노력 필요

〈표 4-45〉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소멸마을 정책 필요성

구분	읍면	행정리	국가적낭비	성과없음	낮은 지속가능성	경쟁력있는 마을 육성
과소 고령 마을	제원	구억1	×	×	×	×
		길곡1	×	×	×	×
		명곡3	×	×	○	○
		신안	×	×	○	×
		용화2	×	×	×	×
	부리	방우	×	×	○	○
		어재2	×	×	×	×
	군북	두두3	×	×	×	×
	진산	덕천2	×	×	×	×
		마장2	×	×	×	×
		신동2	×	○	○	○
	진산	부암3	×	×	×	×
		오항1	×	×	×	×
		오항2	×	×	×	×
	복수	수영3	×	×	×	×
과소 비고령 마을	제원	길곡2	×	×	×	×
		동곡2	×	×	×	×
		수당4	×	×	×	×
	부리	양곡4	×	×	×	×
	군북	동편2	×	×	×	×
		산안2	×	×	×	×
	남이	대양2	×	×	×	×
	복수	지랑2	×	×	×	×

〈표 4-46〉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소멸마을 유지정책 필요성

구분	읍면	행정리	다양한 기능수행	국토균형발 전	사회적 손실	마을주민의 피해
과소 고령 마을	제원	구역1	×	×	○	○
		길곡1	×	○	×	○
		명곡3	×	×	×	×
		신안	×	×	×	×
		용화2	×	×	○	○
	부리	방우	×	×	×	×
		어재2	×	×	○	○
	군북	두두3	○	×	×	×
	진산	덕천2	×	○	×	×
		마장2	○	×	×	×
		신동2	×	×	×	×
	진산	부암3	×	○	○	×
		오항1	×	○	×	×
		오항2	×	×	○	○
	복수	수영3	×	×	○	○
과소 비고령 마을	제원	길곡2	×	×	○	×
		동곡2	×	○	×	×
		수당4	○	×	×	×
	부리	양곡4	×	○	×	×
	군북	동편2	×	○	○	×
		산안2	×	○	×	×
	남이	대양2	○	○	×	×
	복수	지랑2	×	×	○	○

〈표 4-47〉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대응정책

구분	읍면	행정리	소멸마을의 대응정책
과소 고령 마을	제원	구억1	개인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마을소멸을 막아야 함
		길곡1	마을 소멸을 막으려면 반드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
		명곡3	마을 스스로가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
		신안	마을 스스로가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
		용화2	마을 스스로가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
	부리	방우	마을 소멸을 막으려면 반드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
		어재2	마을 소멸을 막으려면 반드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
	군북	두두3	마을 소멸을 막으려면 반드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
	진산	덕천2	마을 소멸을 막으려면 반드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
		마장2	마을 소멸을 막으려면 반드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
		신동2	고령화 등으로 마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순리에 맡김
	진산	부암3	마을 소멸을 막으려면 반드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
		오항1	마을 소멸을 막으려면 반드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
		오항2	마을 소멸을 막으려면 반드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
	복수	수영3	마을 스스로가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
과소 비고령 마을	제원	길곡2	마을 스스로가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
		동곡2	마을 소멸을 막으려면 반드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
		수당4	마을 소멸을 막으려면 반드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
	부리	양곡4	마을 스스로가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
	군북	동편2	마을 소멸을 막으려면 반드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
		산안2	마을 소멸을 막으려면 반드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
	남이	대양2	마을 소멸을 막으려면 반드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
	복수	지량2	마을 스스로가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

③ 정책수요

〈표 4-48〉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정책수요(우선순위)

구분	읍면	행정리	보육 교육	보건 의료	사회 복지	문화 여가	교통 편의	치안 안전	정보 통신	주거 환경
과소 고령 마을	제원	구억1	7	1	3	4	6	5	8	2
		길곡1	4	5	1	8	3	6	7	2
		명곡3	3	1	2	4	6	5	8	7
		신안	8	6	4	2	3	5	7	1
		용화2	8	2	1	3	5	6	7	4
	부리	방우	8	2	5	4	1	6	3	7
		어재2	8	3	1	4	5	6	7	2
	군북	두두3	1	2	6	7	3	4	8	5
	진산	덕천2	5	3	4	7	8	6	2	1
		마장2	8	2	1	7	5	4	6	3
		신동2	7	8	6	5	4	3	2	1
	진산	부암3	5	1	2	8	3	7	6	4
		오항1	8	4	1	7	2	5	6	3
		오항2	8	2	3	5	1	6	7	4
	복수	수영3	8	4	5	3	1	6	7	2
과소 비고령 마을	제원	길곡2	8	1	3	5	2	6	7	4
		동곡2	3	4	2	5	7	6	8	1
		수당4	1	3	5	4	6	2	7	8
	부리	양곡4	7	2	1	6	3	4	8	5
	군북	동편2	2	5	8	3	7	1	6	4
		산안2	5	2	1	8	4	7	3	6
	남이	대양2	7	3	2	6	4	8	5	1
	복수	지랑2	7	2	4	5	6	1	8	3

주: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1이고, 가장 낮은 것은 7임.

8) 분석결과의 요약

유형별로 한계마을의 특성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유형의 농촌마을이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있다. 즉 과소고령마을은 제원면, 남일면, 진산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과소비고령마을은 제원면과 군북면에, 비과소비고령마을은 금산읍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비과소고령마을은 금산군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계마을은 산악지역이거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과 같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날 것이다.

둘째,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농촌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지만, 실제 농촌마을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농촌마을은 향후 거주인구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해당 농촌마을이 소멸될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향후 농촌마을은 현재보다 조금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과소고령마을의 경우는 다른 농촌마을에 비해서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소멸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촌마을 사람의 공동화를 살펴보면, 농촌마을의 유형에 따라 인구규모와 고령화율의 형태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과소고령마을의 경우 사람의 공동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과소비고령마을과 비과소고령마을도 현재의 인구구조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과소고령마을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반면 비과소고령마을의 경우 인구 규모와 고령화율에서 사람의 공동화 현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농촌마을 토지의 공동화를 살펴보면,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에서 나타나고 있고,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비과소고령마을과 비과소비고령마을은 토지의 공동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촌마을의 고령화율에 따라 주요작물이 상이하고, 그 결과 소득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마을 공동체의 공동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소고령마을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농촌마을 공동체 조직이 있고, 공동체 활동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마을안길 가꾸기와 같은 일부 공동체의 활동의 경우 과소고령마을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정책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고, 농촌마을 유형에서는 과소고령마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하겠다. 즉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정책은 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특히 농로를 포함한 도로)에 치중되어 있고, 농촌마을의 유형에 따라 사업규모와 사업내용이 상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9〉 농촌마을 유형별 특성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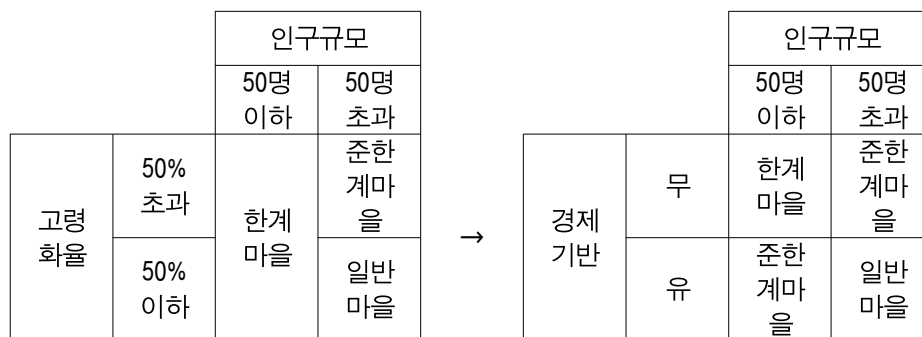
구 분		과소 고령마을	과소 비고령마을	비과소 고령마을	비과소 비고령마을
농촌마을의 지역분포		제원 진산 남일	제원 군북	고루 분포	금산
농촌마을의 전망	인 구	감소	감소/증가	감소	유지/증가
	소멸 가능성	△	×	×	×
	향후 발전도	쇠퇴	발전	발전	발전
농촌 마을 의 공동 화	사람의 공동화	인구	×	×	○
		고령화율	○	△	×
	토지의 공동화	주요작물	논, 밭	밭, 논	특용
		휴경지	○	×	×
	공동체의 공동화	공동체수	○	○	○
		공동체 활동	○	△	△
농촌 마을 의 정책	기 정책투입	투입마을	○	△	△
		투입금액	○	○	○
	한계마을 유지정책	필요성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한계마을유지 정책 필요		
		이유	국토균형발전, 사회적 손실 방지		
		방안	공공지원 + 주민 자체 노력		

주: ○은 양호 혹은 높음, △는 보통, ×는 불량 혹은 낮음

일곱째, 향후 지속적인 농촌마을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소멸마을에 대해서는 국토균형발전과 사회적 손실 감소를 위해서 소멸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마을에서 정책수요가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주거환경, 교통편의 등의 소프트웨어적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개발정책에서 농촌사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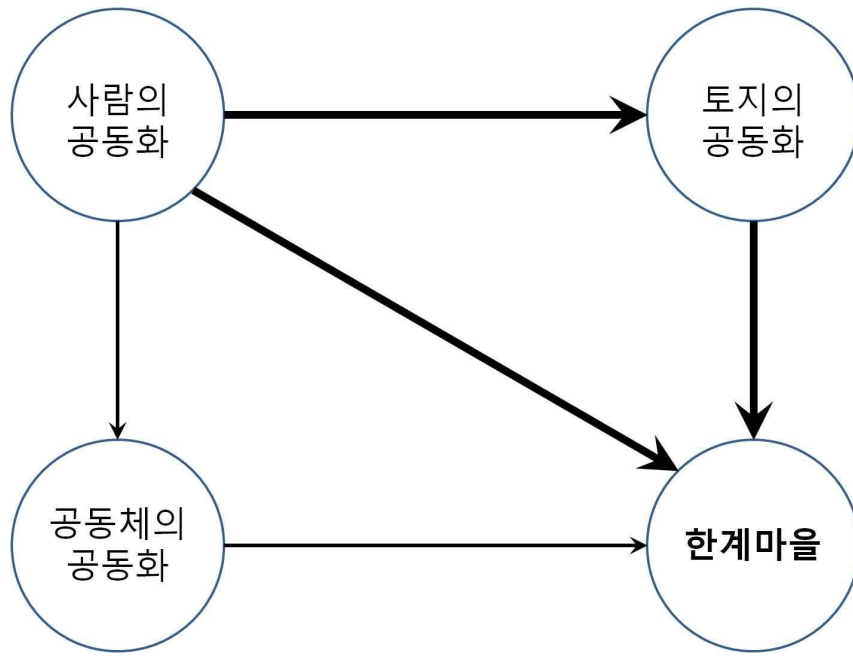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은 한계마을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경우 사람의 공동화와

토지의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규모 50명에 대한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농촌마을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비과소고령마을은 장기적으로 한계마을로 변화될 개연성이 있고, 비과소비고령마을은 향후 지속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의 경우 한계마을을 인구규모와 고령화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이 한계마을로, 비과소고령마을이 준한계마을, 그리고 비과소비고령마을이 일반마을로 구분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고령화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화율을 기준으로 한계마을로 규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령화율에 따라 토지의 공동화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율 보다는 토지의 공동화를 한계마을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규모와 경제기반을 기준으로 농촌마을을 유형화하고, 한계마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 우리나라 농촌마을의 재유형화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의 공동화와 토지의 공동화가 농촌마을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농촌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사람의 공동화는 토지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농촌마을이 한계마을화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한계마을의 속성을 갖고 있는 농촌마을에 대한 차별화된 농촌개발정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한계마을화 될 우려가 있는 준한계마을에 대한 유지·보전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한계마을을 경우 인근의 준한계마을 혹은 일반마을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림 4-5〉 우리나라 한계마을의 결정요인

3. 농촌마을 공간구조 조사 및 분석

1) 분석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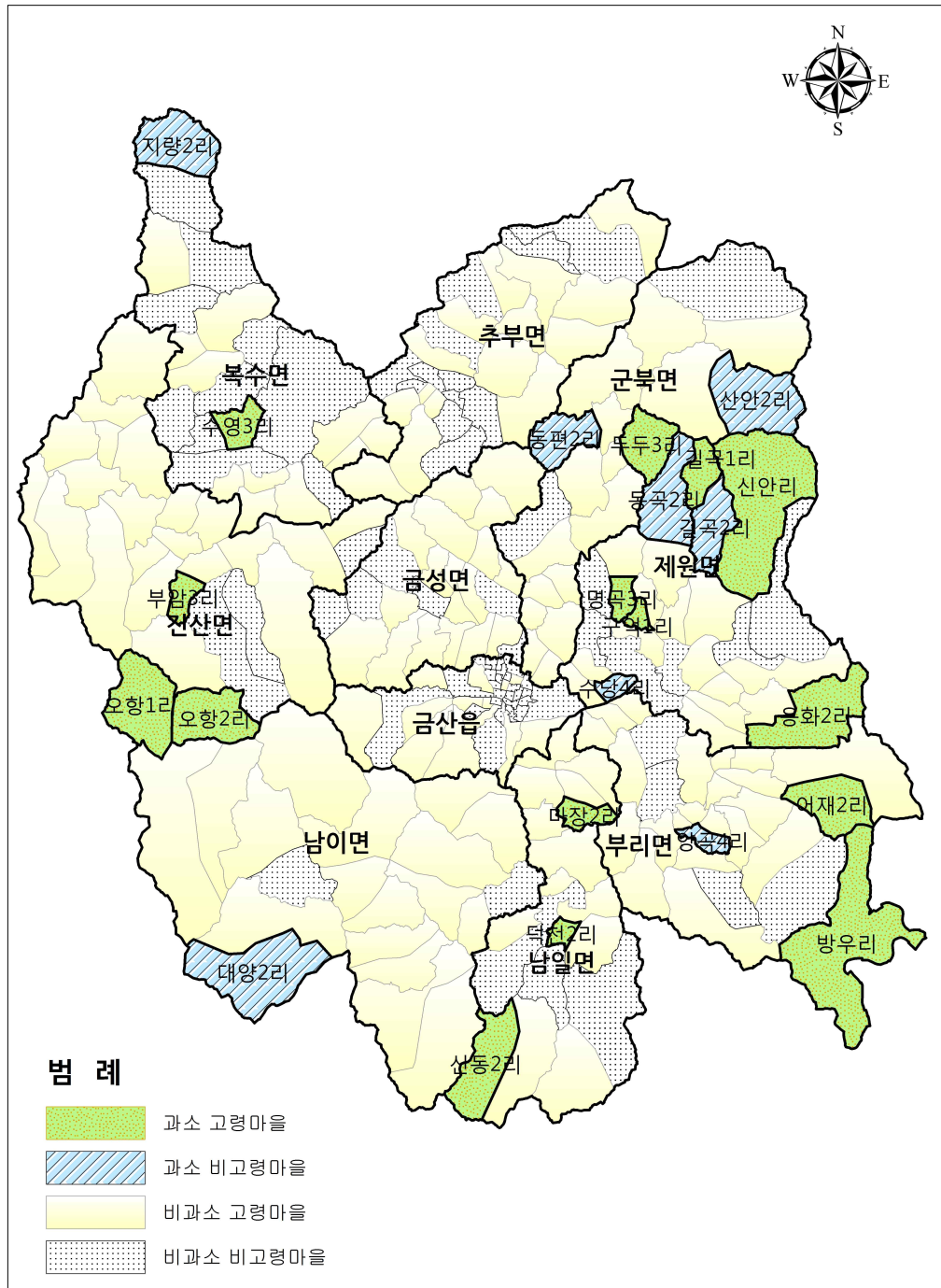
(1) 분석의 범위

본 절은 금산군 254개 행정리별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공간구조 분석 및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촌마을 유형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정 인자를 도출하였으며, 이 공간적 특정 인자와 앞에서 유형화의 기준으로 사용된 인구규모 및 고령화 비율간의 분석을 통해 과소고령마을 및 과소비고령마을 등 마을의 특성을 잘 설명하는(유형화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였다.

또한 마을 유형과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선정하여 금산군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공간 특성을 도출하였다. 공간적 특성을 위한 인자 도출은 문헌검토와 설문조사·인터뷰조사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4개 유형별 행정리의 공간적 분포와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은 다음과 같다.

〈표 4-50〉 농촌마을 공간구조 분석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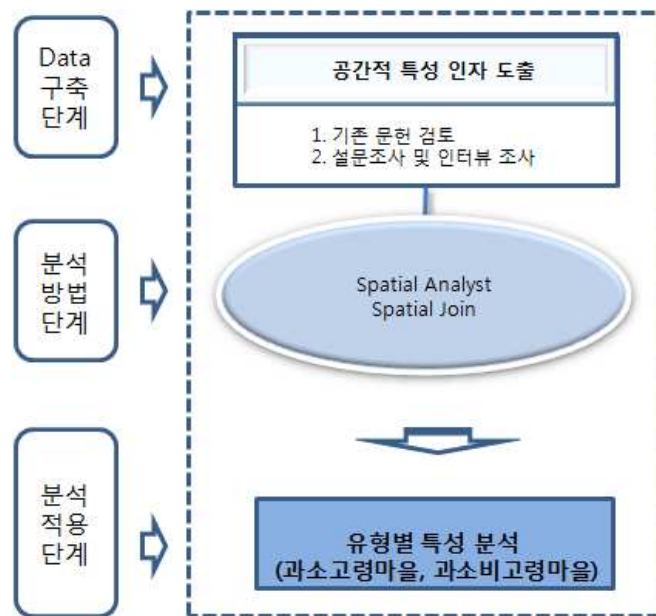
마을 유형	읍 면	해 당 마 을
과소고령마을 (15)	군북면	두두3리
	남일면	덕천2리, 마장2리, 신동2리
	북수면	수영3리
	부리면	방우리, 어재2리
	제원면	구억1리, 길곡1리, 명곡3리, 신안리, 용화2리
	진산면	부암3리, 오항1리, 오항2리
과소비고령마을 (8)	군북면	동편2리, 산안2리
	남이면	대양2리
	북수면	지랑2리
	부리면	양곡4리
	제원면	길곡2리, 동곡2리, 수당4리



〈그림 4-6〉 농촌마을 공간구조 분석 범위

(2) 공간구조 분석 방법

공간구조 분석 방법으로 한계마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특성 인자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헌검토 및 설문·인터뷰 조사를 통해 한계마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특성 인자를 도출하였으며, 인자들을 분석을 위해 GIS data로 구축하였다. 둘째, 구축된 인자와 4개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 중 특히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에 대한 공간적 특성을 파악한다.



〈그림 4-7〉 분석 절차

2) 공간적 특성 인자 도출

(1) 문헌검토 및 조사에 의한 인자 도출

한계마을 정책을 위한 공간적 특성 인자는 도시의 쇠퇴와 연관이 되기에 도시쇠퇴 및 성장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여 인자를 도출하였다. 도시쇠퇴 및 특성유형화 지표 도출을 위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조준범(2009)은 농촌지역 과소화특성 연구에서 과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경작여건(경지율, 임야면적율, 답면적율), 기초생활권 접근성(읍면소재지거리, 초등학교 및 중학교 거리), 마을표고, 지역중심접근성(주요도로거리, 군소재지거리)으로 설정하였으며, 과소화속도에 미치는 변수는 지역중심접근성(주요도로거리, 군소재지거리), 경작여건(경지율, 임야면적율, 답면적율), 세대구성원 규모(세대당 인구 및 연평균 세대당인구증감율), 생활유지능력(연간생활비자력충당비율, 타지역거주 자녀수)으로 도출하였다.

조진희(2009)는 인구증감률, 노령화지수, 1인당지방세부담액,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1,000명당 종사자수, 1,000명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1,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수, 1,000명당 의료병상수의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단 1-2세부과제(2009)에서는 지방중소도시 쇠퇴평가를 위해 인구사회부문(연평균인구증감률, 노령화지수), 산업경제부문(총사업체수증감, 1,000명당종사자수, 사업체당종사자수, 재정자립도, 1인당지방세징수액, 제조업체증감률), 문화복지부문(1000명당도서관좌석수, 1000당병상수, 의료인원증감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증감, 소년소녀가장세대증감), 도시공간의 물리적환경부문(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노후주택비율, 농가비율)의 17개 쇠퇴진단지표를 설정하였다.

동일한 도시재생사업단의 1-1세부과제 읍면동 지표 쇠퇴판단 지표는 인구부문(노령화지수, 노령화지수증감률, 5년간 연평균 인구성장률), 사회부문(독거노인가구비율, 독거노인가구비율증감률), 경제부문(1,000명당종사자수, 종사자수증감률, 사업체당종사자수, 사업체증감률, 제조업종사자비율, 1,000명당도소매업종사자수, 1,000명당도소매업종사자수증감률), 주택부문(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의 지표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송상열(2007)은 비성장형도시의 쇠퇴원인분석을 위해 인구통계, 도시경제, 도시공간구조(도시계획구역, 도로밀도,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인구당공원수, 도로밀도증감률, 상수도보급증감률, 하수도보급증감률), 사회환경(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비율, 기초생활보호대상자비율,

노후주택비율, 아파트가구비율, 재래시장수, 승용차당주차면수, 재래시장증감, 승용차보유율 증감)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김도영(2008)은 낙후도시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인구사회부문(인구규모,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고령자비율, 면적), 산업경제부문(재정력지수, 총사업체종사자비율, 소득세할주민세, 개별공시지가평균지가, 총사업체종사자수증가율, 1인당지방세징수액, 지방세징수율증가율), 정주환경부문(대도시와의이격거리, 농가비율, 1000명당의료병상수, 1,000명당공공도서관좌석수, 상하수도보급률, 도로율)을 선정하였다.

해의 문헌검토를 살펴보면 영국부동산협회에서는 현장의 쇠퇴를 현실감 있게 나타내 주는 구체적인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부문(실업률 전국 평균 두배 이상, 낮은 부동산 가격, 영업을 중단한 가게의 수), 사회부문(낙서와 쓰레기 양, 투표율15%이하, 1000명당 범죄200건 이상, 장기질환자 비율, 교육효과의 부진), 물리적부문(4.5%이상의 공실률, 불량주택비율8%이상, 주택의 노후화)으로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 모두 함께 선정하여 쇠퇴를 진단하고 있다.

〈표 4-51〉 문헌 검토에서 도출된 특성인자

구 분	지 표	
조준범 (2009)	종속변수	인구규모(인), 세대규모(호), 인구밀도(인/km ²), 호수밀도(호/ha), 연평균인구증감률(%), 연평균세대증감률(%)
	입지특성	군청소재지거리(km), 읍면소재지거리(km), 읍면소재지이동시간(분), 초등학교거리(km), 20년간 초등학교거리 증가량(km), 중학교거리(km), 주요도로거리(km), 표고(m), 면소재지와 표고차(m), 군소재지와 표고차(m), 경지율(%), 임야율(%), 답면적율(%), 읍면(더미)
	마을생활 환경 수준	세대당인구(인), 연평균세대당인구증감율(%), 연간생활비평균(만원), 생활비 자력충당비, 평균건축연도(년), 공기수(개수), 건축할 의향이 없는 가구의 비율(%), 타지역 거주자녀수 평균(인)
조진희 (2009)	인구증감률, 노령화지수, 1인당지방세부담액,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1,000명당종사자수, 1,000명당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1,000명당공공도서관좌석수, 1,000명당의료병상수	
도시재생사업단 1-2(2009)	인구사회	연평균인구증감률, 노령화지수
	산업·경제	총사업체수증감, 1,000명당종사자수, 사업체당종사자수, 재정자립도, 1인당지방세징수액, 제조업체증감률
	문화복지	1000명당도서관좌석수, 1000당병상수, 의료인원증감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증감, 소년소녀가장세대증감
	도시공간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노후주택비율, 농가비율

도시재생사업단 1-1(2008)	인구	노령화지수, 노령화지수증감률, 5년간 연평균 인구성장률
	사회	독거노인가구비율, 독거노인가구비율증감률
	산업	1,000명당종사자수, 종사자수증감률, 사업체당종사자수, 사업체증감률, 제조업종사자비율
	소득	1,000명당도소매업종사자수, 1,000명당도소매업종사자수증감률
	주택	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송상열 (2007)	인구통계	인구밀도, 전출률, 가구당세대원, 가구당아동수, 노령화지수, 인구증감률, 노령화지수증감, 가구당세대원증감률, 가구당아동수증감률
	도시경제	총사업체수, 총종사자수, 제조업당종사자수, 2차산업종사자수, 1인당지방세부담액, 승용차보유율, 재정자립도, 총사업체수증감률, 총종사자수증감률, 제조업체증감률, 제조업체당종사자증감률, 재정자립도증감률
	도시공간 구조	도시계획구역, 도로밀도,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인구당공원수, 도로밀도증감률, 상수도보급증감률, 하수도보급증감률
	사회환경	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비율, 기초생활보호대상자비율, 노후주택비율, 아파트가구비율, 재래시장수, 승용차당주차면수, 재래시장증감, 승용차보유율증감
김도영 (2008)	인구사회	인구규모,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고령자비율, 면적
	산업·경제	재정력지수, 총사업체종사자비율, 소득세할주민세, 개별공시지가평균지가, 총사업체종사자수증가율, 1인당지방세징수액, 지방세징수율증가율
	정주환경	대도시와의이격거리, 농가비율, 1000명당의료병상수, 1,000명당공공도서관좌석수, 상하수도보급률, 도로율
영국부동산 협회	경제	실업률 전국 평균 두배 이상, 낮은 부동산 가격, 영업을 중단한 가게의 수
	사회	낙서와 쓰레기 양, 투표율15%이하, 1000명당 범죄200건 이상, 장기질환자 비율, 교육효과의 부진
	물리	4.5%이상의 공실률, 불량주택비율8%이상, 주택의노후화

또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서 도출된 인자를 살펴보면 마을의 접근성, 도로와의 접근성, 마을 경작지의 경사도, 토지의 가격, 버스정류소와 마을간의 접근성, 대중교통 운행횟수, 마을내 진입도로 도로폭, 읍면소재지로부터의 거리, 휴경지 면적, 공가율, 귀농·귀촌인구, 독거노인가구수, 공동체의 공동화, 절대인구수, 고령화비율, 생활복지서비스제공 시설과의 접근성, 복지·의료·교육시설과의 접근성, 최근5년간 전입인구수 등으로 도출되었다.

〈표 4-52〉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로 도출된 특성인자

구 분	지 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	접근성지표	마을의 접근성, 도로와의 접근성, 버스정류소와 마을간의 접근성, 대중교통 운행횟수, 마을내 진입도로 도로폭, 읍면소재지로부터의 거리, 생활복지서비스제공 시설과의 접근성, 복지·의료·교육시설과의 접근성
	지형	마을의 경사도
	도시경제	토지의 가격(지가), 휴경지 면적
	물리적	공간율
	인구	귀농·귀촌인구, 독거노인 가구수, 절대인구수, 고령화비율, 최근5년간 전입인구수
	공동체	공동체의 공동화

(2) 공간적 특성을 포함한 인자 재도출

문헌검토와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에서 도출된 인자 중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자를 재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53〉 공간적 특성을 포함한 인자 재도출

구 분	지 표
문헌검토	군청소재지거리, 읍면소재지거리, 읍면소재지이동시간, 초등학교거리, 20년간 초등학교거리 증가량, 중학교거리, 주요도로거리, 표고, 면소재지와 표고차 군소재지와 표고차 경지율, 임야율, 답면적율 도로포장률(도로밀도), 상수도보급률, 노후주택비율, 농가비율, 신규주택비율 도시계획구역, 하수도보급률, 인구당공원수 대도시와의이격거리, 농가비율, 도로율 4.5%이상의 공실률, 불량주택비율 8%이상, 주택의 노후화
설문 및 인터뷰	마을의 접근성, 도로와의 접근성, 버스정류소와 마을간의 접근성, 대중교통 운행횟수, 마을내 진입도로 도로폭, 읍면소재지로부터의 거리, 생활복지서비스제공 시설과의 접근성, 복지·의료·교육시설과의 접근성 마을의 경사도 토지의 가격(지가), 휴경지 면적, 공간율

재 도출된 인자 중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자료의 구득가능성과 대표성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 사용될 인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될 공간구조 특성을 분석할 인자는 마을의 접근성(공간구문론에 의한 접근성), 도로율 및 도로의 접근성, 지가, 경사도, 군청 및 읍·면소재지로부터의 접근성, 휴경지 비율, 현재 경작 중인 논밭비율 지표이다.

〈표 4-54〉 최종 지표

구 분	내 용
공간구조 특성 인자 (10개)	도로율
	도로와의 접근성
	지가
	경사도
	군청으로부터의 접근성
	읍·면소재지로부터의 접근성
	휴경지 비율
	논밭비율

3) 데이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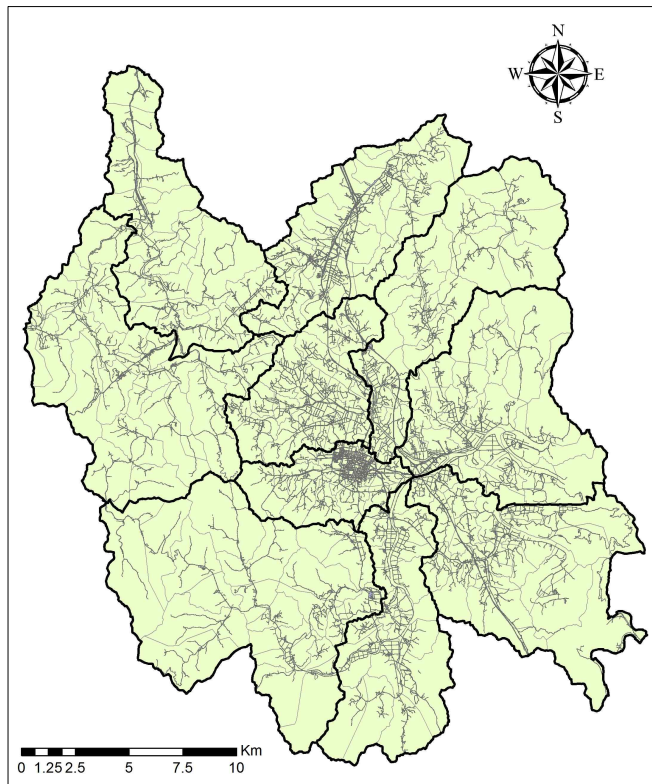
데이터 구축은 금산군 254개 행정리를 기준으로 구축하였으며, 금산군에서 제공받은 KGIS 연속지적도와 토지특성,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은 수치지도 1:5,000, 1:25,000, 2012년 희망마을만들기 자원조사표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활용하였다.

〈표 4-55〉 최종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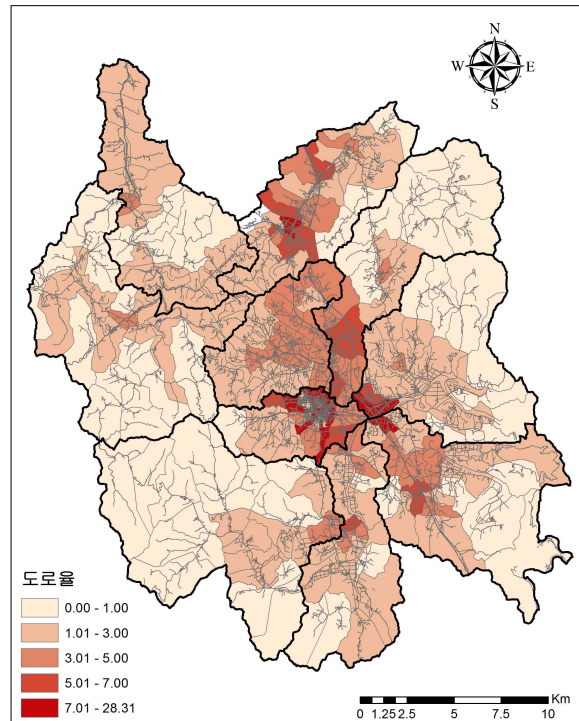
구분	내 용	데이터 구축 및 분석 방법	사용 값
공간 구조 특성 인자	마을의 접근성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활용하여 금산군 전체의 축선(Axis)을 구축한 후 전체 통합도를 분석하여 마을의 위계를 설정함	
	도로율	행정리별 도로율(도로면적/행정리면적의 비율)	비율
	도로와의 접근성	8m 이상 도로와 8m 이하 도로를 추출하여 각 행정리의 중심점(Centroid)까지의 거리 분석	최소값
	지가	토지특성의 개별공시지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필지별 지가데이터 구축 행정리별 지가의 평균값 활용	평균값
	경사도	수치지도의 등고선 및 표고점을 추출하여 TIN data 구축 후 최대값 분석	최대값
	소재지로부터의 접근성	금산군청과의 위치에 point data를 구축하여 접근성(Spatial Analyst의 Distance 분석) 지도 생성	최소값
		읍면소재지의 위치에 point data를 구축하여 접근성(Spatial Analyst의 Distance 분석) 지도 생성	최소값
	휴경지 비율	희망마을만들기 자원조사표에 의해 각 행정리별로 조사된 휴경지 비율 활용	비율
	논밭 비율	토지이용현황도에서 논과 밭 추출	비율

(1) 도로율

데이터 구축방법은 8m이상과 이하의 폴리곤 type 데이터를 구축하여 면적을 산정하고 행정리별 도로데이터로 재구축한 후 행정리별 도로 면적 및 도로율을 분석하였다.



〈그림 4-8〉 금산군 도로데이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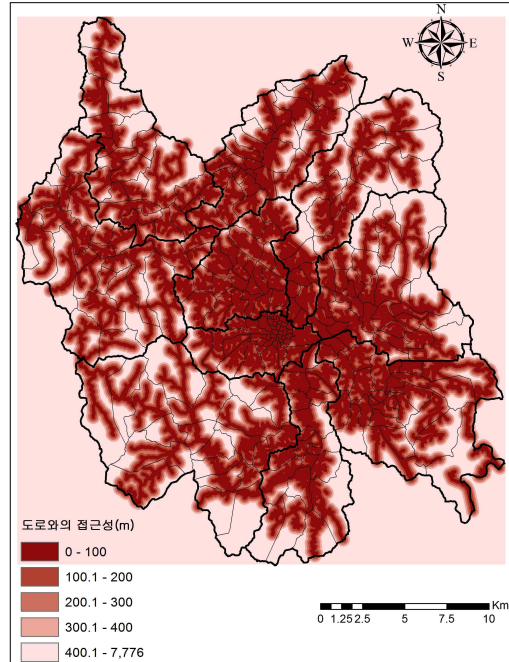


〈그림 4-9〉 행정리별 도로율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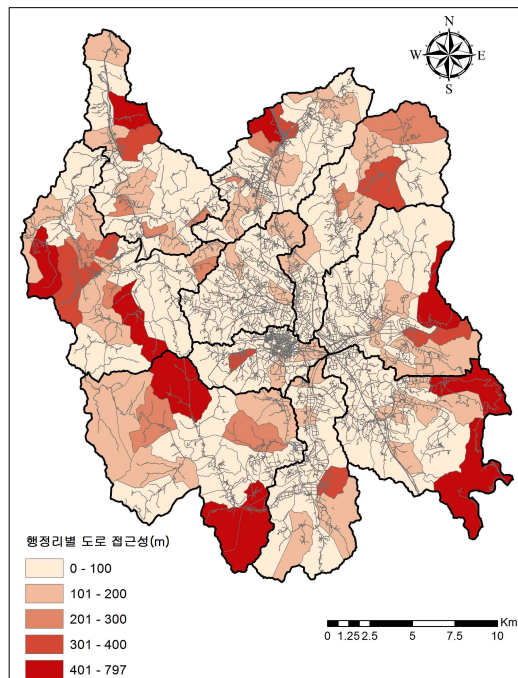
(2) 도로와의 접근성

데이터 구축방법은 8m 이상과 이하의 폴리곤 type 데이터와 행정리 중심점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의 접근성 지도를 생성하였고, 이를 행정리 중심으로부터의 최단거리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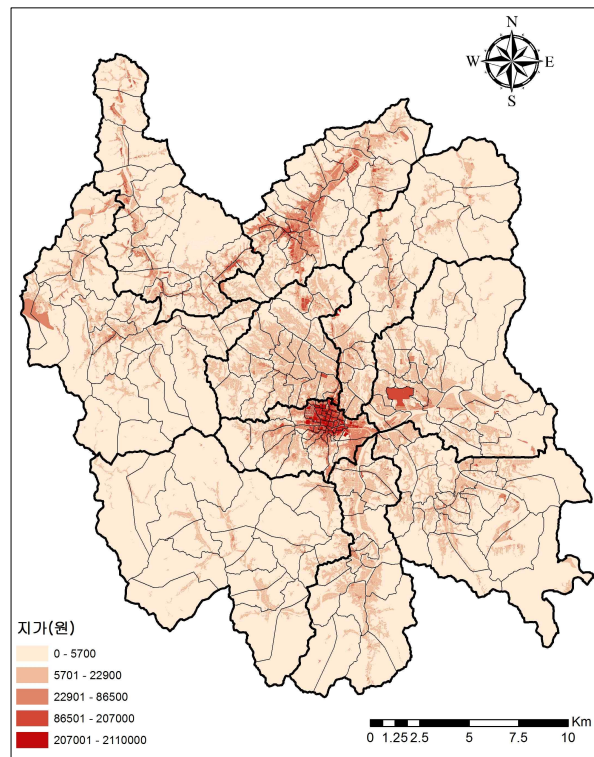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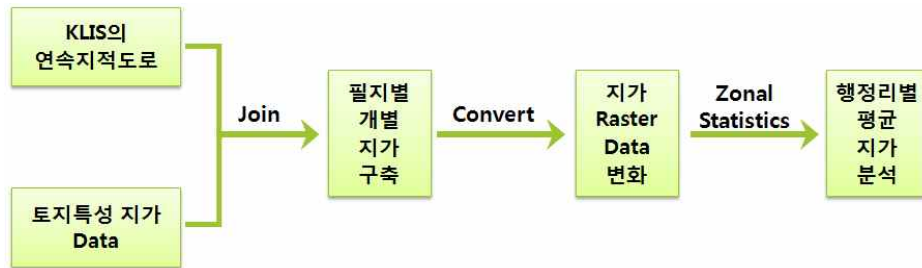
〈그림 4-10〉 행정리 도로 접근성 지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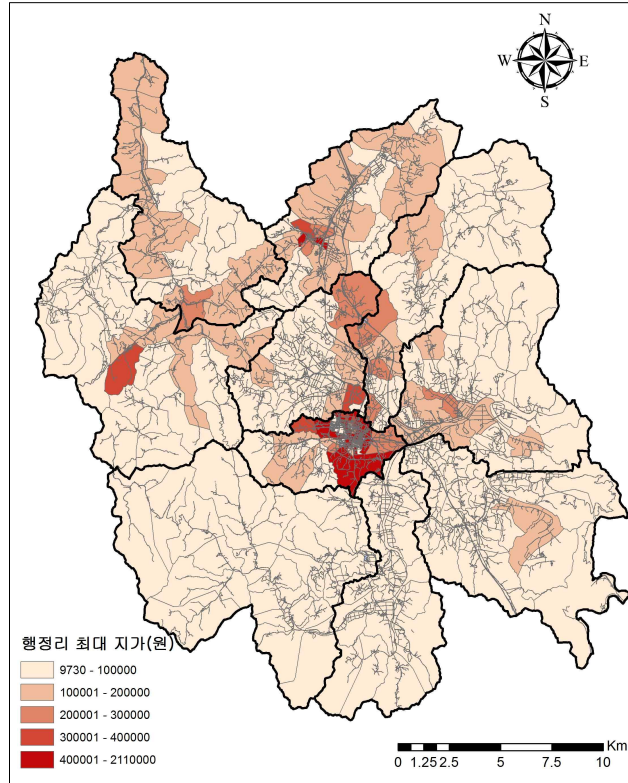
〈그림 4-11〉 행정리별 도로 접근성 분석 결과

(3) 지가데이터 구축 및 분석

KLIS 데이터의 연속지적도와 토지특성자료의 개별 공시지가 데이터를 통해 행정리별 평균 지가를 분석하였다.



〈그림 4-12〉 필지별 지가 데이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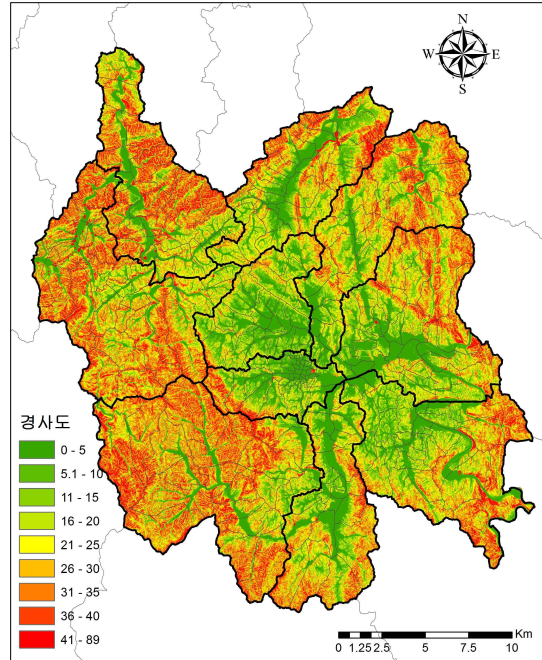


〈그림 4-13〉 행정리별 최대 지가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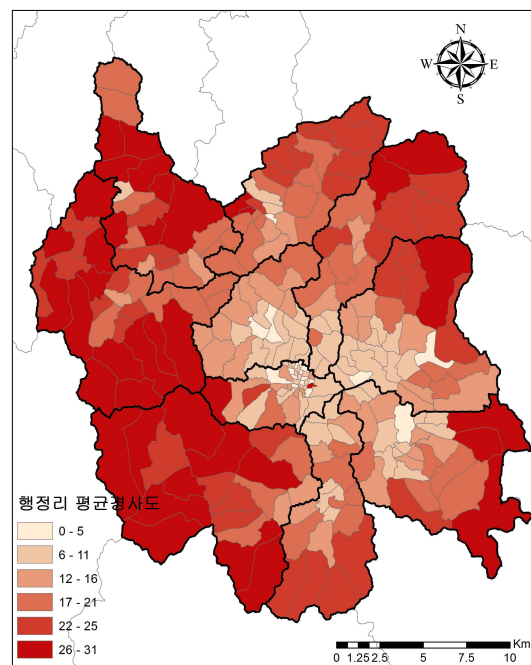
(4) 경사도 분석

수치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데이터를 활용하여 TIN data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경사데이터 및 행정리별 최대 경사데이터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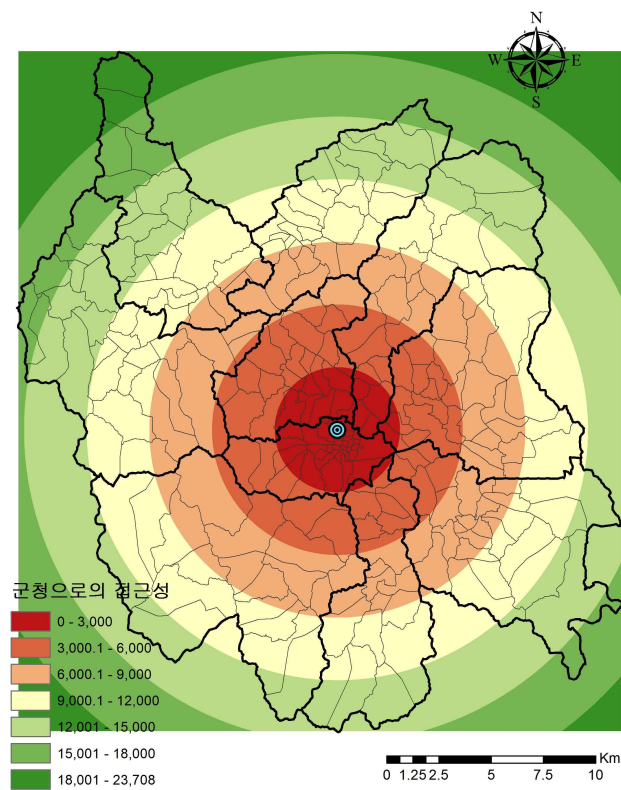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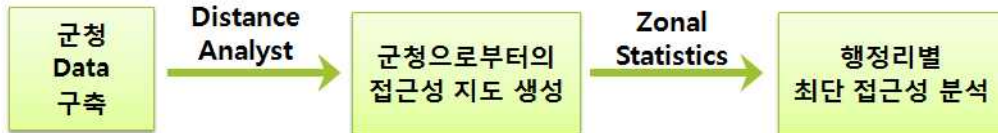
〈그림 4-14〉 경사 데이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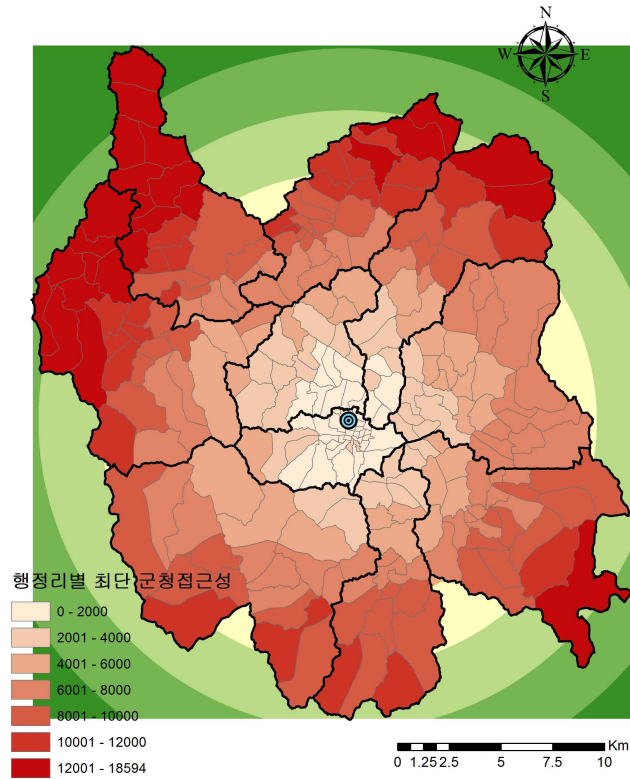
〈그림 4-15〉 행정리별 평균 경사분석 결과

(5) 군청으로부터의 접근성

군청데이터 데이터를 구축하여 Euclidean Distance 분석을 통해 군청으로부터의 접근성 지도를 생성하였고, zonal statistics 분석을 통해 행정리별 최단 접근성 지도를 생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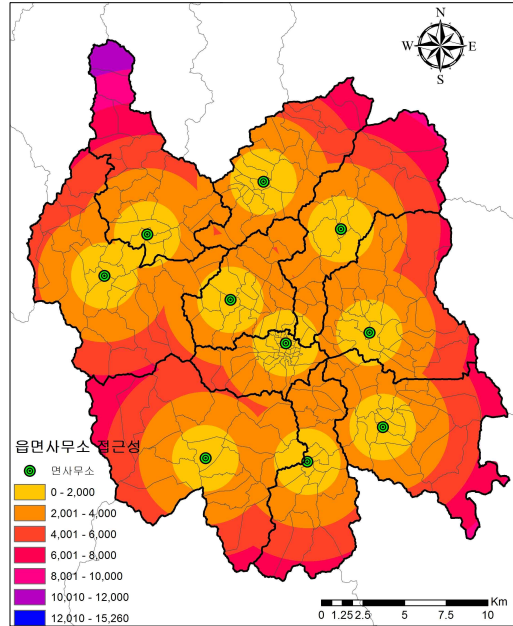
〈그림 4-16〉 군청으로부터의 접근성 데이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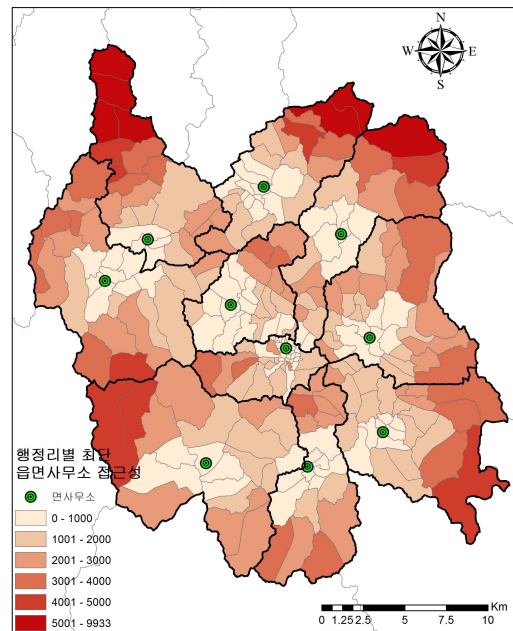
〈그림 4-17〉 행정리별 군청 최단 접근성 분석 결과

(6) 읍면사무소로부터의 접근성

읍면 사무소 데이터를 Euclidean Distance 분석을 통해 읍면사무소로부터의 접근성지도를 생성하였고, zonal statistics 분석을 통해 행정리별 최단 접근성 지도를 생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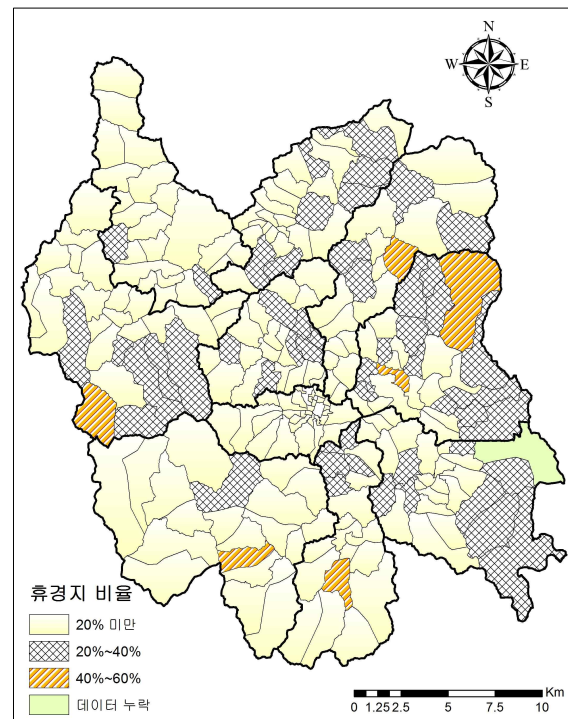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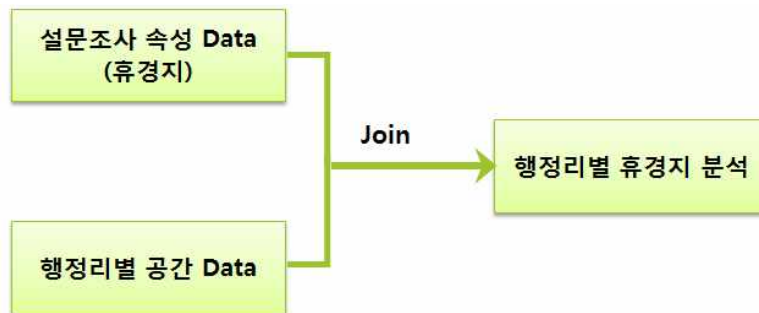
〈그림 4-18〉 읍면사무소로부터의 접근성
데이터 구축



〈그림 4-19〉 행정리별 읍면사무소 최단
접근성 분석 결과

(7) 휴경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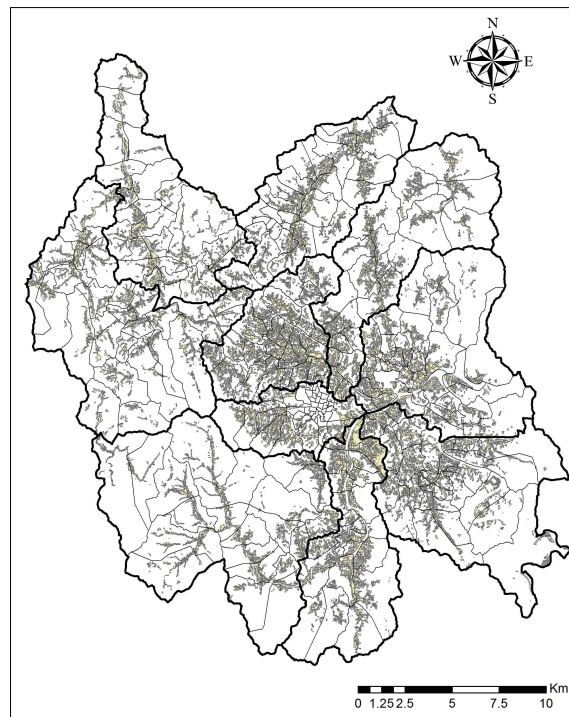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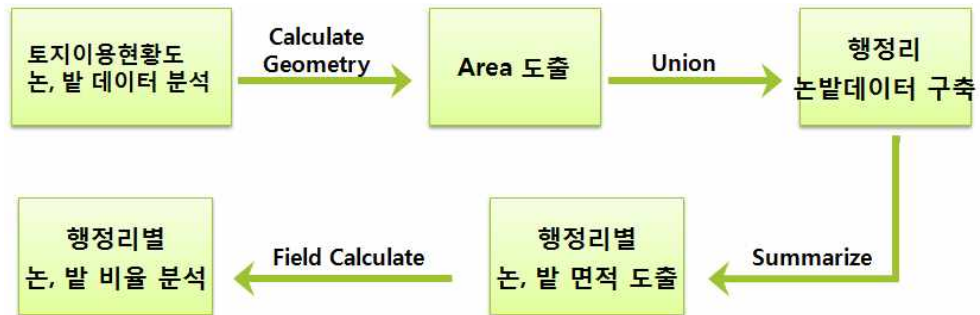
설문조사시 조사된 휴경지면적과 휴경지면적 추이 항목을 통해 행정리별 휴경지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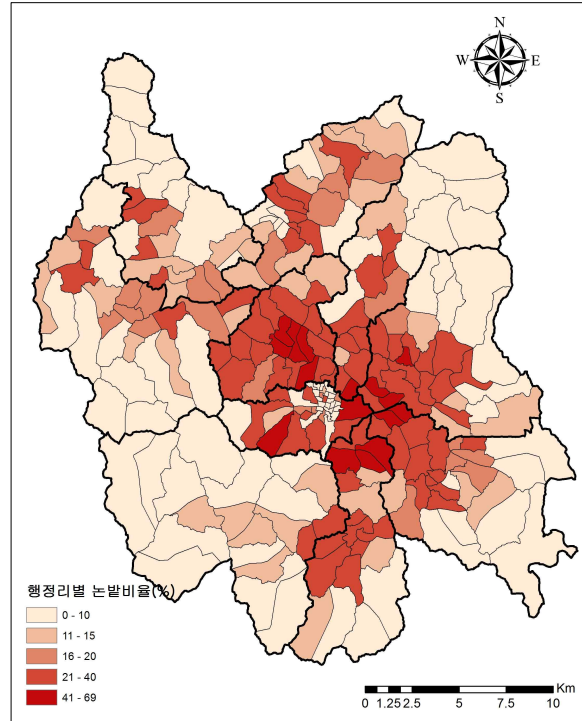
〈그림 4-20〉 행정리별 휴경지 비율

(8) 논밭 비율

토지이용현황도를 활용하여 논과 밭의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면적 분석을 통해 행정리별 논밭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행정리별 논, 밭 면적 및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림 4-21〉 금산군 논밭데이터 구축



〈그림 4-22〉 행정리별 논밭 비율 분석결과

4) 유형별 금산군 공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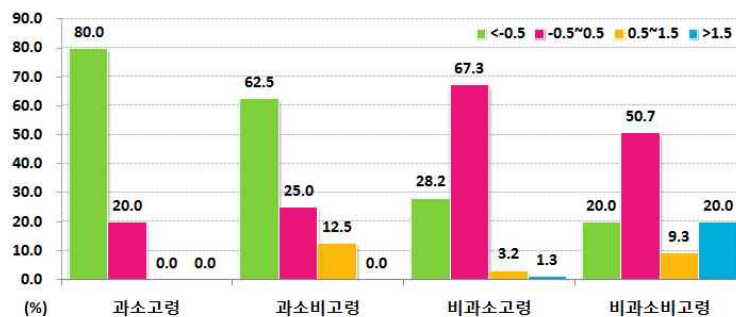
(1) 도로율 공간특성

마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과소고령마을의 경우 -0.5이하 80%로 도로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비과소고령마을의 경우도 62.5%의 낮은 도로율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비과소고령마을의 경우 표준화점수 -0.5이하의 경우 28.2%, 비과소비고령마을의 경우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0.5 이상의 구간에 약 30% 비중의 행정리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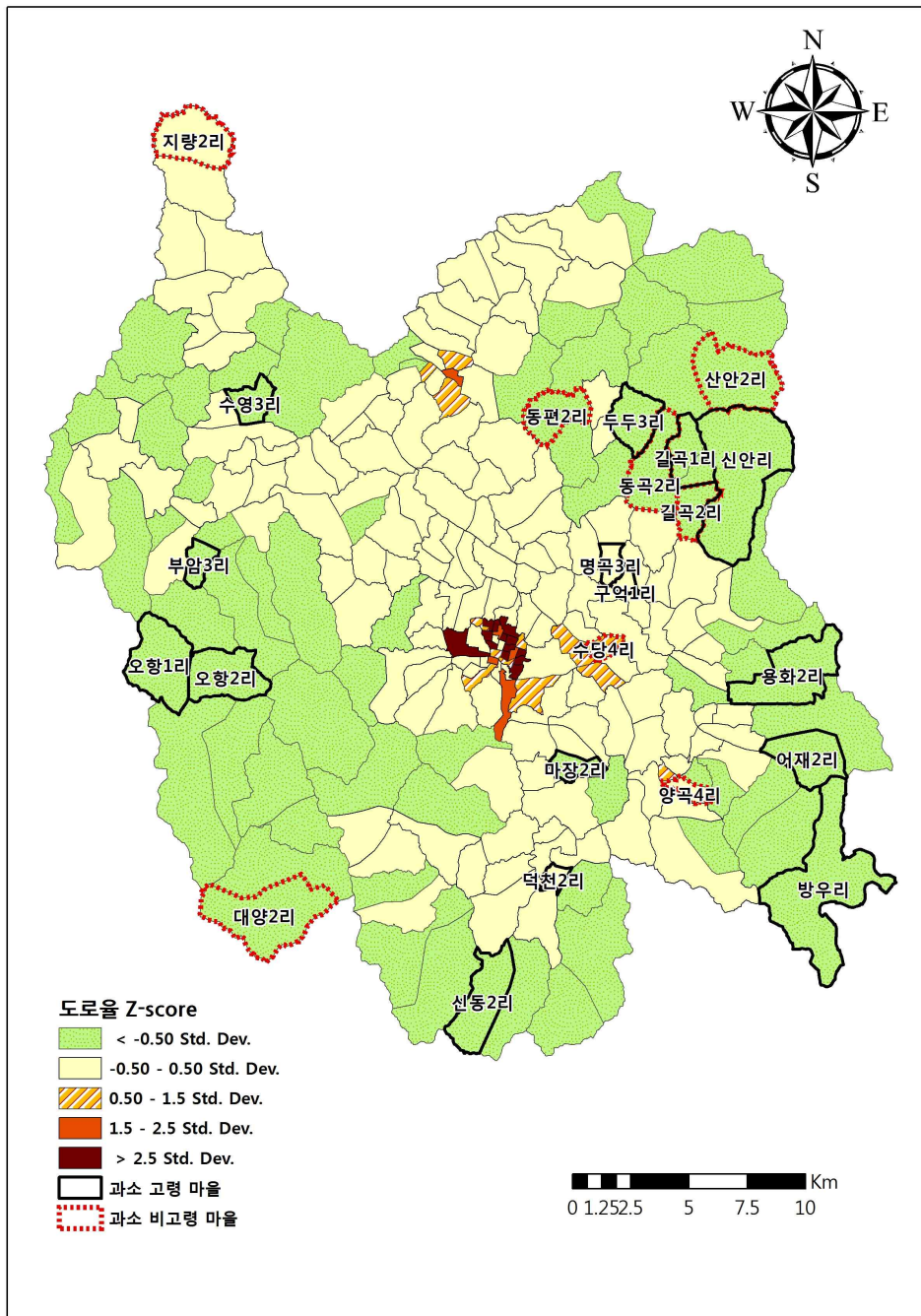
즉, 앞에서 정의한 한계마을의 기준을 통해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그 유형에 따른 공간적 구조 중 도로율과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과소고령마을과 비과소고령마을의 경우 도로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소고령마을의 경우 80%로 도로의 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6〉 4개 유형에 따른 도로율 분포

구분	과소고령		과소비고령		비과소고령		비과소비고령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0.5 미만	12	80.0	5	62.5	44	28.2	15	20.0
-0.5 ~ 0.5	3	20.0	2	25.0	105	67.3	38	50.7
0.5 ~ 1.5	0	0.0	1	12.5	5	3.2	7	9.3
1.5 초과	0	0.0	0	0.0	2	1.3	15	20.0
계	15	100.0	8	100.0	156	100.0	75	100.0



〈그림 4-23〉 4개 유형의 도로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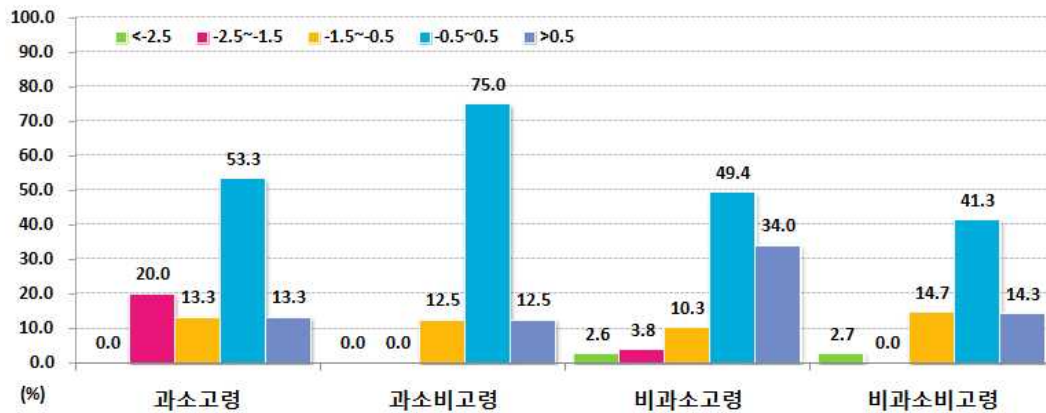
〈그림 4-24〉 도로율에 따른 마을별 분포도

(2) 도로와의 접근성 공간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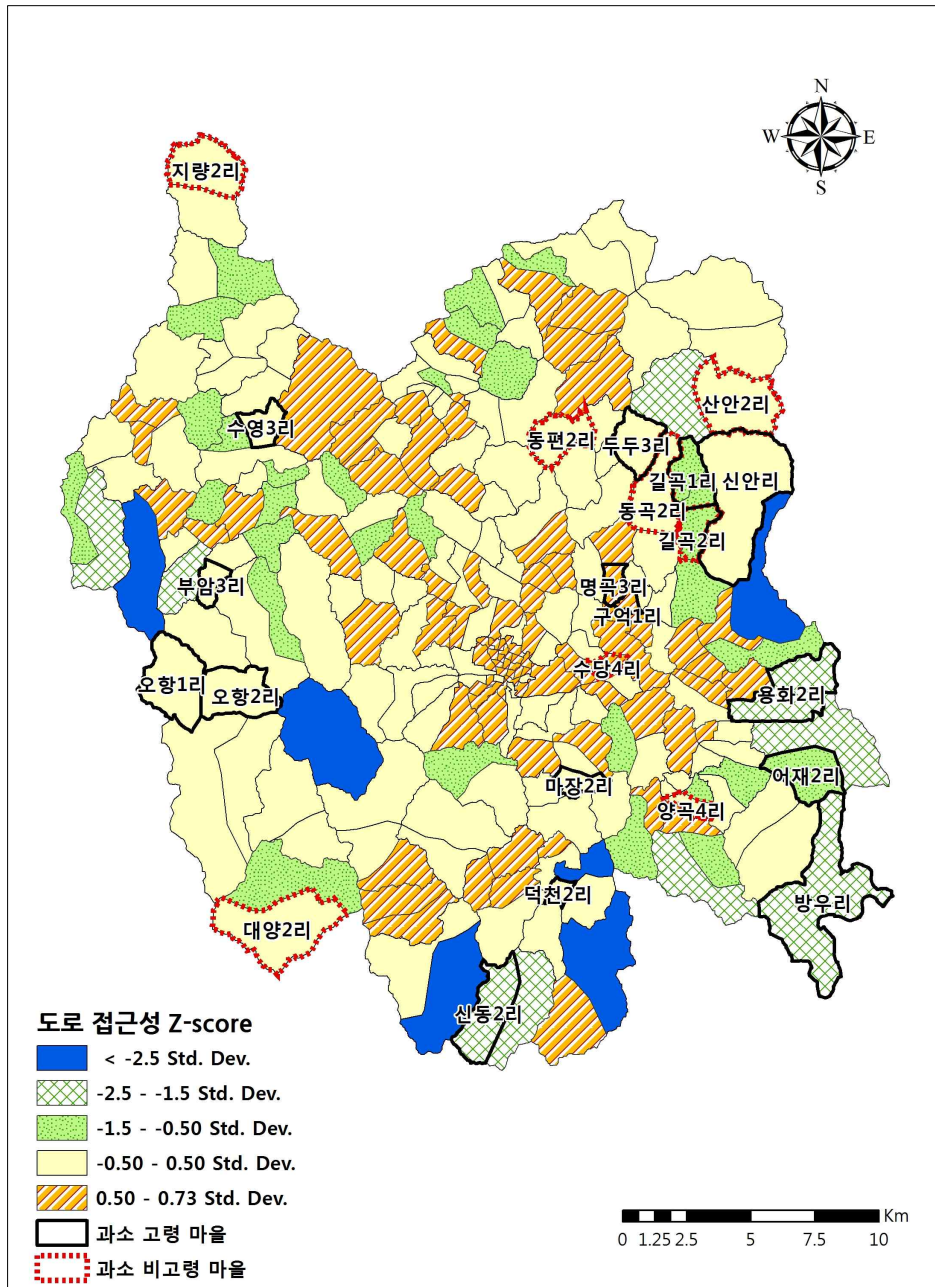
도로와의 접근성에 따른 공간특성 분석결과 -0.5이하 접근성이 과소고령 33.3%, 과소비고령 12.5%, 비과소고령 16.7%, 비과소비고령 17.4%로 도출되어 상대적으로 과소고령마을의 접근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금산군의 경우 전체적으로 도로 접근성이 4개 유형별로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특히, 비과소고령과 비과소비고령마을의 6개 행정리가 매우 도로와의 접근성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57〉 4개 유형에 따른 도로 접근성 분포

구분	과소고령		과소비고령		비과소고령		비과소비고령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2.5 미만	0	0.0	0	0.0	4	2.6	2	2.7
-2.5 ~ -1.5	3	20.0	0	0.0	6	3.8	0	0.0
-1.5 ~ -0.5	2	13.3	1	12.5	16	10.3	11	14.7
-0.5 ~ 0.5	8	53.3	6	75.0	77	49.4	31	41.3
0.5 초과	2	13.3	1	12.5	53	34.0	31	14.3
계	15	100.0	8	100.0	156	100.0	75	100.0



〈그림 4-25〉 4개 유형의 도로 접근성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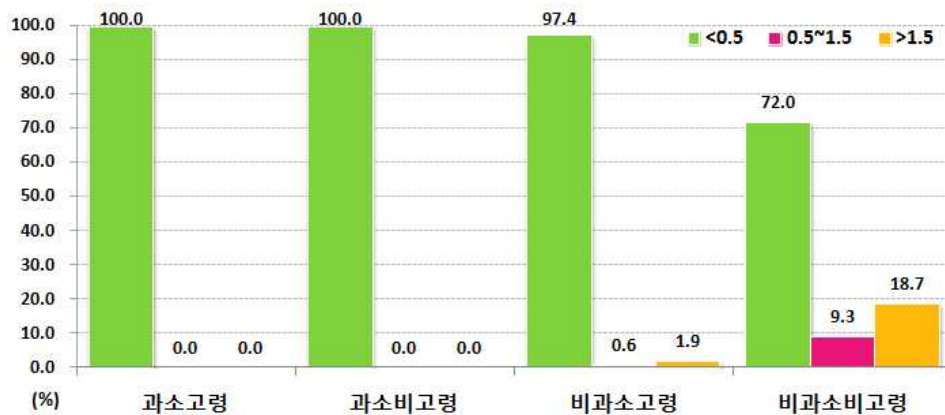
〈그림 4-26〉 도로 접근성 표준화에 따른 분포도

(3) 지가데이터 구축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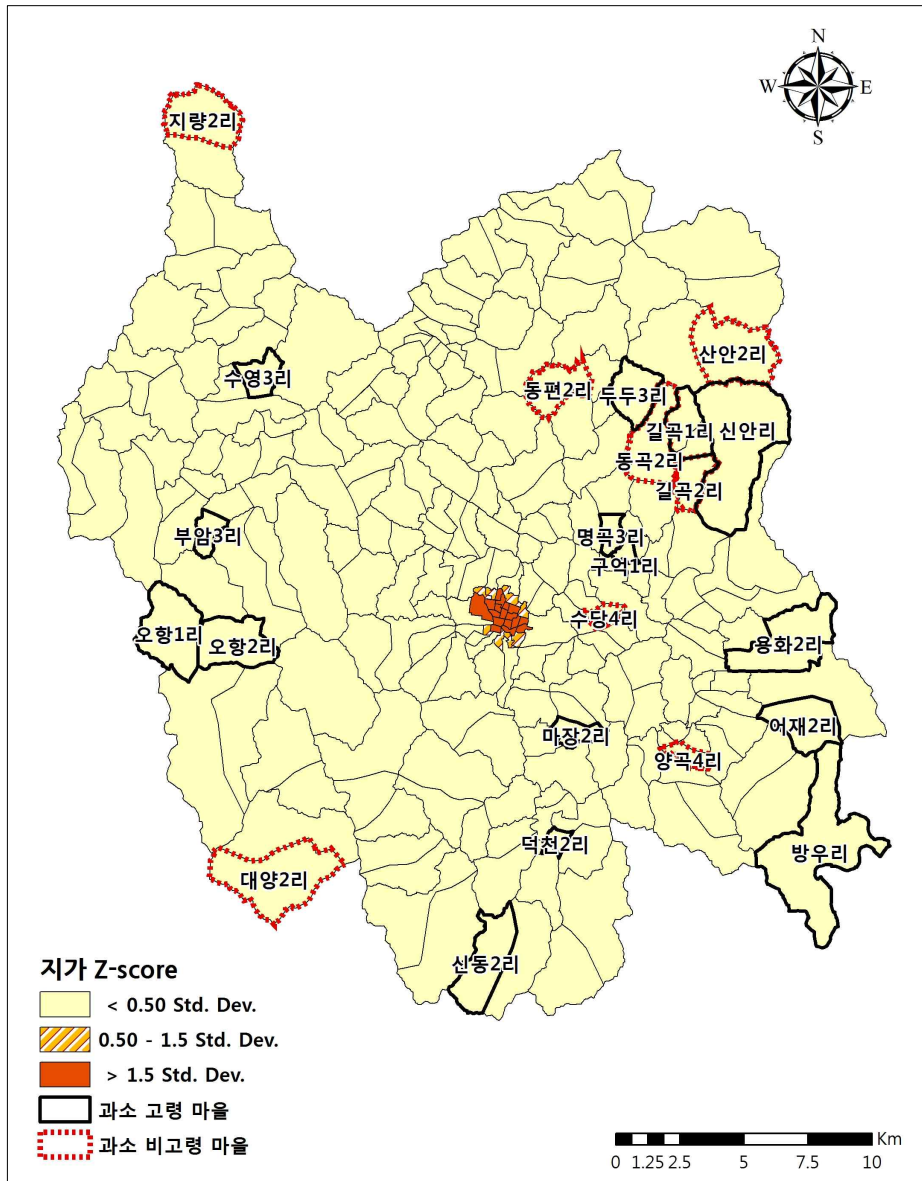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지가 분포를 분석한 결과 15개 마을 모두 가장 낮은 구간에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중소도시 군부의 경우 군청소재지가 있는 읍의 지가외에는 모두 매우 낮은 개별공시지가로 나타나기에 분산 및 표준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기에 비과소고령마을의 경우도 변별력이 높지 않게 많은 마을이 매우 낮은 구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과소비고령마을의 경우 전체의 21.3%가 z-score 1.5 이상의 상위 분포로 도출되어 다른 유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8〉 4개 유형에 따른 지가 분포

구분	과소고령		과소비고령		비과소고령		비과소비고령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0.5 미만	15	100.0	8	100.0	152	97.4	54	72.0
0.5 ~ 1.5	0	0.0	0	0.0	1	0.6	7	9.3
1.5 초과	0	0.0	0	0.0	3	1.9	14	18.7
계	15	100.0	8	100.0	156	100.0	75	100.0



〈그림 4-27〉 4개 유형의 지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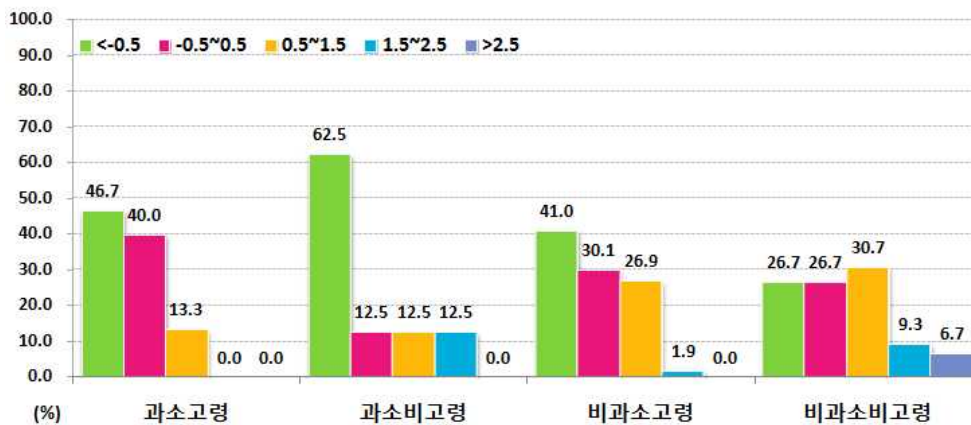
〈그림 4-28〉 지가 분석에 따른 분포도

(4) 경사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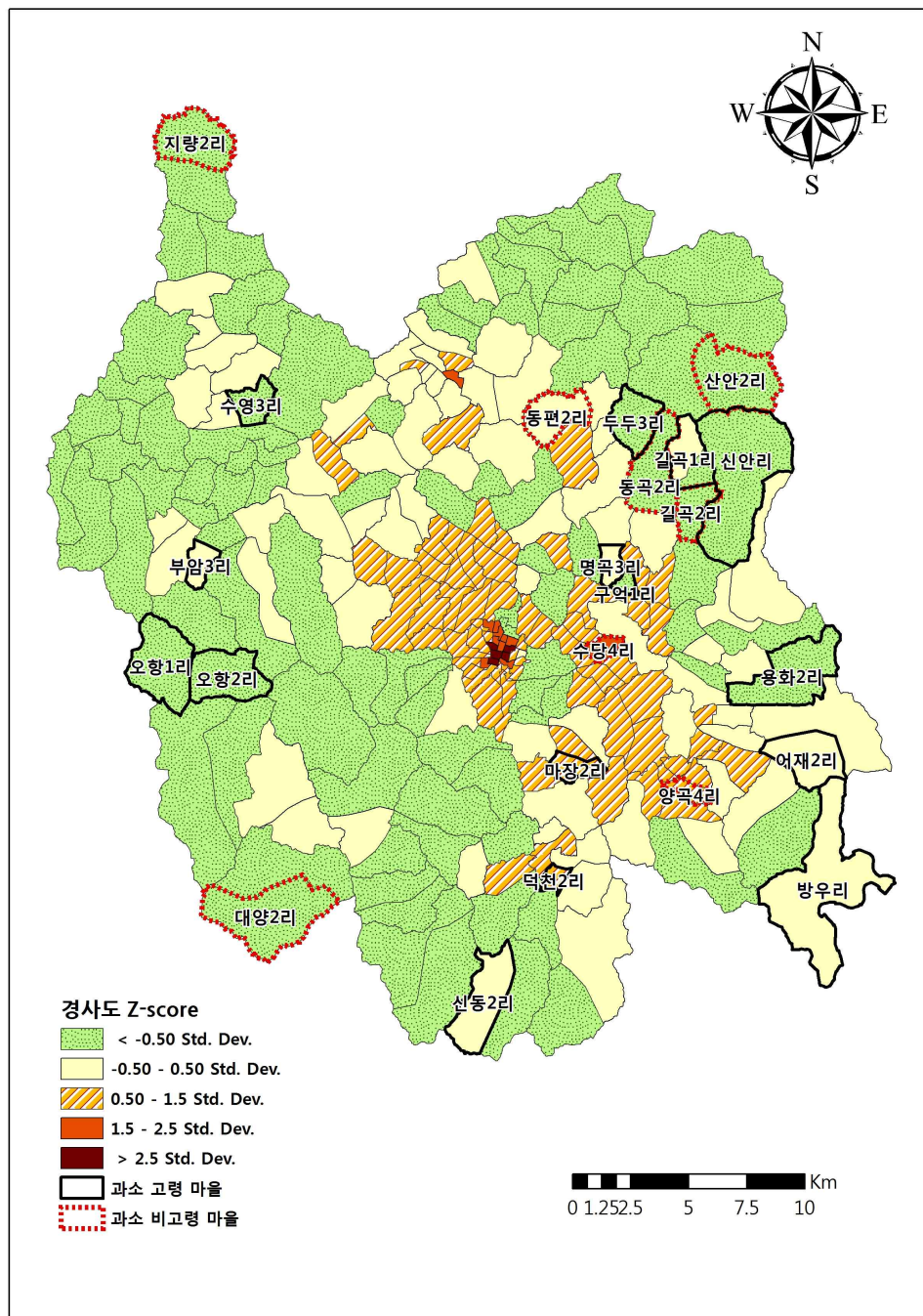
과소고령마을의 경우 -0.5이하의 z-score 구간에 53.3% 입지되어있으며, 과소비고령마을 50.0%, 비과소고령마을 37.2%, 비과소비고령마을 25.3%가 분포된 것으로 도출되었다. 경사도의 경우도 앞의 군청으로부터의 접근성과 동일하게 과소고령마을이 경사도가 완만한 행정리가 도출되거나, 비과소비고령마을에 매우 급한 경사도 분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마을의 특성이 모두 상이하기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이러한 마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한 마을 특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즉, 경사도의 경우 마을의 특성을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4-59〉 4개 유형에 따른 경사도 분포

구분	과소고령		과소비고령		비과소고령		비과소비고령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0.5 미만	7	46.7	5	62.5	64	41.0	20	26.7
-0.5 ~ 0.5	6	40.0	1	12.5	47	30.1	20	26.7
0.5 ~ 1.5	2	13.3	1	12.5	42	26.9	23	30.7
1.5 ~ 2.5	0	0.0	1	12.5	3	1.9	7	9.3
2.5 초과	0	0.0	0	0.0	0	0.0	5	6.7
계	15	100.0	8	100.0	156	100.0	75	100.0



〈그림 4-29〉 4개 유형의 경사도 분포



〈그림 4-30〉 경사도 분석에 따른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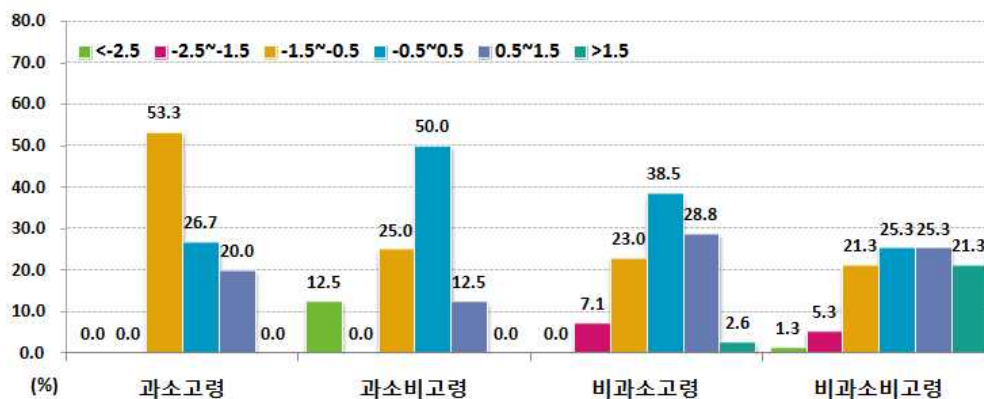
(5) 군청으로부터의 접근성

과소고령마을의 경우 -0.5이하의 z-score 구간에 40% 입지되어있으며, 과소비고령마을 25.0%가 분포되어 있다. 비과소고령마을과 비과소비고령마을의 경우 z-score 0.5 이상의 구간에 32.1%, 48.0%가 분포되어 공간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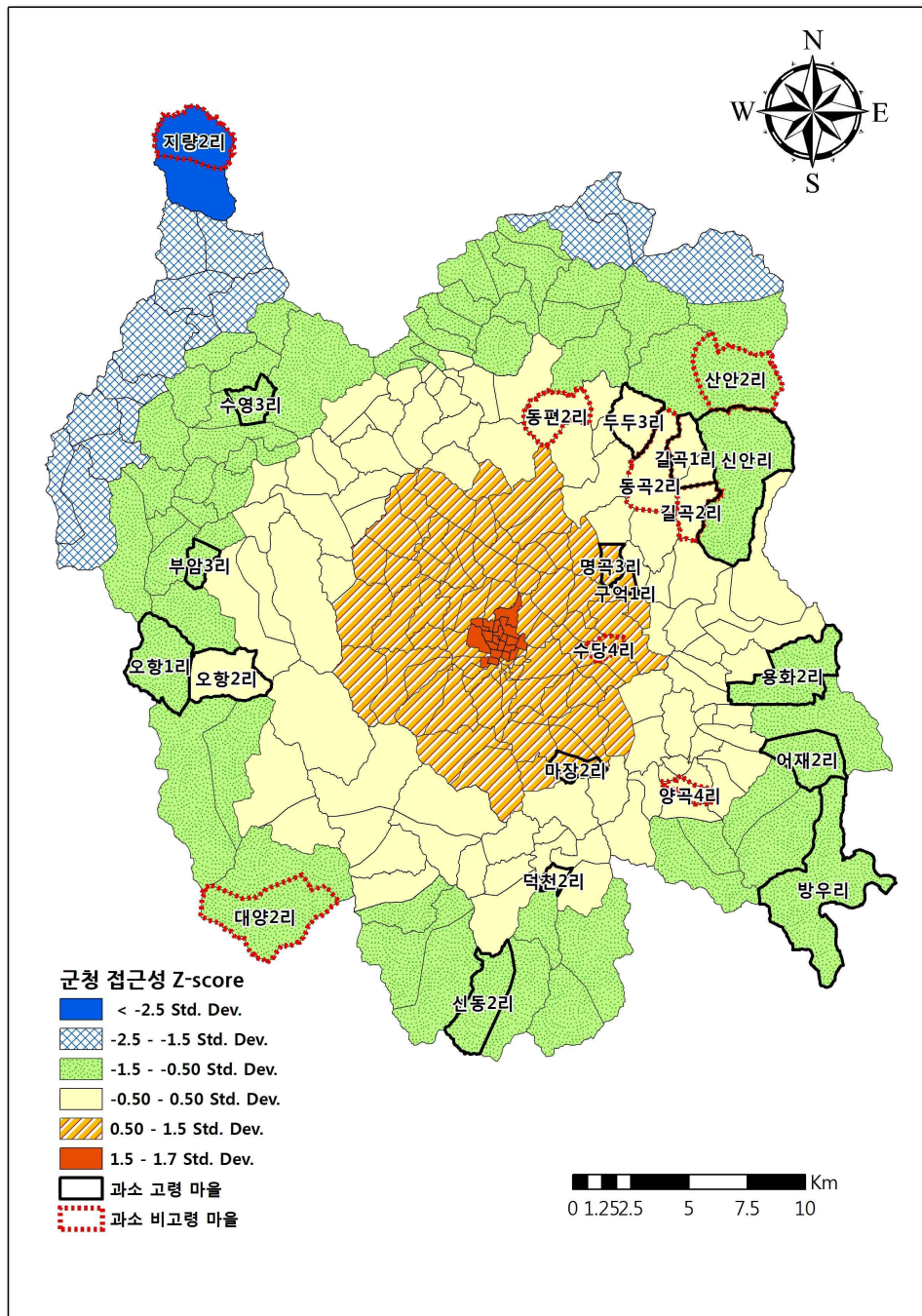
비과소비고령마을의 경우도 -2.5미만 z-score 구간에 지량1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2.5 ~ -1.5 구간에도 5개 행정리가 포함되어 있어 군청과의 접근성에 따라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는 앞의 농촌마을 일반특성 결과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마을의 특성이 모두 상이하기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이러한 마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한 마을 특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표 4-60〉 4개 유형에 따른 군청 접근성 분포

구분	과소고령		과소비고령		비과소고령		비과소비고령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2.5 미만	0	0.0	1	12.5	0	0.0	1	1.3
-2.5 ~ -1.5	0	0.0	0	0.0	11	7.1	4	5.3
-1.5 ~ -0.5	8	53.3	2	25.0	36	23.1	16	21.3
-0.5 ~ 0.5	4	26.7	4	50.0	60	38.5	19	25.3
0.5 ~ 1.5	3	20.0	1	12.5	45	28.8	19	25.3
1.5 초과	0	0.0	0	0.0	4	2.6	16	21.3
계	15	100.0	8	100.0	156	100.0	75	100.0



〈그림 4-31〉 4개 유형의 군청 접근성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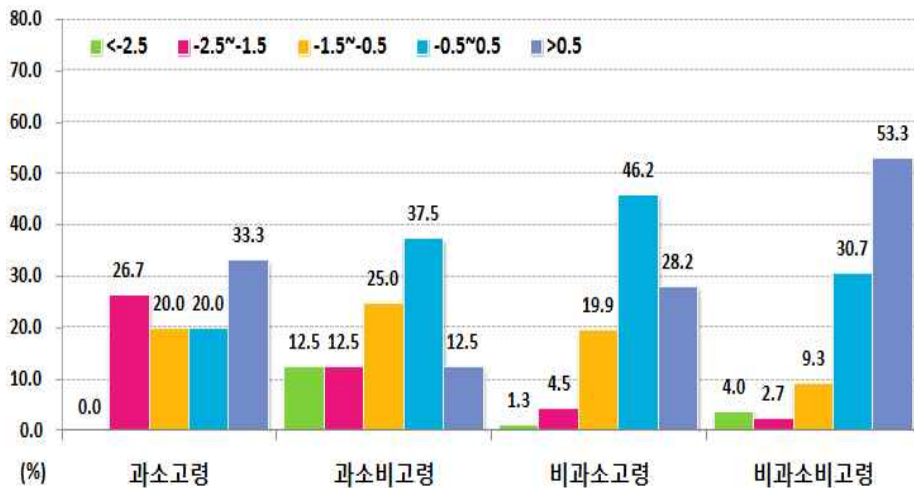
〈그림 4-32〉 군청접근성에 따른 분포도

(6) 읍면사무소로부터의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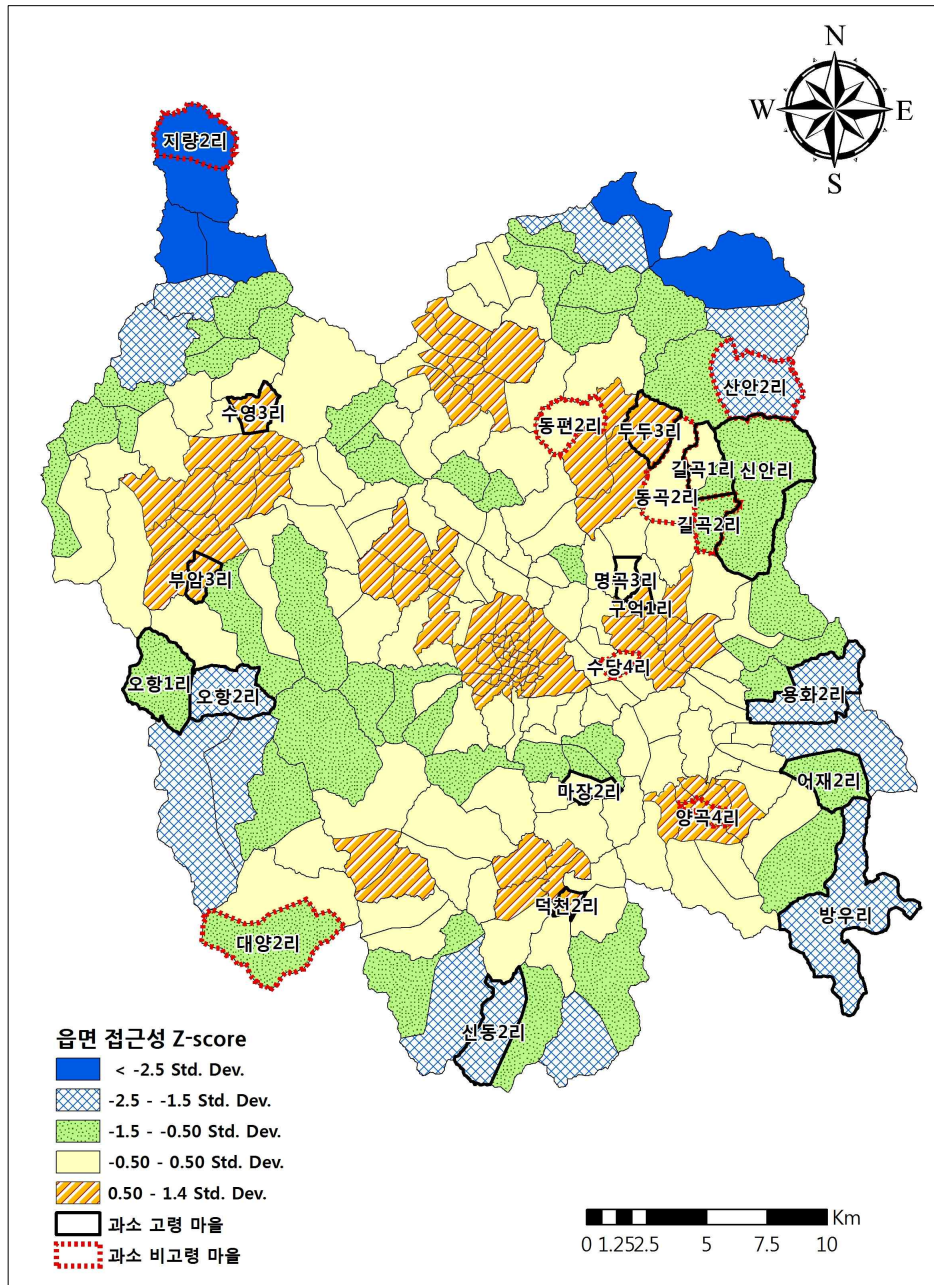
읍면으로부터 접근성에 대한 4개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비과소비고령 84.0%, 비과소고령 74.4%, 과소비고령 50.0%, 과소고령 53.3% 순으로 도출되었고 비과소비고령마을이 월등히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0.5이상). 그러나 과소고령과 과소비고령의 읍면사무소로부터의 접근성은 구간별 분포가 유사하게 되어 있어, 공간특성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1〉 4개 유형에 따른 읍면 접근성 분포

구분	과소고령		과소비고령		비과소고령		비과소비고령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2.5 미만	0	0.0	1	12.5	2	1.3	3	4.0
-2.5 ~ -1.5	4	26.7	1	12.5	7	4.5	2	2.7
-1.5 ~ -0.5	3	20.0	2	25.0	31	19.9	7	9.3
-0.5 ~ 0.5	3	20.0	3	37.5	72	46.2	23	30.7
0.5 초과	5	33.3	1	12.5	44	28.2	40	53.3
계	15	100.0	8	100.0	156	100.0	75	100.0



〈그림 4-33〉 4개 유형의 읍면 접근성 분포



〈그림 4-34〉 읍면 접근성에 따른 분포도

5)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공간특성분석

금산군 한계마을 공간특성 분석을 위해 한계마을을 특징짓는 공간인자를 도출하여 공간데이터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앞의 4)에서 4개 유형별 공간인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앞의 분석결과에서 비교적 높은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4개 유형화된 결과)의 특징으로 도출된 도로율, 지가, 경사도, 군청접근성의 공간적 특성 데이터의 공간적 분석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율의 경우 금산군 전체 평균 3.68로 도출되었으나 과소고령마을의 경우 평균 1.19로 매우 낮으며 과소비고령마을도 1.99로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지가의 경우 금산군 전체평균 176,356.98원이나 과소고령마을은 2713.95, 과소비고령마을은 3025.0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경사도의 경우 금산군 전체 경사도 평균은 16.46° 이나 과소고령마을의 경우 64.38°, 과소비고령마을의 경우 62.71°로 매우 경사가 가파른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군청과의 접근성도 평균보다 접근성이 불량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4-62〉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공간 분석 현황

구분	읍면동	행정리	도로율	지가	경사도	군청접근성	인구수	고령화율
과소 고령 마을 (15 개)	군북면	두두3리	1.02	1080.52	54.13	8075.28	25	0.68
	남일면	덕천2리	0.73	4791.24	36.78	8103.39	41	0.59
	남일면	마장2리	2.83	2433.08	46.35	4849.99	35	0.77
	남일면	신동2리	0.70	797.98	51.56	10130.20	43	0.79
	복수면	수영3리	0.78	2896.15	77.25	10526.40	40	0.95
	부리면	방우리	0.86	749.20	67.70	12294.50	44	0.77
	부리면	어재2리	0.44	1230.59	64.87	9745.30	12	1.00
	제원면	구억1리	0.44	7794.68	71.03	4487.79	37	1.00
	제원면	길곡1리	0.71	1460.53	81.61	7928.17	45	0.82

	제원면	명곡3리	2.72	11141.60	71.03	4053.38	15	1.00
	제원면	신안리	4.31	598.08	86.34	7582.29	18	0.56
	제원면	용화2리	0.88	2601.13	50.62	7977.40	27	1.00
	진산면	부암3리	0.26	2119.09	49.38	9906.39	35	0.86
	진산면	오항1리	0.85	676.35	86.27	10060.30	43	0.60
	진산면	오항2리	0.37	338.97	70.79	7716.96	28	0.64
평균			1.19	2713.95	64.38	8229.18	32.53	0.80
과소 비고 령마 을 (8개)	군북면	동편2리	0.25	1054.53	48.76	6583.64	45	0.42
	군북면	산안2리	0.57	872.21	87.93	10666.00	40	0.43
	남이면	대양2리	0.66	636.40	75.24	10790.80	45	0.33
	북수면	지랑2리	1.84	4689.52	83.82	18594.30	45	0.44
	부리면	양곡4리	1.51	3968.37	39.42	7886.00	46	0.33
	제원면	길곡2리	0.69	1289.62	82.83	6869.36	46	0.43
	제원면	동곡2리	0.55	1107.72	75.81	6301.65	40	0.35
	제원면	수당4리	9.87	10581.80	7.87	3317.27	35	0.20
평균			1.99	3025.02	62.71	8876.13	42.75	0.37
금산군 전체 평균			3.68	176356.98	16.46	6546.13	199.36	0.137

※ 경사도와 군청접근성 인자는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참고로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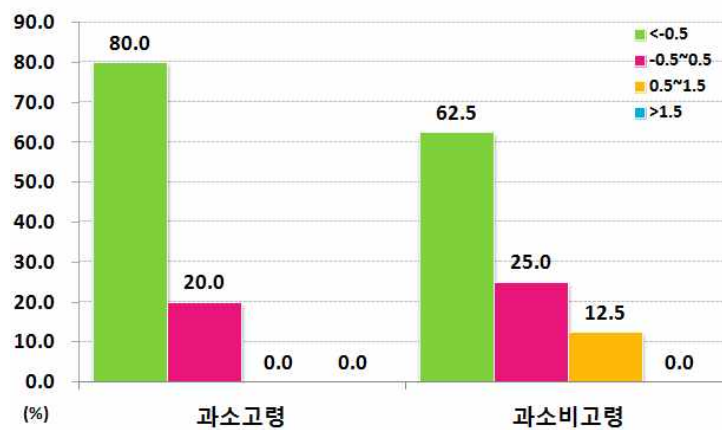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도로율, 지가, 군청과의 접근성, 경사도 등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인자의 표준화 점수를 구한다. 표준점수는 표준정상분포에서 구하며, 한 표집 자료에서 모든 z 점수의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이다. 표준화점수의 분포를 통해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분포를 분석하여 특성을 도출하였다.

(1) 도로율

앞에서 정의한 한계마을의 기준을 통해 구분된 4개 유형에 따른 공간적 구조 중 도로율과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경우 도로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소고령마을의 경우 80%로 도로의 구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3〉 도로율 표준화에 따른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 분포

구분	과소고령마을	비율	과소비고령마을	비율
-0.5 이하	군북면 두두3리 제원면 길곡1리 남일면 마장2리 제원면 신안리 남일면 신동2리 제원면 용화2리 복수면 수영3리 진산면 부암3리 부리면 방우리 진산면 오항1리 부리면 어재2리 진산면 오항2리	80.0	군북면 동편2리 군북면 산안2리 남이면 대양2리 제원면 길곡2리 제원면 동곡2리	62.5
-0.5 ~ 0	남일면 덕천2리 제원면 명곡3리	13.3	복수면 지량1리 부리면 양곡4리	25.0
0 ~ 0.5	제원면 구억1리	6.7	-	-
0.5 이상	-	-	제원면 수당4리	12.5
계	15개	100.0	8개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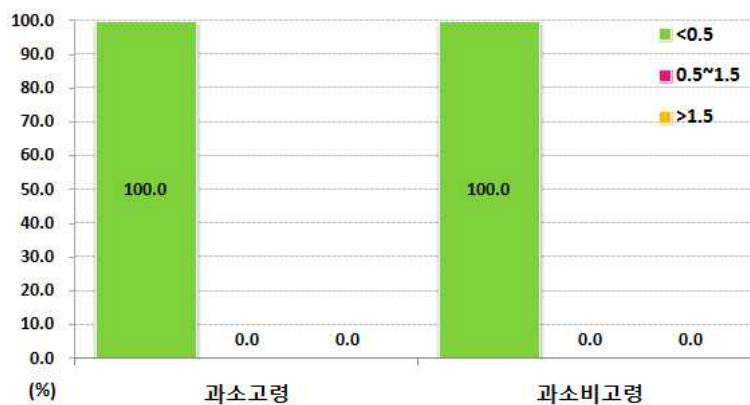
〈그림 4-35〉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도로율 분포

(2) 지가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지가 분포를 분석한 결과 15개 마을 모두 가장 낮은 지가의 구간에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4〉 지가 표준화에 따른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 분포

구분	과소고령마을	비율	과소비고령마을	비율
0.5 미만	군북면 두두3리 제원면 구억1리 남일면 덕천2리 제원면 길곡1리 남일면 마장2리 제원면 명곡3리 남일면 신동2리 제원면 용화2리 복수면 수영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방우리 진산면 부암3리 부리면 어재2리 진산면 오항1리 진산면 오항2리	100.0	군북면 동편2리 군북면 산안2리 남이면 대양2리 복수면 지랑2리 부리면 양곡4리 제원면 길곡2리 제원면 동곡2리 제원면 수당4리	100.0
0.5 ~ 1.5	-	0.0	-	0.0
1.5 초과	-	0.0	-	0.0
계	15개	100.0	8개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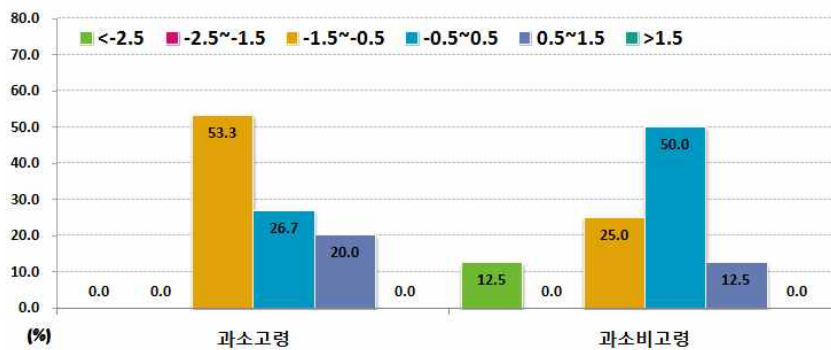
〈그림 4-36〉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지가 분포

(3) 군청과의 접근성

과소고령마을의 경우 -0.5이하의 z-score 구간에 53.3% 입지되어있으며, 과소비고령마을 37.5%가 분포되어 있다. 앞의 4개 유형의 공간특성 분석의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과소 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경우도 군청과의 접근성이 낮은 행정리가 포함된 것으로 도출되었기에 군청과의 접근성에 따라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는 앞의 농촌마을 일반특성 결과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마을의 특성이 모두 상이하기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표 4-65〉 군청 접근성 표준화에 따른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 분포

구분	과소고령마을	비율	과소비고령마을	비율
-2.5 미만	-	0.0	복수면 지랑2리	12.5
-2.5 ~ -1.5	-	0.0	-	0.0
-1.5 ~ -0.5	남일면 신동2리 복수면 수영3리 부리면 방우리 부리면 어재2리	53.3	제원면 산안2리 남이면 대양2리	25.0
-0.5 ~ 0.5	제원면 신안리 제원면 용화2리 진산면 부암3리 진산면 오항1리	26.7	군북면 동편2리 부리면 양곡4리 제원면 길곡2리 제원면 동곡2리	50.0
0.5 ~ 1.5	군북면 두두3리 남일면 덕천2리	20.0	제원면 수당4리	12.5
1.5 초과	-	0.0	-	0.0
계	15개	100.0	8개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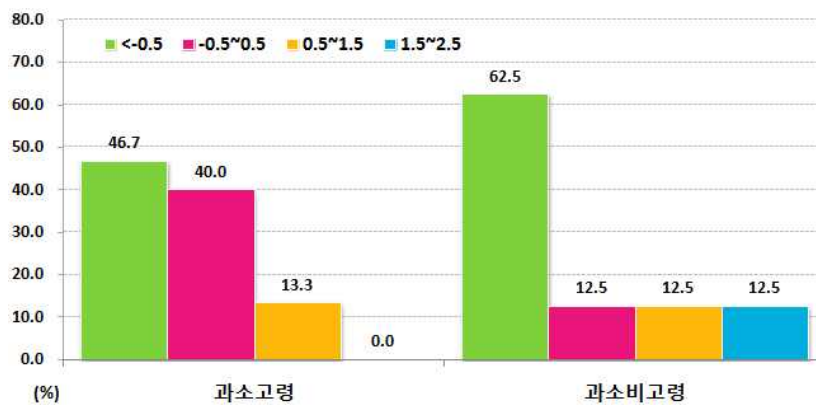
〈그림 4-37〉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군청 접근성 분포

(4) 경사도

과소고령마을의 경우 -0.5이하의 z-score 구간에 53.3% 입지되어있으며, 과소비고령마을 50.0%가 분포된 것으로 도출되었다. 경사도의 경우도 앞의 군청으로부터의 접근성과 동일하게 비과소비고령마을에 매우 급한 경사도 분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사도의 인자는 한계마을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 인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4-66〉 경사도 표준화에 따른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 분포

구분	과소고령마을	비율	과소비고령마을	비율
-0.5 미만	군북면 두두3리 북수면 수영3리 제원면 구억1리 제원면 신안리 제원면 용화2리 진산면 오항1리 진산면 오항2리	46.7	군북면 산안2리 남이면 대양2리 북수면 지량2리 제원면 길곡2리 제원면 동곡2리	62.5
-0.5 ~ 0.5	남일면 신동2리 부리면 방우리 부리면 어재2리 제원면 길곡1리 제원면 명곡3리 진산면 부암3리	40.0	군북면 동편2리	12.5
0.5 ~ 1.5	남일면 덕천2리 남일면 마장2리	13.3	부리면 양곡4리	12.5
1.5 ~ 2.5	-	0.0	제원면 수당4리	12.5
2.5 초과	-	0.0	-	0.0
계	15개	100.0	8개	100.0



〈그림 4-38〉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경사도 분포

6) 소결

본 절에서는 금산군 254개 행정리별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한 4개 마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특성 인자를 도출하여 유형별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문헌검토 및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 공간 특성 인자 8개를 도출하였고, 분석을 위해 GIS Spatial Analyst, Spatial Join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분석을 통해 금산군의 유형별 공간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검토 및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사용된 공간 특성 인자는 도로율, 도로의 접근성, 지가, 경사도, 군청으로부터의 접근성, 읍면소재지로부터의 접근성, 휴경지 비율, 현재 경작중인 논밭비율, 8개 지표이다. 8개 지표 중 현재 구축된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 획득의 어려움으로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8개의 지표 중 도로율의 경우 금산군 전체 평균 3.68로 도출되었으나 과소고령마을의 경우 평균 1.19로 매우 낮으며 과소비고령마을도 1.99로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지가의 경우 금산군 전체평균 176,356.98원이나 과소고령마을은 2713.95원, 과소비고령마을은 3025.02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사도의 경우 금산군 전체 경사도 평균은 16.46도이나 과소고령마을의 경우 64.38도, 과소비고령마을의 경우 62.71도로 매우 경사가 가파른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군청과의 접근성도 평균보다 접근성이 불량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즉, 과소고령마을뿐만 아니라 과소비고령마을의 경우 도로율이 현저히 낮고, 지가도 매우 낮으며, 경사도는 매우 가파른 지역에 위치하고 군청과의 접근성도 매우 불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z-score의 분포를 통해 마을의 분포를 살펴보면 도로율은 z-score -0.5이하 구간에 과소고령마을 80%가 분포되어있으며, 과소비고령마을의 경우 62.5%, 비과소고령마을 28.2%, 비과소비고령마을 20%가 분포되어 과소고령마을은 도로율이 매우 낮은 공간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가 인자는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 모두 평균에서 가장 낮은 구간에 100%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중소도시 군부의 개별공시지가는 군청소재지가 있는 읍지역외에는 모두 매우 낮은 개별공시지가로 표준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기에 구간의 변별력이 다소 낮은 한계가 있다. 비과소비고령마을의 경우 전체 26.7%가 0.5이상의 상위 구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도출되어 다른 유형과 지가에 대한 공간 특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사도와 군청과의 접근성에 대한 공간적 특성은 농촌마을 특성상 마을별 특징이 모두 상이하기에 공간적 특성 및 상호성이 미미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금산군은 공간적 접근성 및 편의시설, 자연환경 등의 영향과 한계마을과는 영향이 미미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도시기반 시설 부족 및 개별공장 및 건축물의 개발행위가 거의 없는 특징이 도출되었다.

연구한계로는 행정리 중심점 데이터 구축 시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을 제외하고 사람의 개발행위가 있는 지역을 추출하여 행정리의 중심점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유형별 특징이 좀 더 명확하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공간구문론에 따른 마을의 접근성에 관한 공간 특성인자 등을 새롭게 발굴·추가 분석된다면, 보다 정확한 공간특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4. 농촌마을 정주실태 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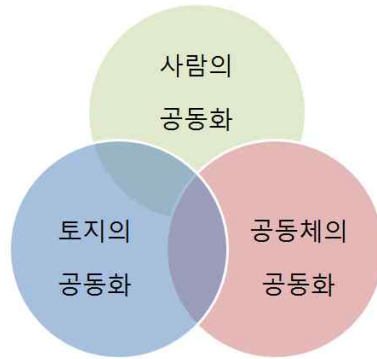
1) 조사 및 분석개요

본 절에서는 충남도내 한계마을의 실태와 주민들의 생활여건, 그리고 정책 요구에 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그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계마을의 실태와 주민들의 생활여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마을인구 및 정주환경 변화 실태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마을의 총 인구, 총 가구 수, 초중고 학생 수, 청년 수, 65세 이상 인구수, 독거노인 수, 중증환자 수, 빈집 수, 전출입 현황 등 인구 변화적 측면을 먼저 파악하고, 아울러 주민의 건강과 교통, 상하수도 등 정주와 생활환경에 관한 조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토지이용 및 환경변화 실태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마을주민의 소득원, 경작 형태와 품목, 유휴면적과 이유, 마을 내 토지거래와 이에 대한 주민의 반응, 영농의 지속가능성과 하천 및 경관의 훼손 실태 등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공동체 활동의 현황과 변화 실태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마을조직의 현황과 활동유무, 마을 내 공동체시설 현황, 공동체 활동의 종류와 외부기관의 재정적 지원 유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계속 정주 희망 여부, 주민 간 친화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한계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정책적 태도에 관한 내용이다. 주민들이 불리한 마을 여건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정책적 요구는 무엇인지 구명한 내용이다.

앞의 세 가지 내용은 일본의 한계마을의 실태에 관한 조사 항목으로 주로 설정되는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 조사 항목을 참고로 했다. 하지만 일본의 한계마을에 관한 조사 항목이 다소 단순하게 설정된 면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했다. 마지막 부분인 한계마을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정책적 태도는 향후 한계마을에 대한 정책 설정 시 참고하고자 실시했다.



〈그림 4-39〉 한계마을의 주요 측정 지표

본 연구에서 조사된 한계마을은 충남 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8곳의 마을(행정리)이다. 한계마을에 대한 기준 설정 문제가 앞서 논의된 바가 있지만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한계마을은 2011년 9월 기준으로 통계상 25가구 이하이거나 65세 인구가 50% 이상인 마을이다. 하지만 통계와 실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을조사 전에 해당지역 면사무소의 담당직원에게 문의 및 확인 후 조사대상 마을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역은 기본적으로 행정리 단위로 실시됐고(하나의 마을이 하나의 행정리인 경우), 하나의 행정리에 여러 개의 자연부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장이 거주하는 자연부락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주로 각 행정리 이장과 마을회관 내 주민들이며 조사방법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인터뷰와 마을 내외부의 관찰로 이뤄졌다. 구체적인 조사대상 행정리는 진산면 오항2리(오항동마을), 군북면 보광리(보광마을), 제원면 길곡2리(재뒤마을)와 용화2리(가마골마을), 부리면 어재2리(압수마을)과 신동2리(사기소마을), 복수면 백암3리(배미마을)와 목소리(바탕골마을) 등 6개 면 8개 행정리다. 구체적인 조사대상 행정리와 피조사자의 현황은 아래 <표 4-67>와 같다.⁸⁾

8) 본 절에서 사례조사 마을로 선택한 8개 행정리는 앞 절에서 분류한 금산군 농촌마을의 유형구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본 절에서 한계마을로 판정한 기준은 2011년 9월 기준이고 앞 절에서 유형구분은 2013년의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치이기 때문이다. 둘째, 본 절에서 선택한 마을은 통계적 구분과 아울러 현지 면사무소 직원의 추천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보광리, 목소리).

〈표 4-67〉 조사대상 한계마을과 피조사자 현황

유 형	조사대상 마을	자연부락명	피조사자 대표	조사날짜 (보완조사)
과소고령	진산면 오항2리	오항동마을	박○○ 이장 (황○○ 신이장)	4월 24일 (8월 12일)
과소고령	제원면 용화2리	가마골마을	육○○ 이장	5월 7일 (8월 8일)
과소고령	부리면 어재2리	압수마을	장○○ 이장	5월 10일
과소고령	부리면 신동2리	사기소마을	박○○ 이장	5월 10일 (8월 8일)
과소비고령	제원면 길곡2리	재뒤마을	김○○ 이장	5월 7일 (8월 8일)
비과소고령	군북면 보광리	보광마을	이○○ 이장	4월 24일
비과소고령	복수면 목소리	바탕골마을	길○○ 이장	5월 22일 (8월 12일)
비과소비고령	복수면 백암3리	배미마을	윤○○ 이장	5월 22일

2) 마을인구 및 정주환경 변화 실태

(1) 한계마을의 인구 현황

조사된 한계마을의 인구 현황을 보면 다음 <표 4-68>과 같다. 먼저 전체 인구측면에서 보면, 목소리가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광리가 67명으로 많았다. 인구가 가장 적은 마을은 오항2리로 24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데 모두 65% 이상의 고령마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별 65세 이상 인구비율 현황을 보면, 오항2리, 백암3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마을도 모두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를 보면, 목소리가 8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오항2리가 24가구로 가장 적었다. 총 가구수 대비 빈집수를 보면 어재2리가 총 32가구 중 10가구가 빈집으로 약 1/3을 차지했다. 총 가구수 대비 빈집이 가장 적은 마을은 백암3리로 최근 이 마을에는 귀농 및 귀향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4-68〉 한계마을의 인구 현황

마을명	총 인구	65세 이상	총 가구수	빈집수	독거 노인수	치매/중 증환자수	초중고 학생수	청년수
오향2리	24	24	20	4	11	1	0	0
(오향동마을)	11	11	10	2	9	1	0	0
보광리	67	37	55	15	17	2	3	10
(보광마을)								
길곡2리	50	30	27	4	6	4	2	3
(재뒤마을)								
용화2리	37	31	19	2	4	3	0	2
(가마골마을)	22	17	16	2	4	3	0	1
어재2리	37	19	32	10	7	3	0	0
(압수마을)								
신동2리	33	20	24	5	12	2	3	3
(사기소마을)								
백암3리	45	31	41	3	5	2	1	4
(배미마을)								
목소리	80	44	60	8	15	2	1	4
(바탕골마을)	16	7	12	4	1	1	3	3
리별 평균	46.6	29.5	34.8	6.4	9.9	2.4	1.3	3.3

참고1: 하나의 마을이 하나의 행정리인 경우에는 한 마을에 대해서 조사했고 여러 개의 마을인 경우에는 주로 이장이 거주하는 마을에 대해 조사한 내용임.

2: 위의 통계치는 행정리의 이장의 진술에 의한 수치이므로 실제 행정통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총 인구 대비 독거노인수가 가장 많은 마을은 오향2리로 24명의 인구 가운데 11명이 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및 중증 환자수는 마을별로 1-4명으로 나타났고 학생과 청년(30-40대)이 없는 마을도 오향2리, 어재2리 등 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청년수가 모두 2명인 용화2리를 포함하면 전체 마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마을이 학생과 청년이 없거나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마을의 행정리별 인구와 가구수의 평균을 보면, 총인구는 46.6명, 65세 이상 인구는 29.5명이고, 마을별 가구수 평균은 34.8가구이고 이 중 빈집수는 6.4가구, 독거노인가구수는 9.9명으로 나타났다. 치매 및 중증환자수, 초중고 학생수, 청년수는 모두 3명 이하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림 4-40〉 마을 내 방치된 빈집(오항2리(좌), 용화3리(우))

다음으로는 이들 한계마을의 인구변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금산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간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대도 다소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여건은 그리 좋은 편에 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접한 대전광역시와 계속 팽창하고 주변에 고속도로 등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면서 금산군의 주변 여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와 인접하고 최근 들어 귀농·귀촌이 유행을 타면서 전원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도시민들이 금산군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도시화가 농촌마을 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2) 한계마을의 인구변화와 전입자에 대한 주민 태도

본 조사에 따르면, 조사된 8개 마을 가운데 최근 5년간 마을의 인구 변화를 보면, 감소가 오항2리, 길곡2리, 용화2리, 어재2리, 신동2리 등 5곳이고, 정체되고 있는 마을은 보광리, 백암3리 등 2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마을은 목소리 1곳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최근 요양을 하기 위해 전입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계마을 내 외지인의 진입은 마을 내 자연감소 인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한계마을에도 외지인이 진입해 들어오고 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귀농자 등 외지인의 마을 내 진입에 대해 환영하는 태도이다. 인구가 점점 과소화 되어가고 마을 내 고령인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마을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마을 내 새로운 인구의 진입은 “마을에 사람이 없어 외지인의

진입을 환영한다.” “외지인의 진입에 반대는 없으며 오히려 협조를 잘 한다.” “외지인의 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등 마을의 지속성과 발전에도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정작 마을 내 진입한 외지인의 행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외지인 진입에 대한 각 마을주민들의 구체적인 주민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오향2리: 약 20년 전 한 목사가 빈집을 구매했으나 마을에 가끔 올 뿐 완전히 내려오지는 않았다.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귀농, 귀촌자가 오더라도 마을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반기지 않는다. 이 마을에서 토지 매매는 거의 없으며 평당 약 15만 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⁹⁾

보광리: 최근 외지인 3가구가 전입해 집을 지었으며 7가구는 컨테이너를 만들어 농사를 짓고 있다. 이곳에 종종 와 농사를 짓고 농기계도 보관하고 있다. 보광마을에서는 마을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원마을조성사업(서대산권역 동호인마을)을 유치하고자 노력했지만 외지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매도하지 않아 이 계획이 무산됐다. 무척 아쉽기도 하다. 현재에도 마을주민들은 한옥마을과 같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길 원한다. 현재 안(쪽)보광리에는 사찰의 교육장을 건설하고 있다.

길곡2리: 최근 3가구가 전출하고 2가구가 전입해 들어왔다. 전출은 주로 애들교육과 생활유지의 어려움 때문이며 전입은 농업과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다. 전입자들은 농사일로 염소, 닭, 장뇌삼 등을 재배하고 있다. 외지인들은 토지를 구입하고 측량한 다음 자신들의 토지에 줄을 쳐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어재2리: 최근 4가구가 용인, 익산, 안양, 대전 등지에서 전입해 들어왔다. 그 중 고향 출신은 2가구이다. 서울 등 외지인들이 마을 내 토지투기로 땅값을 올려냈다. 마을 외부 토지의 1평당 가격은 20-30만 원이고 내부는 20만 원 정도이다.

9) 하지만 연구자가 보기에는 마을의 풍광도 좋고 개간지를 활용한다면 여러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마을사람들은 마을에 별 희망이 없기 때문에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신동2리: 최근 청주에서 오신 분이 전원주택을 짓고 주말에만 와서 생활을 하고 있다. 원래는 외지인을 반겼지만 외지인이 진입 이후 측량을 통해 도로와 하천을 잠식해 들어가 주민들은 지금은 외지인의 진입을 반기지 않고 있다.



〈그림 4-41〉 마을 내 새로 진입한 가구(백암3리)

위의 사례로 알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전입자와 기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은 주로 토지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길곡2리와 신동2리처럼 외지인이 마을 내 진입한 후 자신의 토지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져다주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조금씩 양보해 마을길을 넓히고 농로와 수로를 놓았던 두레정신이나 새마을운동시기 협동정신과는 배치되는 행위이다. 물론 이러한 사례로 인해 기존 주민과 새로운 전입자 간 갈등이 증폭이 되어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지만 새로운 전입자의 이러한 이기적인 행위에 대해 기존 주민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보광리의 경우, 새로운 전입자의 산발적인 토지 소유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전원마을조성사업이 결국 좌절되자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민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마을의 전입자들은 완전한 귀농·귀촌보다는 농지에 작은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놓고 주말에만 대도시에서 와서 농사를 짓는 반(半)귀농자이다. 이러한 형태의 전입자가 이 마을에 7명 정도 되는데 이들은 한편으로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토지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마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원마을조성사업에도 좀처럼 참여의사가 없어 마을주민들과도 약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결국, 마을 내 기존 주민들과 새로운 전입자 간 이해와 협력이 마을 내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관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향후 인구변화 전망 및 주민들의 대처 의향

한계마을이 향후 어떻게 변화될지에 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화 전망에는 세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지금처럼 인구가 계속 준다면 언젠가는 마을이 소멸되거나 자연적으로 통폐합될 것이다. 둘째,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새로운 유입인구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농촌 및 산간 지역에 귀농, 귀촌, 귀향, 휴양 및 요양 등의 목적으로 농촌을 많이 찾기 때문에 인구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현 상태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그렇다면 한계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이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계마을 주민들이 전망하는 자신의 마을에 대한 인구변화 전망, 인구 감소 혹은 증가 전망의 이유, 그리고 인구가 감소 혹은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면 주민들은 어떤 대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했다.

조사된 8개 마을 가운데 5개 마을주민은 자기 마을의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가운데 오항2리, 용화2리, 어제2리 주민은 10년 전후에는 마을 내 인구가 남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길곡2리와 신동2리는 인구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인구가 지금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3곳으로 나타났다. 백암3리는 앞으로도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보광리와 목소리는 향후 마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암3리의 경우 산간고지대이긴 하지만 대전광역시와 인접해 하루에 8번의 버스가 통행하고 있고 마을 풍광과 인문자원 등이 많아 최근 대학교수, 조경업자 등이 이 마을에 전입해 들어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로, 상수도 등이 정비된다면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광리는 총 67명의 인구에 총 5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다른 한계마을에 비하면 비교적 큰 규모의 마을에 속한다. 이 마을도 다른 한계마을과 같이 인구의 자연감소로 인해 현재는 점점 줄고 있지만 반대로 이 마을을 찾는 외지인도 점차 늘고 있다. 서대산 남단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효령 이씨의 제실이 있어 매년 종손들이 2-3차례 모여 이곳에서 시제를 지내고 있다. 마을의 규모도 상당하고,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약간의 마을개발정책이 투입된다면 이 마을의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현재 남아있는 인구의 대부분이 노령층이어서 마을개발을 추동할 젊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외지인의 토지 소유가 점점 확대되어 마을 공동으로 마을개발사업을 하기에는 점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 한계

점으로 작용해 보인다. 목소리의 경우는 앞서 설명했듯, 대전광역시와는 가깝지만 교통이 두절되어 교통이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이러한 점이 오히려 휴양과 요양에 장점으로 작용해 최근에 귀촌자가 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4-69〉 한계마을 주민의 향후 인구 변화 전망과 그 이유

마을명	인구변화 전망	소멸/증가 이유
오항2리 (오항동마을)	10년 전후에는 남지 않을 것임.	-
보광리 (보광마을)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것임.	입지가 좋아 외지인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 대전에서 20-30분 거리임
길곡2리 (재뒤마을)	약간 감소할 것임	-
용화2리 (가마골마을)	10년 전후에는 남지 않을 것임	외지인이 들어올 마땅한 공간이 없음
어재2리 (압수마을)	10년 전후에는 10명 정도 남을 것임	자연 감소
신동2리 (사기소마을)	계속 줄어든 것임.	후손들은 귀향할 의지가 없음.
백암3리 (배미마을)	앞으로도 비슷할 것임	최근에 귀농자들이 늘고 있음. 앞으로 도로, 수도, 간이상수도가 정비된다면 귀농자는 늘어날 것으로 봄
목소리 (바탕골마을)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것임.	요양, 휴양 등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음

일부 한계마을의 인구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을은 향후 인구가 감소되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소멸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마을 주민들은 이처럼 불안한 미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의 마을이 점차 쇠퇴하고 결국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역으로 마을을 어떤 식으로든 살려야 한다는 동인을 주기도 한다. 조사된 8개 한계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이러한 마을의 쇠퇴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협력해 대처해 나가야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화2리: 이 문제(마을의 쇠퇴와 소멸)는 정부도 대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할 수 없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인근 희망센터처럼 몇 명이서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의 공동매입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다.

어재2리: 마을이 비록 오지이기는 하지만 마을의 자연환경은 수려하기 때문에 생태체험 마을로 개발이 가능하다. 문제는 사람이 관건이다.

신동2리: 원래 마을 앞에는 가마터가 8군데나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수몰된 상태이다. 문화재청 등을 통해 도자기마을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공사비 등이 많이 소요돼 어려움이 예상된다.

백암3리: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찾는 등산객을 위해 임도와 꽃길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마을 산에 낙엽송을 심고 있다. 또한, 버스가 겨울철에는 일찍 끊겨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마을 가운데 어재2리, 신동2리, 백암3리 등 3곳 마을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자원과 자연자원을 가지고 마을을 발전시킬 구상을 하고 있다. 어재2리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해 생태체험마을을 구상하고 있고, 신동2리는 마을 앞 수몰지구에 남아있는 전통가마터를 복원해 이를 활용한 체험마을을 구상하고 있다. 백암3리는 대도시와 인접해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임도와 꽃길을 조성해 내방객들을 맞이하고자 한다. 물론 이들 마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한 계마을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 마을 나뉠대로의 사업구상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모습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들 세 마을과는 다르게 용화2리의 경우에는, 마을 자체의 사업보다는 공동주택을 통한 노령자의 공동생활을 구상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마을 내 새로운 전입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마을주민들이 쇠퇴해가는 마을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하는 방법을 모색한 가운데 마을에서는 공동주택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마침, 용화2리가 마을종합개발사업의 대상

마을에 포함이 되어 마을에서는 현재 낡은 단층짜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2층으로 개조하고 일층은 공동취사와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2층은 거주도 가능한 생활공간으로 바꿀 예정이다. 현재 농촌마을의 공동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마을에서 시도되고 있는 고령자의 공동생활이 이 마을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계속 관주할 필요가 있다.

(4) 한계마을 주민의 의료 환경과 응급의료 대처 현황

한계마을 주민들은 일반 마을에 비해 노령층의 비중이 높지만 지리적 환경과 교통의 불편함으로 의료환경이 더욱 열악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사된 8곳의 한계마을 가운데 6개 마을주민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연로한 노령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관절, 디스크, 혈압, 기관지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질병은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오지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도 불편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구급시간의 부족으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런 사고는 많지는 않았지만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향2리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 해 겨울, 마을 이장은 밤중에 눈이 많이 내려 새벽에 일어나 마을 안길을 썰고 집에 돌아와 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당시 72세). 아마도 마을 이장이라는 책무감에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진입로에 쌓인 눈을 무리하게 쓸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간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만약 응급조치를 받았다면 살릴 수도 있었다.”고 말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마을 내 남성은 4명밖에 되지 않고 그들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젊은 이장이 응급조치를 받지도 못하고 사망하자 마을주민들은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길곡2리에서도 74세의 노인이 마을에서 음주 후 집에 돌아간 지 얼마 안 돼 심장마비로 급사한 사례가 있었다. 마을주민들은 홀로 살았던 이 노인에게 대해 좀 더 일찍 발견했다면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한계마을 내 응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통 금산읍 내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 구급차가 금산읍내에서 마을까지 들어오는 시간은 보통 20-30분이 걸린다. 이 시간이 짧은 짧지만 응급상황에서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다. 보광리의 경우 구급차가 읍내에서 마을까지 들어오는 시간은 20분이 걸리며, 어재2리의 경우, 30분이 걸린다. 물론 이 상황은 금산읍내의

병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경우를 말한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 금산 읍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시 대전으로 나가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그만큼 응급환자에 대한 위험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구급차에 마을까지 잘 오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갖는 경우이다. 신동2리의 경우 겨울철에는 마을 입구가 경사가 졌다는 이유로 구급차가 잘 오려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산 읍내에서 마을까지 구급차가 오는 시간은 약 20분인데 이 시간은 공주에서 오는 시간보다 더 늦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또한, 백암3리의 경우,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릴 때면 마을 내 버스가 들어올 수 없어 응급사태가 발생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군과 면에 요청을 했지만 지원은 극히 적은 상태이다.

응급상황을 제외하면 한계마을 주민들은 가까운 면의 보건지소, 군의 보건소와 일반 병원, 그리고 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대전으로 나가 치료를 받는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보건지소이다. 물론 마을주민들이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출행이 불편한 이들 마을주민들을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마을을 순회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용화2리의 경우 한 달에 한번 보건소에서 보건의들이 직접 찾아와 진찰을 하고 간단한 치료를 해주고 있다. 백암3리의 경우 신대보건지소 소장이 자주 찾아와 노령자의 치매검진, 소독약 배포, 폐렴 등 감기약 제공 등의 치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응급차는 보통 일 년에 2-3번 들어오고 대부분 추부에서 들어온다고 한다. 오향2리의 경우, 한 달에 3-4번 정도 보건소에서 나와 침을 놓아주거나 혈압과 당뇨를 체크해 준다고 한다.

지역의 보건(지)소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보건(지)소를 찾아가 진찰을 받는다. 그럴 경우 주민들이 겪은 불편들은 적지 않다. 가장 불편을 겪는 사항은 교통의 불편이다. 면이나, 읍내로 나가는 교통편이 많지 않고 또 차를 타기 위해서는 정류장까지 한참을 걸어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물론 이웃의 교통수단을 얻어 탈 수도 있고 면소재지나, 읍내의 택시를 불러 탈 수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 주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이 적지 않다. 길곡2리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제원면의 보건지소와 금산읍내의 보건소와 병원을 다니곤 한다. 하지만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제원면에는 택시가 없기 때문에 금산읍내의 택시를 불러야 하는데 한번 부르면 보통 1만7천 원내지 1만8천 원이 소요된다. 마을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계마을 내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마을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가장 많은 실행되고 있는 방법이 마을회관 혹은 경로당 안에 안마기의 설치이다. 고된 농사일로 얻은 관절염과 디스크 등을 치료하기 위함이다. 보광리의 경우, 이 마을 출신 출향민이 안마기 2대를 기증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길곡2리의 경우, 마을에서 온열안마기 2대(약 100만 원 상당)를 구입하고 면에서도 1대를 구입해줘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안마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신동2리의 경우, 마을회관에 안마기가 2대 있으나 전기료가 많이 들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보광리의 경우, 마을회관 내 건강증진시설 및 운동시설이 부족해 마을회관 앞에 운동시설 설치를 면사무소와 군청에 요구했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이 마을 이○○ 이장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5) 한계마을의 교통 및 도로 여건

한계마을이기 때문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교통의 불편함이다. 대부분이 고산 지대나 오지에 있다 보니 대중버스 등 차량의 진입이 어렵다. 따라서 버스운행 횟수가 적거나 접근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한계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차원에 서라도 교통편을 늘려주기를 바라지만, 이를 관장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효율성면에서 교통편을 늘려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농어촌의 교통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적자상태라 정부가 운수회사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인 상황에서 한계마을까지 교통편을 늘려주자면 그 적자 폭은 늘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들 마을에 대한 지원도 소홀할 수 없는 입장에서 교통문제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한계마을 주민들이 면소재지나 읍내에 출행할 때 대부분은 버스를 이용한다. 조사된 8마을 가운데 목소리를 제외하면 모두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버스이용에도 마을 별로 차이가 난다. 버스가 직접 마을 안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서 가까운 도로까지 오는 경우이다. 마을 안쪽까지 들어오는 경우에도 편수의 차이가 있고, 마을에서 가까운 도로까지 오는 경우는 마을에서 도로까지 가는 시간적 차이가 다르다. 먼저, 마을 안까지 버스가 들어오는 경우를 살펴보자. 보광리, 신동2리, 백암3리의 경우 버스가 마을 안까지 들어온다. 하지만 각각의 사정을 다르다. 보광리의 경우 버스가 하루에 6번 들어온다. 하지만 마을 아래 쪽에서 올라오는 버스가 마을을 지나 마을 위쪽을 지나 면소재지 방향으로 빠지면 좋겠지만

마을 위쪽의 도로는 폭이 좁고 막혀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는 불편이 있다. 신동2리, 용화2리, 백암3리의 경우에는 마을 내로 버스가 하루에 3번, 5번, 8번 들어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다. 특히, 백암3리의 경우 마을이 외지고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마을은 금산군과 대전광역시의 경계지역이고 또한 금산군보다는 대전광역시와 가까워 이쪽에서 오는 버스가 다소 많은 편이다. 이에 반해 버스를 타기 위해 마을 앞 도로까지 나가야 하는 마을도 있다.

조사된 마을 가운데 가장 불편을 겪는 마을은 오항2리의 경우이다. 마을 밖 도로까지 하루에 2번의 버스가 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이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도보로 약 30분을 걸어야 한다. 종종 마을 내 자가용을 얻어 타고 출행을 하기도 하지만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거의 한 시간을 걸어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다. 진산면에서 택시를 부를 경우에는 약 1만 원의 택시비용이 소요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이 마을에 안희정 도지사가 방문한 이후 마을 앞길이 확·폭장이 되어 도로 여건이 다소 좋아졌다는 점이다. 어재2리도 비슷한 경우이다. 마을 밖 입구에 하루 2번의 버스가 있지만 보통 어른의 경우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20-30분을 걸어야 하고, 고령자는 약 1시간을 걸어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다. 목소리의 경우에는 도로에서 마을까지 들어오는 도로의 폭이 좁고 버스도 적어 보통 경운기를 이용해 먼소재지에 출행을 한다고 한다. 물론 주민 가운데는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고 자가용 출행도 가능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경운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2〉 새롭게 확포장 된 마을 내 진입도로(오항2리)와 마을버스 정류장(백암3리)

이러한 교통 및 도로여건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평가는 어떠할까? 8마을 주민 대표 중 절반 해당하는 4마을의 주민 대표는 열악하다고 평가했고 나머지 절반은 괜찮거나 양호하다고 평

가했다.

〈표 4-70〉 한계마을의 주요 교통 및 도로 여건과 주민 평가

마을명	교통수단	운행현황	주민 평가
오항2리 (오항동마을)	버스	마을 밖 입구에 하루 버스 2번 있음. 그러나 마을입구까지는 약 30분을 걸어 나가야 함. 가끔씩 마을 내 자가용을 얻어 타고 출행함.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거의 한 시간을 걸어나감. 진산면에서의 택시비용은 1만 원임.	열악한 편임. (최근 도지사 방문 후 마을앞 도로 확포장됨)
보광리 (보광마을)	버스	버스가 하루에 6번 들어옴. 하지만 도로가 좁고 막혀있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불편이 있음.	괜찮은 편임.
길곡2리 (재뒤마을)	버스	마을 앞 도로까지 버스가 하루에 3번 운행 (6:30, 14:35, 19:45)	열악한 편임.
용화2리 (가미골마을)	버스	버스가 하루에 5번 들어옴.	괜찮은 편임.
어재2리 (압수마을)	버스	버스가 하루 두 번 있음.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어른은 20-30분, 어르신은 1시간을 걸어 나가야 탈 수 있음.	열악한 편임.
신동2리 (사기소마을)	버스	하루에 3번 버스가 마을 앞까지 들어옴.	좋은 편임.
백암3리 (배미마을)	버스	하루에 8번 버스가 들어옴. 교통의 불편함은 적음.	보통임.
목소리 (바탕골마을)	경운기	경운기를 많이 이용함.	열악한 편임.

그렇다면, 이러한 교통 및 도로 여건에 대해 마을주민들은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향후 교통 및 도로 여건의 개선 방향에 대해 마을 내 진입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보광리, 길곡2리, 백암3리, 목소리)거나 읍내까지 오가는 버스의 편수를 늘려야 한다(길곡2리, 어재2리, 신동2리)고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오항2리의 경우에는 대형버스의 운행편수 증가보다는 마을 앞까지 들어올 수 있는 소형버스의 운행을 요구했다. 이 문제에 관해 군청에도 여러 건의를 했지만 사람이 적기 때문에 개선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장날만이라도 버스를 마을 안쪽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매일 버스를 운행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버스의 증편 또는 소형버스의 운행은 지자체의 경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차원의 소형 버스의 운행은 어렵지만 면단위 사업기관의 소형버스 운행은 가능해 보인다. 어

재2리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부리면에 위치하고 있는 어제2리는 지방도로에서 굴곡진 길을 약 20분 정도 들어가야 닿는 마을이다. 따라서 마을주민들은 눈이 오면 교통이 두절되기 때문에 생필품은 주로 지역농협에 주문배달을 시킨다. 부리농협은 배달차량으로 봉고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2차례 면소재지를 순회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굳이 읍내까지 나가지 않아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배송료는 없고, 농협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지역 내 사업기관의 이러한 배송서비스는 한계마을 주민들이 겨울철에 굳이 읍내에 나가지 않아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교통에 취약한 이곳 주민들에게는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지역사회의 이러한 작은 서비스가 모아지고 확대된다면 교통과 물건구매에 취약한 한계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3) 토지이용 및 환경변화 실태

(1) 영농형태와 유희 농경지 현황

한계마을을 특징짓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토지의 공동화다. 마을 내 청장년층이 점점 줄어들고 남은 인구의 점진적인 고령화로 마을의 토지는 농기계가 접근하기 힘든 경사지 농지부터 점점 유희화되어 간다. 대부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한계마을에서 농경지의 유희화는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마을의 쇠퇴를 보여주는 표상이기도 하다. 더욱이 한계마을이라는 불리한 여건 때문에 겸업소득도 마땅치 않는 상황에서 농업소득의 감소는 곧 농가의 영세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와 같이 농업인에 대한 연금과 복지서비스가 미흡한 상태에서 농업소득의 감소는 농촌 전반이 빈곤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된 8마을은 전부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삼고 있다. 주요 품목은 마을마다 다양하지만 그 생산량은 많지 않다. 주요 품목은 인삼과 고추, 깻잎, 콩재배가 가장 많고, 그 외에도 벼, 복숭아, 땅두릅 등이 약간 재배되고 있다. 백암3리에서는 일부 농가가 조경수재배를 주요 소득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된 8마을 가운데 6마을은 겸업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마을이 약간의 겸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길곡2리의 경우, 1명은 주중에

읍내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다른 1명은 인근 육가공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소리의 경우, 1명이 인근 청국장 가공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4-71〉 한계마을 주민의 영농형태 및 겸업소득 유무

마을명	주소득원	주요 품목	겸업소득 유무
오항2리 (오항동마을)	농 업	콩, 들깨 약간	없 음
보광리 (보광마을)	농 업	딸기묘목, 인삼, 과수	없 음
길곡2리 (재뒤마을)	농 업	인삼, 고추, 콩	주중에 옷가게, 육가공회사 근무(2명)
용화2리 (가미골마을)	농 업	깻잎, 인삼, 미작, 복숭아	없 음
어재2리 (압수마을)	농 업	벼, 콩, 고추	없 음
신동2리 (사기소마을)	농 업	고추, 콩, 깻잎, 인삼	없 음
백암3리 (배미마을)	농 업	깻잎, 인삼, 콩, 조경수	없 음
목소리 (비탕골마을)	농 업	깻잎, 땅두릅, 고추, 콩	인근 청국장 가공공장 근무(1명)

조사된 8마을의 논과 밭의 비율은 보면 많은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동2리처럼 논 면적이 90%를 차지하는 곳도 있고, 백암3리의 경우 밭 면적이 90%, 목소리의 경우는 밭 면적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 농경지보다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하우스재배의 경우 용화2리의 경우에만 밭 면적의 약 10%만 차지할 뿐 다른 마을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계마을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고령화라는 인적 요건이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마을에서 농경지의 유희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조사된 마을 가운데 신동2리, 백암3리, 목소리의 경우에는 유희농경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길곡2리, 보광리, 어재2리의 경우에는 농경지 가운데 휴경지가 각각 30%, 50%,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화2리의 경우에는 밭 면적의 90%, 논 면적의 10%가 유희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4-72〉 한계마을의 전답 비율과 유희면적 현황

마을명	논면적 비율	밭면적 비율	유희면적 비율
오항2리 (오항동마을)	20%	80%	80-90%
보광리 (보광마을)	30%	70%	50%
길곡2리 (재뒤마을)	40%	60%	30%
용화2리 (가마골마을)	20%	70%(하우스10%)	밭의 90%, 논 10%
어재2리 (압수마을)	50%	50%	60%
신동2리 (사기소마을)	90%	10%	거의 없음.
백암3리 (배미마을)	10%	90%	거의 없음.
목소리 (바탕골마을)	0%	100%	거의 없음.

마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농지를 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감소와 노령화이다. 인구가 감소는 두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첫 번째는 노동력의 부족이다. 농업의 특성상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마을 내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공동으로 진행될 농사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두 번째는 농작물을 지킬 인력의 부족이다. 마을 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경지를 빈번히 침범해 농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항2리와 어재2리의 경우가 특히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고령화는 농사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전에는 농기계 등이 들어갈 수 없는 경사진 곳에도 인력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어려운 상태이다.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농자재를 가지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어렵게 수확하더라도 농작물을 가지고 나오기도 힘들다. 각 마을 대표들이 마을 내에 왜 휴경지가 발생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오항2리: 마을 내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농사를 지어도 멧돼

지 등이 나타나 농작물을 훼손시켜 농사를 짓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길곡2리: 노인들이 대부분이라 농기계가 못 들어가는 농지는 농사를 못 짓는다. 더욱이 멧돼지들이 빈번히 출현해 농작물을 훼손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용화2리: 밭은 농기계가 못 들어가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어재2리: 농지의 50%는 외지인 소유다. 이전에 젊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멧돼지, 고라니, 다람쥐 등 산짐승이 빈번히 출현해 농사짓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멧돼지는 낮에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고 짐승들이 잘 안 먹는다는 고추는 고라니가 새순을 먹어치워 농사짓기가 갈수록 어려운 상태이다.

위의 마을 가운데 오항2리와 어재2리와 같은 경우, 이전에는 마을에서 개간을 통해 많은 양의 농지를 확대했으나 지금은 농사지을 인력이 없어 거의 놀리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을주민들은 많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가뜰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농사를 지어도 야생동물들이 출몰해 농작물을 사그리 먹어치워 농민들은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한계마을에서의 농사는 마을 내외 가까운 지역을 제외하면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4-43〉 마을 내 유향농지(오항2리(좌), 보광리(우))

(2) 농지거래 실태와 주민의 반응

우리나라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농지의 거래와 소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경자유전의 법칙에 근거해 농지는 예외적인 몇 가지 규정을 제외한다면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이 다르다. 농지가 재산증식을 위한 하나의 투기대상으로 되면서 외지인, 특히 도시인들의 농지소유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전원생활을 즐기고 영농을 부업으로 삼아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농지만 구입하고 영농활동은 서류상으로 기재하면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 대부분은 농지를 하나의 투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농지를 전용하거나 개발 분위기를 타고 매입가격보다 비싸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한계마을에서의 농지 및 토지거래는 어떠한 상태일까?

최근 5년간의 추세를 보면, 마을 내 농지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지인의 토지구입은 이미 이전에 완료가 된 상태이고 현재 마을주민들도 자신의 토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지의 매도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다. 특히 금산지역은 대도시인 대전광역시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세종시와도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려는 주민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길곡2리, 용화2리, 어재2리, 신동2리, 목소리 등에서는 최근 5년간 마을 내 토지가 거의 매매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된 마을 가운데 비교적 오지마을에 속하는 오향2리의 경우에는 농지와 빈집에 대해 물어오는 사람도 없고 토지를 판다는 주민도 없는 상태이다. 다른 마을에서는 토지 구매를 위해 물어오는 사람은 있지만 팔려고 하는 주민이 없어 매매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토지매매가 최근에 이뤄지지 않았을지라도 그전부터 이미 상당부분 토지매매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 내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광리의 경우 외지인의 토지 소유가 마을 전체 토지의 약 30%를 차지한다. 외지인들은 귀농준비, 전원생활의 목적으로 마을 내 토지를 구입하고 있다. 이 마을 토지가격이 평당(3.3㎡) 10만 원선으로 비교적 저렴한 점이 외지인 유입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길곡2리, 어재2리, 백암3리에서도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율이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재2리의 경우 마을 내 문중 토지가 많은 상태에서 마을주민의 토지와 외지인 소유의 토지가

각각 절반씩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암3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을 내 토지의 절반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내 토지의 평당(3.3㎡) 가격이 25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지만 이곳 마을은 풍광이 좋고 대전광역시와 가까운 지리적 장점이 있어 마을 내 토지를 사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마을 내 토지는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토지가 개인의 소유이고 이를 매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농촌에서 토지의 매매는 곧 공동체의 파괴에 결부되기 때문에 신중을 요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을 내 한 개인이 토지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가 급적이면 마을 내 주민, 혹은 가까운 거리의 사람에게 매도하곤 한다. 이러한 마을 내 관습적 규정으로 마을 내 공동체성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마을 내 토지거래에 대해 주민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조사된 8마을 대부분에서는 농지의 매매가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광리 마을 이장의 말에 따르면, 마을주민들은 개인의 토지거래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마을 내 전원주택조성사업 계획 시 외지인의 토지 소유로 매입의 어려움이 있어 이 사업은 결국 좌절됐다. 이에 대해 이곳 마을 이장은 다소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길곡2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마을 내 개인의 토지거래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막을 방법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대전 쪽 사람들이 45군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된다면 이곳 마을 분위기가 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어재2리의 경우에는 토지의 외부거래에 대해 가급적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재2리 장○○ 이장은 현재와 같이 마을 내 인구가 줄어들고 외지인들에게 토지를 매도한다면 향후 마을 내에는 10여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다면 마을주민들이 나중이라도 공동주택을 장만해 함께 생활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외지인들에 의해 토지가 분산 소유되고 가격 또한 상승된다면 주민들이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한계마을 주민들의 향후 경작지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자식들이 농사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자식들 또한 귀향의사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겠지만 이후 자식들이 토지를 팔아버리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하고 있다. 물론 보광리, 길곡2리, 백암3리와 같이 마을 내에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 일 년에 1-2차례 출향민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경우에는 후손들이 마을 내 토지를 쉽게 처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는 마을의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3) 마을 내 물환경 변화와 경관 훼손 실태

농촌마을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는 종종 농지의 유희화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의 방치와 훼손으로 이어진다. 이전에는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자원들이 이제는 인력이 부족하고 주민들도 점차 고령화되다 보니 시나브로 농촌자원은 주민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을의 물환경(저수지, 하천, 개천, 물고랑 등)과 경관관리문제이다. 이전에는 잘 관리되던 마을 내 저수지, 하천, 개천, 물고랑 등이 마을 내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되면서 방치되자 이곳에는 독이 무너지고 토사가 쌓여 잡초가 자라 마을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마을주민들이 버린 오물과 쓰레기가 쌓여 하천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미관을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농촌마을에 인구가 줄어들고 개발 압력이 높아감에 따라 마을 주변의 산들을 개발의 명목으로 심하게 훼손한 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농촌마을의 환경과 경관훼손을 가중시키고 있다.

먼저, 한계마을 내 물환경 변화 실태를 보면, 8마을 가운데 5마을의 주민대표는 마을 내 물환경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를 보면, 인구감소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오항2리), 주변에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보광리), 수해가 나도 복구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정비 안 되고 있으며 정비되더라도 눈에 띄는 곳만 하고 있다(길곡2리), 하수도공사를 하지 않아 나빠졌다(신동2리) 등이 있었다. 그 외 용화2리, 백암3리, 목소리 등은 군청의 지원과 경리정리 등으로 이전과 변함이 없거나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한계마을 주변 경관 훼손 실태를 보면, 조사된 8마을 가운데 5마을에서 경관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에서도 경관 훼손이 비교적 크게 일어난 마을은 오항2리, 보광리, 길곡2리, 신동2리 등 4마을이다. 오항2리의 경우, 마을 입구 왼쪽 편이 석재채취를 마친 후 방치된 상태라 마을 입구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보광리에서는 마을 입구에 토지인허가로 인해 비교적 큰 규모의 산림지가 훼손됐고, 이전 군수 때 주민들의 동의 없이 납골묘를 허가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길곡2리에서는 객토사업자가 마을 입구 산을 사서 3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석산이어서 현재는 사업을 그만두었다. 사업이 시작될 무렵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군청 감사과에 민원을 넣기도 했지만 공사를 중단시키기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깎이다 만 마을 앞산은 흙물로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신동2리의 경우에는 마을 앞 저수지를 4대강 공사의 일환으로 확대 건설하고 그 위쪽에 전망대를 만들면서 경관을 심하게 훼손시켰다. 마을주민들은 그 산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산림지가 훼손되어 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표 4-73〉 마을 내 물 환경 변화와 경관 훼손 실태

	마을 내 물환경 변화 실태		경관훼손 실태	
	변화 정도	이유	훼손 유무	이유
오항2리 (오항동마을)	나빠짐	인구감소로 관리가 되지 않음.	있음	마을 입구 채석강으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었음. 더욱이 현재 공사가 끝나고 방치된 상태라 미관적으로도 좋지 않음.
보광리 (보광마을)	나빠짐	주변에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있음	마을 입구에 토지인하가로 인해 비교적 큰 규모의 산림지 훼손이 이뤄지고 있음. 또한, 이전 군수 때 납골묘를 허가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길곡2리 (재뒤마을)	나빠짐	수해가 나도 복구지역에 해당 안 돼 정비가 안 되고, 정비가 되더라도 보이는 데만 하고 맘.	있음	객토사업자가 마을 입구 산을 사서 3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석산이라서 그만 둬. 마을 주민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군청 감사과에 민원을 넣음.
용화2리 (가마골마을)	다소 좋아짐	경리정리 등으로 약간 좋아짐.	없음	-
어재2리 (압수마을)	나빠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음.	없음	-
신동2리 (사기소마을)	나빠짐	하수도공사를 하지 않아 나빠짐.	있음	마을 앞 저수지를 4대강 공사의 일환으로 확대 건설하고 그 위쪽에 전망대를 만들면서 경관을 심하게 훼손시킴. 개인 토지에 대한 허가라서 별 수 없다고 생각함.
백암3리 (배미마을)	아주 좋아짐	군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	없음	-
목소리 (바탕골마을)	변함이 없음	-	있음	마을 내 사방댐이 두 곳 있음.

4) 공동체 활동의 현황과 변화 실태

(1) 마을 내 공동체 조직과 활동 현황

한계마을의 마지막 특징 중의 하나는 공동체의 공동화이다. 농촌마을 내 인구의 과소화와 노령화는 곧 농촌공동체 활동의 해체로 이어진다. 상조계, 대동계, 마을제사 등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활동 등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마을 내 경제조직이라 할 수 있는 작목반 등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 노령인구가 늘고 청년들이 줄어들어 따라 마을 내 노인회는 증가하고 청년회 조직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농촌의 활력을 감퇴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을의 활력이 감퇴되고 있다는 증거는 마을 내 조직 활동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아래 <표 4-74>을 보면, 현재 한계마을의 공동체조직 현황을 알 수 있다. 먼저 대동계를 보자. 대동계는 자연부락 단위에서 청년, 장년, 노년층이 모두 모여 한 해의 살림살이를 결산하고 다음해 마을의 사업을 계획하는 토론하며 마을주민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다. 이러한 대동계는 보통 자연마을이라면 거의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모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된 8마을 가운데 대동계를 유지하고 있는 마을은 5마을이고 3마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이 과소화, 고령화되어가면서 마을 내 공동체 살림살이가 점점 해체되고 개별화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된 마을 가운데 노인회는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부녀회 또한 대부분 70세 이상이며 전체 인구가 12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오향2리를 제외하면 모두 유지하고 있었다. 8마을 가운데 청년회는 2마을에서 유지되고 있고 그나마 신동2리의 경우에는 청년회 회원이 4명에 불과했다. 작목반 또한 2마을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 또한 다른 마을과 연계하여 결성된 작목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은 깻잎과 고추였다. 8마을 가운데 전통민속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은 3마을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4-74〉 한계마을의 공동체조직 현황

마을명	대동계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작목반	전통민속
오항2리 (오항동마을)		○				
보광리 (보광마을)		○	○			
길곡2리 (재뒤마을)		○	○		○	
용화2리 (가마골마을)	○	○	○			○
어재2리 (압수마을)	○	○	○	○		
신동2리 (사기소마을)	○	○	○			○
백암3리 (배미마을)	○	○	○	○	○	
목소리 (바탕골마을)	○	○	○	○	○	○

이들 마을 가운데 전통민속 활동을 가장 잘 유지 및 보존하고 있는 마을은 보광리다. 이 마을은 효령대군 후손 집성촌으로 이씨 제각이 있어 일 년에 1-2차례 후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낸다. 이때는 출향한 후손들도 대부분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 마을 이○○ 이장은 어렸을 때부터 마을산제, 대보름 쥐불놀이, 당산나무제 등을 지내면서 자랐는데 지금은 효령대군 후손들의 시제 이외 다른 전통민속 활동들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어 아쉬움을 나타냈다.

(2) 마을주민의 주요 참여 활동 현황

비록 예전보다는 활력이 떨어지지만 한계마을에서도 마을주민을 위한 공동체 활동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대동계가 열리는 날이면 마을주민들 간 화합과 친목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도 하고, 칠순과 필순 때는 당사자 가족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몇몇 마을에서는 아직 미풍양속이 남아있어 마을 청년들이 일 년에 한 두 차례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거나 작은 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마을 자체의 기금을 주로 활용하고 기타, 농협이나 외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약간의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마을 내 기금이 비교적 풍족하거나 외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 마을주민들은 일년에 한 차례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관광을 떠나기도 한다. 금산지역이 산간지대이다 보니 행선지는 주로 해안가 쪽을 많이 선택한다.

아래 <표 4-75>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광리의 경우 마을청년회에서 매년 한두 차례 경로잔치를 벌인다. 금년 보름에는 경로당에서 마을주민들이 함께 오곡밥을 먹기도 했다. 길곡2리의 경우 자체적으로 노인잔치를 벌인다. 이때 외부 지원은 거의 없고 농협에서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칠순이나 팔순 때에는 시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한다. 백암3리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대)동계를 가지는데 보통 10월 30일에 개최한다. 이때 마을의 자산에 대해 결산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 경로잔치는 마을에 기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조사된 8마을 가운데 4마을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마을 자체적으로 외지 관광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옥천(관성) 육씨 집성촌인 용화2리의 경우 매년 봄철에 해안가 쪽으로 관광을 다닌다고 한다. 마을 소유의 공동경지를 처분한 기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별도의 회비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마을은 집성촌이기 때문에 마을주민 간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도 자신의 마을이 '정감이 있는 마을'이라고 느끼고 있다. 보광리에서도 일년에 한두 차례 외부 관광을 다니는데 관광비용은 마을기금과 마을 내 사찰(수정사)의 지원금, 농협 지원금, 출향민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조사된 마을의 공동체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4-75>와 같다.

<표 4-75> 마을 내 공동체 활동 및 외부 활동 현황

마을명	마을 내 공동체 활동 현황	외부 참여 활동
오항2리 (오항동마을)	마을 내 모임은 거의 없지만 가끔씩 칠순과 팔순 때 잔치를 벌이곤 함.	다른 마을과 교류 거의 없음.

보광리 (보광마을)	자체적으로 노인잔치를 함. 외부 지원은 거의 없고 농협에서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줌. 칠순과 필순 때에는 시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함. 상이 있을 때는 마을주민들이 다 모이지만 사람이 없어 보통 군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치름.	전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몇 십 만 원을 지원해 행사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음. 면 체육 대회 때는 차량을 지원받아 참석함.
길곡2리 (재뒤마을)	겨울철(11월에서 3월까지) 등 농한기에는 점심과 저녁의 마을회관에서 함께 먹음. 이 마을은 옥천 육씨 집성촌이기 때문에 마을주민 간에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음.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이 '정감이 있는 마을' 이라고 표현함.	매년 봄철에 해안가 쪽으로 관광을 다님. 마을 소유의 공동경지를 처분한 기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별도의 회비는 받지 않음.
용화2리 (가마골마을)	마을 자체모임 시 종종 면이나 농협에서 술, 음료수, 떡 등을 약간 지원함.	-
어재2리 (압수마을)	마을행사 시 면에서 소주 1박스, 농협에서 10만원 지원하고 그 외 청년회의 지원과 마을기금, 개인 후원으로 충당함.	-
신동2리 (사기소마을)	1년에 한 번씩 (대)동계를 가짐. 이때 마을의 자산에 대해 결산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함. 보통 10월 30일에 개최함. 또한 경주 최 씨들은 문중 제실이 있어 일 년에 몇 차례 제사를 지냄. 경로잔치는 마을에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음.	동계에서 일 년에 한번 남해안 쪽으로 여행을 떠남. 경비는 이 전부터 내려온 마을기금과 이동통신사가 마을 공동소유 산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매년 300만원을 마을에 지원해 주 이 자금으로 마을행사를 치름,
백암3리 (배미마을)	마을 총회 시 함께 모여 음식을 먹음. 마을회관이 리에 하나있어 자주 모이지는 못함.	마을 기금으로 매년 한 차례 해안가 쪽으로 관광을 함.
목소리 (바탕골마을)	마을청년회에서 경로잔치를 벌여 참여함. 금년 보름에는 경로당에서 오곡밥을 함께 먹음.	일 년에 한두 차례 외부 관광을 다님. 관광비용은 마을기금, 마을사찰 지원금, 농협지원금, 출향민 지원금 등으로 충당함.

마을 내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마을에는 사당이나 마을정자 등이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유서 깊은 마을의 경우에는 문중의 조상을 모시는 제실이나 제각이 있어 후손들이 모이곤 한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마을 내 마을회관이 대부분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와서는 마을회관보다는 마을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경로당이 많이 설치되어 왔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강의료 관련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마을 내 공동체 시설 현황을 보면, 모든 마을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중 하나는 갖추고

있었다. 마을 규모가 비교적 큰 보광리의 경우에만 마을회관이 1곳, 경로당이 2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을정자의 경우에는 오항2리와 어재2리를 제외한 나머지 마을에는 모두 존재하며 마을 내 사당 등 전통시설은 8마을 가운데 5마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보광리는 앞서 설명했듯 효령 이씨의 제각이 있어 후손들이 1년에 한두 차례 보여 제를 올리고 있으며, 길곡2리의 경우에는 전주 이씨 제당이 있어 일 년에 한두 차례 제를 올리고 종친회 모임도 가지는데 이때 모두 50-60명의 후손이 찾아온다고 한다. 이 제당은 옛날에 장수였던 한 전주 이씨의 선조가 모셔져 있다고 한다. 용화2리는 옥천(관성) 육씨의 집성촌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에 영모제에서 시제를 지낸다고 한다. 옥천 육씨의 시조는 중국의 8역사의 한 명으로 조선에 왔다가 경순왕의 사위가 되어 정착하게 됐다고 한다.

〈표 4-76〉 마을 내 공동체 시설 현황

마을명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정자	사당 등 전통시설
오항2리 (오항동마을)		1		
보광리 (보광마을)	마을회관 겸 경로당		2	전주 이씨 제실
길곡2리 (재뒤마을)		1	1	전주 이씨 제실
용화2리 (가마골마을)		1		육씨 영모제
어재2리 (압수마을)	1		1	기우제비
신동2리 (사기소마을)		1	1	
백암3리 (배미마을)	마을회관 겸 경로당		1	경주 최씨 제실
목소리 (바탕골마을)	1		2	

마을 내 공동체시설 가운데에서도 가장 자주 찾고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마을회관 혹은 경로당이다. 보광리를 제외한다면 다른 모든 마을에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용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이곳 마을회관을 자주 찾는데 특히 겨울철(11월에서 3월까지)에는 이곳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다. 주민들이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농한기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나오기

도 하지만 겨울철에 개별 가구의 난방비가 비싸기 때문에 낮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매일 이곳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곳에서 공동으로 식사도 하고 종종 숙박도 함께 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겨울철에는 마을회관에 운영비(난방비+관리비)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쌀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4-44〉 마을 내 공동체시설인 마을회관(오항2리〈좌〉), 마을정자(보광리〈우〉)

오항2리의 경우 금산군에서 매년 가을부터(11월) 이듬해 2월까지 마을회관 운영비(난방비와 관리비)로 대략 210만 원이 지급한다. 길곡2리의 경우, 군에서 겨울철에 기름 3드럼과 매달 쌀 20kg짜리를 지원해준다. 경로당 운영비는 분기별로 22.5만 원(이전 20만 원)을 지원해준다. 용화2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지원을 받는데 연료비는 1년에 두 번, 모두 5드럼(한 드럼은 약 28만 원)을 지원받고 운영비는 20만 원씩 두 번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이를 모두 더하면 1년에 약 17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는다. 마을주민들에게 이 정도의 지원은 크게 부족함이 없는 지원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목소리의 경우에는 인근 사찰에서 매년 200만 원을 지원해줘 마을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어 다른 마을에 비해 마을운영비가 비교적 풍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3) 마을주민의 생활만족도, 계속 정주 의향 및 주민 친화도

그렇다면 한계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현재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8마을

대표의 응답 결과 4마을 주민대표는 현재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을 했고, 3마을 대표는 만족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한 마을대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것 없다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교통의 불편이 많았고(길곡2리, 목소리), 고향을 떠나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에 가더라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마을에서 산다는 의견도 있었다(어재2리). 용화2리 같은 경우에는 수변보호구역이라 규제가 심해 주택허가를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이곳은 수변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등에서 지원금(1,700만 원 정도)이 나와 마을회관 시설구입 및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한다.

한계마을 주민의 계속 정주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마을 가운데 6마을 주민대표는 마을주민들이 계속 정주하길 희망한다고 응답했고 길곡2리와 어재2리 대표는 계속 정주하는 것을 희망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산다고 응답했다.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시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고향에서 계속 정주하길 희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농촌노령연금도 적은 상황에서 농촌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을주민들 간 친화도를 보면, 8마을 대표 가운데 6마을 주민대표는 예전과 비교해 변함이 없거나 좋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마을대표는 2마을로 나타났다. 주민들 간 사이가 나빠진 이유를 보면, 도시민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땅을 측량해 마을길을 잠식하면서 새로운 전입자와 기존 주민 간 불화가 있는 사례(길곡2리)와 종친별로 파벌이 있고 종종 토지분쟁도 있는 사례(어재2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4-77>과 같다.

〈표 4-77〉 한계마을 주민의 계속 정주 여부와 주민 친화도

마을명	계속 정주 여부와 그 이유		주민 간 친화 정도와 그 이유	
	계속 정주 여부	이 유	주민간 친화 정도	이 유
오항2리 (오항동마을)	계속 희망함		변함이 없음	
보광리 (보광마을)	희망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음.	교통이 불편함.	더 나빠짐	도시민들이 들어오면서 마을분위기가 안 좋음. 도시인들은 자기 땅을 측량해서 마을길들을 잠식함.

길곡2리 (재지마을)	계속 희망함	현재 편하게 잘 살고 있음.	변함이 없음	변함없이 좋은 편임.
용화2리 (가미골마을)	희망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음.	희망이 없음. 연금이 차등 지원되어야 함. 농촌에서 20-30만원의 연금으로 살 수 없음.	더 나빠짐	종친별로 파벌이 있고 토지분쟁도 종종 발생함.
어재2리 (압수마을)	계속 희망함		변함이 없음	
신동2리 (사기소마을)	계속 희망함		변함이 없음	
백암3리 (배미마을)	계속 희망함		더 좋아짐	인근 산에서 정부의 우리 늪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심했는데 지금은 화해를 하고 잘 지냄.
목소리 (바탕골마을)	계속 희망함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 도시로 나가려고 하지 않음.	변함이 없음	생활에 여유가 없어졌지만 주민들끼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함.

5) 마을주민의 인식과 정책적 태도

(1) 마을발전과 차별에 대한 인식도

농촌마을의 변화와 발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활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농촌마을도 도시의 생활여건에 비하면 낙후됐으며, 지리적으로는 낙후되고 생활여건이 불편해도 생태와 환경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보존 및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로 평가될 수 있다. 한계마을에 대한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일반 마을에 비해 도로, 교통, 생활서비스측면 등에서 불편한 점이 있지만, 생태와 자연자원, 그리고 전통과 민속 등이 잘 보존되어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일반 마을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곤 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한계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이 다른 마을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상대적 피해의식 혹은 박탈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면 금산군의 한계마을 주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아래 <표 4-7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조사된 8마을 가운데 5마을 주민대표는 자신의 마을이 쇠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3마을 가운데 2마을 주민대표는 발전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1마을 주민대표는 정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체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을이 쇠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 마을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광리의 경우, 이전 새마을사업 때는 우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마을에 능력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할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 즉, 인구의 감소가 마을의 쇠퇴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용화2리와 백암3리의 경우에도 노령화가 되어 마을에 활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다고 응답했다. 어재2리의 경우에는 마을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하고 경제적 소득원도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즉, 의료환경의 낙후와 소득원의 부족을 쇠퇴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마을이 발전하고 있다는 응답의 내용을 보면, 도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길곡2리)거나 인근에 사찰이 생겨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귀향자도 늘고 있기 때문인 것(목소리)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계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이 다른 마을과 비교해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조사된 8마을 가운데 절반이 4마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3마을은 그다지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머지 1마을은 다른 마을과 비슷비슷하다고 응답했다. 차별을 받고 있는 주된 요인은 기반시설의 미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광리의 경우 기반시설이 안 돼 소외감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길곡2리의 경우 농로와 하천정비가 안 돼 농사에 불편이 많다고 응답했다. 신동2리의 경우, 마을대표가 행정기관에 작은 마을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나아가 소외된 마을이기 때문에 하수도시설, 정화처리시설의 설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백암3리의 경우에는 문화혜택의 부족을 지적했다. 이 마을대표는 현재 마을 내 문화프로그램이 없어 문화적 혜택이 거의 없는데 다른 마을에서 문화활동을 해도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계마을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대해 쉽게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4-78〉 마을의 발전 상태와 다른 마을과의 정책적 차별 여부

	마을의 발전 상태와 그 이유		다른 마을과의 정책적 차별 여부와 그 이유	
	발전 상태	이유	차별 여부	이유
오항2리 (오항동마을)	쇠퇴하고 있음.	인구가 점점 감소함.	비슷함	-
보광리 (보광마을)	발전하고 있음.	도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음.	있음.	농로와 하천정비가 안 돼 농사에 불편이 많음. 가옥이 낡아 비가 오면 누수가 많음. 면에 지붕보수개량을 신청했으나 다른 마을에 비해 선정이 어려움.
길곡2리 (재지마을)	쇠퇴하고 있음.	노령화가 되어 마을에 활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음.	없음.	-
용화2리 (가마골마을)	쇠퇴하고 있음.	마을이 너무 외진 곳에 있고,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하며 경제적 소득원이 없기 때문임	없음.	-
어재2리 (압수마을)	정체되고 있음.	지난 20년 동안 도로 하나 났고 조립식 건물 2개 생김. 주민들은 연로해지고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임.	있음.	작은 마을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지 말라고 요청함. 나아가 소외된 마을이기 때문에 하수도시설, 정화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함.
신동2리 (사기소마을)	쇠퇴하고 있음.	마을이 너무 외지고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임.	있음.	현재 마을내 문화프로그램이 없고 다른 마을에서 문화활동을 해도 참여하기 어려움.
백암3리 (배미마을)	발전하고 있음.	인근에 수정사가 생겨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귀향자들도 늘고 있음.	없음.	-
목소리 (비탕골마을)	쇠퇴하고 있음.	마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음. 이전에 새마을사업 때는 우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일할 사람이 없음.	있음.	기반시설이 안 돼 소외감을 느낌. 주변에 아토피축제와 보곡산골 산벚나무축제를 하고 있음. 이전에는 보광리가 기금이 많았으나 지금은 인근의 성곡리가 가장 많음.

(2) 한계마을의 정책 혜택 여부와 정책 투입 우선순위

지역적으로 편차는 있지만, 도로와 교통, 생활복지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계마을에 대해 크게는 정부와 시도 차원에서, 작게는 시군과 면단위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한 정책을 투입하는 곳도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 농촌마을과 정책적 차별성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1980-90년대에는 정부차원에서 오지개발사업이라는 정책을 통해 오지마을에 대한 도로, 하천, 웅벽, 주택개량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정책이 다양화되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정책이 다변화되면서 오지에 대한 개별사업보다는 농촌공간의 발전이라는 전체적 측면에서 농촌개발사업들이 실시되어 왔다.

그렇다면 현재 금산군 한계마을의 경우 어떠한 정책적 혜택들이 있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마을이 다른 마을에 비해 특별한 혜택을 받았는지에 관한 조사에서 조사된 8마을 가운데 7마을은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마을에서 자신의 마을이 한계마을이기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백암3리의 경우를 보면, 자신의 마을은 복수면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빨래방차가 방문해 이불 빨래를 해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독거노인이나 고령노인에게 무척 유용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서비스가 금산군 차원이 아닌 면차원의 서비스라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신동2리의 마을대표는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모른다고 응답했다. 사실 지자체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정보접근의 어려움과 부족 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한계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을에 더 많은 정책이 투입되길 요구했다. 조사된 8마을 가운데 7마을 대표는 자신의 마을에 더 많은 정책이 투입되길 요구했다. 나머지 1마을의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한계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에 어떠한 정책이 더 투입되길 원할까? 조사에 따르면, 마을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정책은 노령복지연금 등의 확대, 도로 및 교통의 확대, 의료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등 마을시설의 확충을 꼽았다. 이외에도 마을 내 체육시설의 확충, 귀향 및 귀농·귀촌자의 적극 유치 등이 있었고 어재2리의 경우에는 발작업에 대한 지원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노령복지연금

과 의료서비스 확대가 하나의 주요 정책 요구사항이고 도로와 마을회관(경로당)의 시설 확충이 다른 하나의 주요한 정책 요구사항임을 알 수 있다. 마을별 정책투입 우선순위는 아래 <표 4-79>와 같다.

<표 4-79> 한계마을의 정책 수혜 여부 및 정책투입 우선순위

	특별혜택 여부	더 많은 정책투여 요구 여부	정책투입 우선순위
오항2리 (오항동마을)	없음	찬성	① 노령복지연금 등의 확대 ② 도로, 교통의 확대 ③ 의료서비스 확대
보광리 (보광마을)	없음	찬성	① 도로, 교통, 상수도 확대 ② 마을주민 간 단합된 활동 ③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시설 확충
길곡2리 (재지마을)	없음	찬성	①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시설 확충 ② 노령복지연금 등의 확대 ③ 의료서비스 확대
용화2리 (가마골마을)	없음	불찬성	① 기타(농촌 발작업 지원) ② 의료서비스 확대 ③ 도로, 교통의 확대
어재2리 (압수마을)	없음	찬성	① 마을주민 간 단합된 활동 ② 의료서비스 확대 ③ 귀향 및 귀농귀촌자 적극 유치
신동2리 (사기소마을)	있음	찬성	① 의료서비스 확대 ② 노령복지연금 등의 확대 ③ 도로, 교통의 확대
백암3리 (배미마을)	없음	찬성	① 노령복지연금 등의 확대 ② 의료서비스 확대 ③ 도로, 교통의 확대
목소리 (바탕골마을)	없음	찬성	① 도로, 교통의 확대 ②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시설 확충 ③ 체육시설 확충

위의 <표 4-79>와 같이 도식적인 선택과는 별도로 한계마을 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요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마을대표의 구체적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곡2리: 버스 등 교통편의를 지원해주길 바라며 농로를 확·포장해 경운기와 트랙터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용화2리: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줘야 한다. 들깨잎 등 지역특산물에 대해 특성화단지를 조성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들이 필요하다.

어재2리: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토지를 매입하기 어렵다. 정부에서 땅을 매입해 고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주민 공동주택 조성도 고려해 봤지만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포기한 상태다. 정부에서의 토지매입이 필요하다.

신동2리: 지자체에서 환경정비를 위해 마을 도랑을 정비하고 하수도 및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해야 쥐야한다.

백암3리: 마을 운영비를 확충해주기 바란다. 현재 군에 지원하는 마을운영비는 연간 80만 원 정도이다. 여기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으로 받는 80만 원을 마을운영비로 충당하지만 부족한 상태이다.

목소리: 마을에서는 체험마을사업, 자연환경림, 자연수목림(휴양림)에 관심이 많으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보광리: 소멸위기에 있는 마을은 정부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멸이 안 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한계마을 대표들의 정책 요구는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내용별로 보면, 도로 및 교통편의 확대(길곡2리), 특화사업을 통한 젊은 농업인 유치(용화2리), 공동주택의 조성(어재2리), 정화처리시설 지원(신동2리), 마을 운영비 확충(백암3리), 생태체험마을조성(목소리) 등 주로 마을 현안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협력 또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조사된 마을 가운데에는 마을 자체적으로도 마을발전에 관한 여러 구상들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을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다 담아낼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자신의 마을이 어떻게 하면 소멸되지 않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많은 고민을 담은 사업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조금이나마 귀담아 들어주고 그들과 협력해 마을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광리 마을대표의 진술, 즉 “소멸위기에 있는 마을은 정부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멸이 안 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향후 한계마을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6) 소결

본 절에서는 한계마을에 대한 분석 단위를 기존의 리단위에서 자연부락 단위로 분석을 했으며 분석방법 또한 기존의 정량적인 분석에서 정성적인 방법을 이용해 심도있게 분석했다. 사례마을의 선정은 기존의 리단위 통계에서 인구 50인 이하 혹은 65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인 행정리 가운데 과소 혹은 고령의 자연마을을 선정했다. 조사대상 마을 선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전에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기도 했지만 물리적 제한으로 전체 지역을 다닐 수는 없어 면사무소의 담당 직원과의 사전 확인작업을 거친 후 최종 조사대상 마을을 선정했다. 분석내용은 크게 네 부분, 즉 마을인구 및 정주환경 변화 실태, 토지이용 및 환경변화 실태, 공동체 활동의 현황과 변화 실태, 한계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정책적 태도에 관한 내용 등으로 나뉜다. 본 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한계마을을 결정짓는 요인은 고령화율보다는 인구의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적은 오항2리(24명)와 용화2리(37명)의 경우에는 마을주민의 수가 적고 고령화율이 높다보니 마을주민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욕도 낮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에 반해, 보광리의 경우에는 마을인구 67명 중 37명이 65% 이상의 고령인구였으나 마을 내 보존되고 있는 전통자원과 자연풍광을 이용한 전원마을 조성 계획 등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전부터 어느 정도

마을 규모가 있다 보니 최근 들어 귀농·귀촌자들이 늘고 있고, 마을 종친회 등도 활성화되어 있어 향후 마을개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마을은 어떤 식으로든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도로 및 교통여건은 한계마을을 특징짓는 하나의 요인이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될 수 없다.** 앞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항2리, 어재2리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도로와 교통이 열악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교통이 개선된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하거나 마을이 발전된다는 보장은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용화2리의 경우 마을 앞까지 버스가 하루에 6번 들어오지만 이 마을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백암3리의 경우에도 대전으로부터 하루에 8차례 버스가 들어오지만 마을 내 인구가 크게 증가하거나 발전하지는 않고 있다. 목소리의 경우에는 하나의 행정리 단위 안에 5개의 자연부락이 있고 이들 자연부락 간에는 산을 끼고 있어 교통여건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계마을 주민들이 도로와 교통여건의 불편함을 많이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통과 도로의 여건이 한계마을을 특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으며 하나의 행정리 안에서도 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계마을의 특징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겸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작물은 인삼, 갯잎, 콩, 벼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겸업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10마을 가운데 2마을에서 3가구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구가 적고 고령이다 보니 대부분의 한계마을에서는 농업 이외의 소득은 거의 없는 취약한 소득구조를 가지고 있다.

넷째, **한계마을의 특징 중의 하나인 휴경지 면적 또한 한계마을을 특징짓는 결정적 요인은 되지 못한다.** 한계마을 가운데 휴경지가 거의 없는 마을(백암3리, 신동2리, 목소리)에서 경지 면적의 50% 가까이가 휴경지인 마을(오항2리)까지 그 편차가 매우 컸다. 물론 휴경지가 많은 마을이 한계마을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지만 한계마을이라고 해서 모두 휴경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한계마을의 특징 중의 하나는 마을 내 공동체조직이 적고 그 활동도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청년회, 작목반, 전통민속 활동조직을 가지고 있는 마을은 10마을 가운데 3마을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마을에서 주민들은 겨울철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주로 모여 생활하며 일년에 한 두 차례 마을기금으로 단체관광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보광리, 길곡2리, 용화2리, 백암3리처럼 마을 내 제각이 있어 후손들이 일 년에 한 두 차례 시제를 지내는 것 외에 마을 내 공동체 활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부분의 한계마을은 자신의 마을이 한계마을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

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반면, 자신의 마을이 한계마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책투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책 투입이 필요한 부분은 도로 및 교통여건 개선, 노령복지연금 등의 확대,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시설 확충, 의료서비스 확대, 마을주민 간 공동체 활동의 확대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금산군 내 한계마을의 특징을 8개의 자연부락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앞서 설명했지만 한계마을을 특징짓는 주요한 변수는 인구규모와 고령화율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한계마을의 특징은 인구규모와 고령화율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변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예시된 8개의 한계마을(행정리)에 대해 정량적 조사와 정성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평가를 하면 아래 <표 4-80>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4-80〉 8개 한계마을에 대한 재평가 결과와 그 이유

기존 한계마을	선정 기준	재평가 결과	그 이유
오항2리 (오항동마을)	통계 수치	한계마을	고령, 과소, 교통여건 불리
보광리 (보광마을)	해당지역 공무원 추천	비한계마을	고령인구가 50%가 넘지만 마을가구수와 외지인의 유입이 많고 마을 전통도 유지되고 있음.
길곡2리 (재뒤마을)	통계 수치	한계마을	고령, 교통, 주민의지 빈약
옹화2리 (가마골마을)	통계 수치	한계마을	고령의 마을주민들이 외지인의 유입을 원치 않아 스스로 한계마을이 되어감.
어재2리 (압수마을)	통계 수치	한계마을	고령, 교통여건 불리, 쇠락
신동2리 (사기소마을)	통계 수치	한계마을	고령, 마을 내 추진사업 미진
백암3리 (배미마을)	통계 수치	비한계마을	고령인구가 많고 산간고지대에 위치하 고 있지만 대전에서 들어오는 버스편도 많고 외지인의 유입도 많음.
목소리 (바탕골마을)	해당지역 공무원 추천	반한계마을	2개 자연마을은 비한계마을이고 3개 자 연마을은 교통이 불편한 한계마을임.

위의 표에서처럼 기존의 8개 한계마을(행정리)을 조사한 결과 5개 마을은 한계마을로 판명났으나 3개의 마을은 한계마을이 아니거나 반한계마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이유는 보

광리와 백암3리처럼 외지인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교통편이 좋아지는 이유도 있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소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계마을은 아니지만 자연마을 단위로 보면 한계마을과 비한계마을이 섞여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같은 행정리 안에서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계마을에 대한 설정을 단순히 기존의 리단위 행정구역 통계상의 인구규모와 고령화율만으로는 확정될 수 없는 복잡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마을을 설정하는 데에는 정량과 정성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을의 활력도, 주민들의 의지, 행정리 안의 자연마을 간 격차 등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5. 종합고찰

본 장에서는 충청남도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제 한계마을 관련 조사·분석을 통하여 한계마을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금산군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논의하였던 한계마을의 기준을 재검점하여 한계마을의 기준을 검토하고, 또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한계마을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정책적 투입실태와 수요가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한계마을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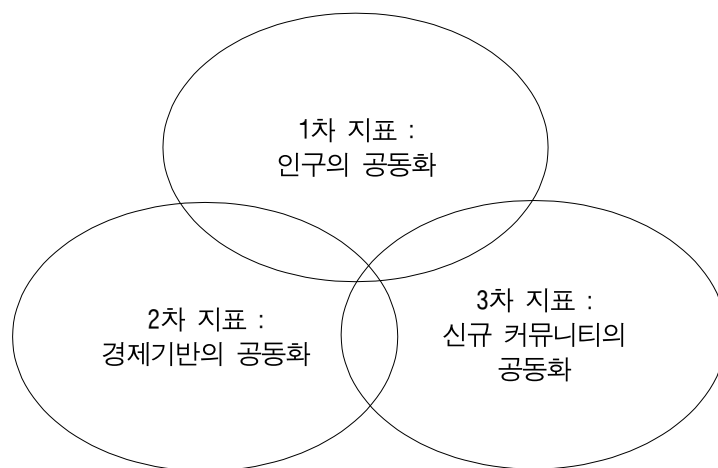
선행연구에서 한계마을 관련 기준은 주로 실제 거주인구수(가구수)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령인구의 비율보다는 절대인구의 규모가 한계마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비록 동일하더라도 절대인구 규모가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은 상이한 실태를 보였으며, 일반적으로 50명 이하 규모의 마을이 한계마을에 가까운 특징을 보였다. 물론, 인구 규모 50명 이하의 마을이라 할지라도 한계마을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특수한 마을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계마을의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구규모만이 아닌 마을의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인구규모 50명¹⁰⁾의 기준 역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한계마을의 주요 측정지표로 활용하였던 3가지의 기준, ‘인구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인구의 공동화’는 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고령인구 비율보다는 절대인구 규모로 측정될 수 있으나, ‘토지의 공동화’와 ‘공동체의 공동화’는 우리나라의 모든 농촌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으로 측정지표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토지의 공동화’는 휴경지와 빈집 등의 현황과 관련이 있는데, ‘휴경지’는 일반적으로 인구규모가 적을수록 휴경지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근래에 와서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는 추가적인 휴경지 발생이 정체되어 현재의 수준

10) 실제 거주하는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50명 보다는 50명 이하가 한계마을을 판단하는 보다 명확한 기준이 되겠지만, 다양한 농촌마을의 상황과 유형이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 약간은 큰 범주로 50명을 기준으로 제시함

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빈집’은 인구나 고령화비율과 관계없이 마을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 공동화’의 경우에도 전통 농촌마을의 ‘품앗이’, ‘두레’ 등의 공동체는 이미 거의 모든 농촌마을에서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고, ‘대동계’ 정도가 일부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현존하는 공동체는 대부분 고령화에 상응하는 ‘노인회’나 ‘부녀회’ 정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계마을의 측정지표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마을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과 신규인구의 유입 부족임을 감안하여 ‘토지의 공동화’는 ‘경제기반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는 ‘신규 커뮤니티의 공동화’로 새로운 측정지표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기반의 공동화’는 토지의 공동화를 포함하여 소득기반 및 소득원이 창출되는지 여부, 작목반, 농어업법인 등 경제조직의 활동 여부 등을 판단하는 지표이며, ‘신규 커뮤니티의 공동화’는 기존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커뮤니티와 신규인구유입에 따른 새로운 주민커뮤니티의 형성, 그리고 마을발전을 위한 움직임(추진위원회 활동, 도농교류 등) 등을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고, 이들 지표는 한계마을의 중요한 측정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인구의 공동화’는 한계마을을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1차적 지표(정량적 지표)이고, ‘경제기반의 공동화’는 간접적으로 한계마을 여부를 세부적으로 재확정 짓는 2차적 지표(정성적 지표)이며, ‘신규 커뮤니티의 공동화’는 농촌마을의 한계마을화와 관련된 미래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3차적 지표(정성적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림 4-45〉 한계마을 판단지표

② 한계마을의 특징 및 문제점

인구규모를 제외한 일반마을과 구별될 수 있는 한계마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단, 아래 한계마을의 특징이 한계마을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소농 위주의 농업활동과 미약한 농외소득구조를 갖고 있다. 한계마을은 대부분 시설농업 등 농업특용작물을 재배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의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소농위주의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마을 내에 작목반이나 농어업법인 등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농업소득 이외의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소득원이 거의 없어, 전반적으로 열악한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다.

둘째,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어렵다. 토지공동화의 대표적인 항목은 휴경지와 빈집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토지공동화의 주된 원인은 휴경지의 경우, 고령화와 농업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고, 빈집의 경우는 인구감소로 인한 주택거주자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토지공동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의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한계마을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예로, 한계마을의 토지는 최근 외지인이 소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외지인이 실제 거주나 농업활동을 위해 구입하기 보다는 투기의 목적이 강하다. 이로 인하여 마을의 지속성이나 발전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아무리 좋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결국 이들 외지인의 이기적인 생각이 마을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한편, 한계마을의 토지를 마을주민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마을주민은 농지가 휴경지가 되고, 주택이 빈집이 되더라도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주로 토지소유자의 자녀들이 향후 귀농·귀촌할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이다. 물론 후세들의 귀농·귀촌으로 인하여 마을의 인구유치가 실현되면 다행이나, 대부분의 한계마을은 눈에 띄만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계마을은 가속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한계마을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개별 공장 및 개발행위가 거의 없다. 금산군 공간구조 및 공간특성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지역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특성인 도로와의 접근성, 경사도, 금산군청과 읍면소재지로부터의 접근성 등의 인자는 한계마을 특성요소로 영

향은 있으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였다(공간특성은 마을별 공간단위의 분석이 아닌 행정리 공간단위로 분석되었기에 공간단위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즉, 중심지로부터의 접근성 및 편의시설, 자연환경 등의 공간적 특징은 한계마을과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도로율과 지가에 의한 특징 즉,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마을이거나 개발행위가 거의 없어 인구유입이 어려운 입지적 특징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넷째, 마을별로 분석 시 한계마을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한계마을의 경우 접근성이 양호한 경우도 있지만 한계마을은 대체적으로 주변 거점지역이나 인근도시로부터 마을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접근성은 간·지선도로 인프라의 조성 여부와 농업 활동과 관련된 마을 경사도 등과 관련이 있고, 주로 산간 오지지역에 위치한 산촌마을은 일반 평야지역에 위치한 농촌마을에 비해 불리한 접근성을 갖고 있어 농업활동 및 커뮤니티 활동 용이성, 서비스로의 접근성(동절기 제설작업 난해 등) 등이 부족한 한계마을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물리적 접근성과 함께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일부 한계마을의 특징 중의 하나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역량을 갖춘 리더가 부재하다. 농촌마을에 마을발전의 의지와 역량을 갖춘 리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마을 분위기 형성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된다. 인구규모나 고령화 정도가 비슷한 마을이라 할지라도 우수한 리더가 있는 마을은 비록 현재는 한계마을화 되고 있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마을이 다시 활성화 될 잠재력이 보이는 반면, 그렇지 못한 마을은 침체의 늪을 빠져나올만한 희망을 찾기 힘들다. 대부분의 한계마을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역량을 갖춘 우수한 리더가 부재한 실정이며, 이는 결국 마을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는다. 전통 농촌마을의 공동체는 이미 대부분 사라지고 몇몇 공동체만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 여부는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한계마을은 인구유입의 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마을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 도농교류의 추진 등도 거의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열악한 서비스수준으로 취미, 여가, 건강 활동 등의 새로운 문화 커뮤니티는 거의 형성되지 못하

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커뮤니티가 활성화 된다면 마을의 지속성에 중요한 잠재력이 될 것이다.

③ 한계마을정책 시사점

한계마을을 ‘반드시 유지시킬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아니면 ‘소멸되도록 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와 방법은 무엇인가?’ 등 한계마을과 관련된 논의 과제는 무궁무진하다. 일반적으로 한계마을 주민들은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국토균형발전과 사회적 손실 방지를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한계마을정책 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마을과 구별되는 한계마을 정책체계가 필요하다. 금산군의 모든 농촌마을의 정책투입 실태를 살펴보면 특정 몇몇 지역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마을에 유사한 수준의 동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마을과 구별되는 한계마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마을의 특징과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한계마을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향후, 일반마을과 한계마을에 대해 각각 차별화되는 정책도입과, 이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농촌마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계마을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중 하나는 마을단위 Data의 부족이다. 즉, 농촌마을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계마을화 되어 가는 과정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량적이고 시계열적인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상당수의 농촌마을이 한계마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맞춤형 정책이 투입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은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이다. 일본의 경우, 매년 집락카드를 작성하고 통계를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마을연구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인구유치 및 접근성 개선은 한계마을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인구의 감소로 인한 마을의 소멸이 한계마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의 인구유치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는 외지인의 유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만, 한계마을에서는 마을소멸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신규마을의 조성, 대규모의 귀농·귀촌 단지의 조성 등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한계마을에서 문제점으로 갖고 있는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접근성의 향상은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의 개선에도 의미가 있지만, 전입인구 및 방문객의 유치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적정인구의 확보는 곧 인적역량의 강화를 의미하며,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

넷째, 한계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은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기초생활환경 개선이다. 모든 농촌마을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한계마을에서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의 서비스 기반 확충과 주거환경, 교통편의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령복지연금 등의 확대, 도로 및 교통서비스 확대, 의료서비스의 확대,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의 공동시설의 확충, 체육시설의 확충 등과 함께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공동주거단지)의 조성 등도 한계마을의 사업으로 제시되었다.

다섯째, 공공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농촌마을 주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마을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마을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보다는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유하였으며, 한계마을의 경우 외부의 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스스로의 노력으로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등의 의견이 한계마을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의 내발적 발전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많은 외부역량의 투입이 있을 지라도 내부역량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한계마을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공공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교육 및 인구유치를 통한 리더의 확보 및 주민의 의식개혁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한계마을의 소멸과 유지에 관한 지속적인 전 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계마을을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소멸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마을 주민은 어떻게든 마을이 소멸되어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국토의 균형발전, 사회적 손실의 방지 등을 들고 있다. 반면, 한계마을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로는 어차피 소멸될 마을이라면 한계마을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마을을 육성하여 국가적 낭비를 줄이는 데 있다. 이웃 일본에서는 한계마을 전략을 ‘재생’, ‘재편’, ‘소멸’의 3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농촌의 실정에 맞는 한계마을전략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제5장 한계마을정책 추진방향

1. 한계마을정책 개념 재정립

본 연구에서는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 기존의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계마을’을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인하여 생활적 기능, 생산적 기능 등의 마을의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이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계마을정책’은 “한계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방침과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한계마을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기존에 이야기하고 있는 ‘인구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제4장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인구의 공동화’, ‘경제기반의 공동화’,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의 3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계마을의 개념을 재정의 하면 ‘한계마을’은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인하여 마을의 다양한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로, 인구의 공동화, 경제기반의 공동화,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가 발생하는 마을”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한계마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방침과 수단”을 ‘한계마을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마을의 기능은 한계마을의 특징으로 제시한 3가지의 공동화와 관련된 기능을 의미한다. 첫째, 인구의 공동화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적정인구의 유지가 한계에 달한 상태를 의미하고, 둘째, 경제기반의 공동화는 생산기반을 포함하여 식량생산 및 소득창출이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한계에 달했거나 또는 의지가 상실돼 재생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셋째,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는 자연인구 증가 가능성이 상실되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인구유입에 따른 공동체의 형성의 가능성이 없고 실제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물론, 마을 내에 가임인구의 존재를 통해 자연인구 증가의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역 등의 마을은 한계마을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인구유입이 되고 있더라도 유입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신규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 임시체류형 인구증가는 한계

마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마을의 특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계마을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한계마을의 3가지 특징을 단계별로 적용하여 마을을 ‘분류’하고 ‘판단’하여 ‘조치’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즉, 1단계, 인구의 공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량적 기준에 의해 마을을 ‘분류’하는 작업을 거치고, 2단계, 1단계를 통해 분류된 마을을 대상으로 경제기반의 공동화와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성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작업을 통하여 한계마을을 구분한다. 그리고 3단계는 구분된 한계마을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조치’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다시 상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 한계마을정책 기본 프로세스

첫째, 인구 50명을 기준으로 50명 이하를 한계마을의 대상마을로 ‘분류’한다. 물론, 인구 50명의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한계마을을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 인구나 고령화 비율 등 한 두개의 정량적인 기준으로 한계마을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구 50명 이하의 마을에서 대다수의 한계마을이 발생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기준이라 판단되고, 인구 50명 이상에서도 예외적으로 한계마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한계마을의 특수한 경우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비율이나 한계마을과 관련된 수많은 정량적 기준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결국은 모든 지표가 인구로 귀결됨을 알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인가지표를 한계마을 분류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인구 50명 이하에서도 다양한 마을의 유형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마을 중에서 한계마을인지의 여부는 다음의 ‘판단’의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둘째, ‘경제기반의 공동화’ 및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를 기준으로 한계마을을 ‘판단’한다. 우선 ‘경제기반의 공동화’는 인구 50명 이하로 분류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토지(농지 등)

이용에 있어 유휴지(휴경지 등)가 발생하였거나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농업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자급자족을 제외한 소득창출(농외소득 포함)의 일자리가 없으며 마을 내 작목반이나 농업법인 등의 경제조직과 그 활동이 없는 경우 한계마을로 간주한다. 한편, 마을 내에 유휴지가 발생하고 있거나 마을 내에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없더라도 마을주민 마을 외부의 일자리에 의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의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 여부에 의해 한계마을을 판단한다. 즉,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는 마을내 자연증가 인구가 없다는 전제하에 외부에서의 인구유입이 없거나, 인구유입이 있더라도 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새로운 커뮤니티활동(추진위원회, 도농교류 등)이 없는 경우 한계마을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마을이 과소화·고령화되어가는 상황에 외부에서 주말체류형이나 특정기간 체류형 등의 유입인구가 있더라도 마을 커뮤니티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형태라면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로 간주하여 한계마을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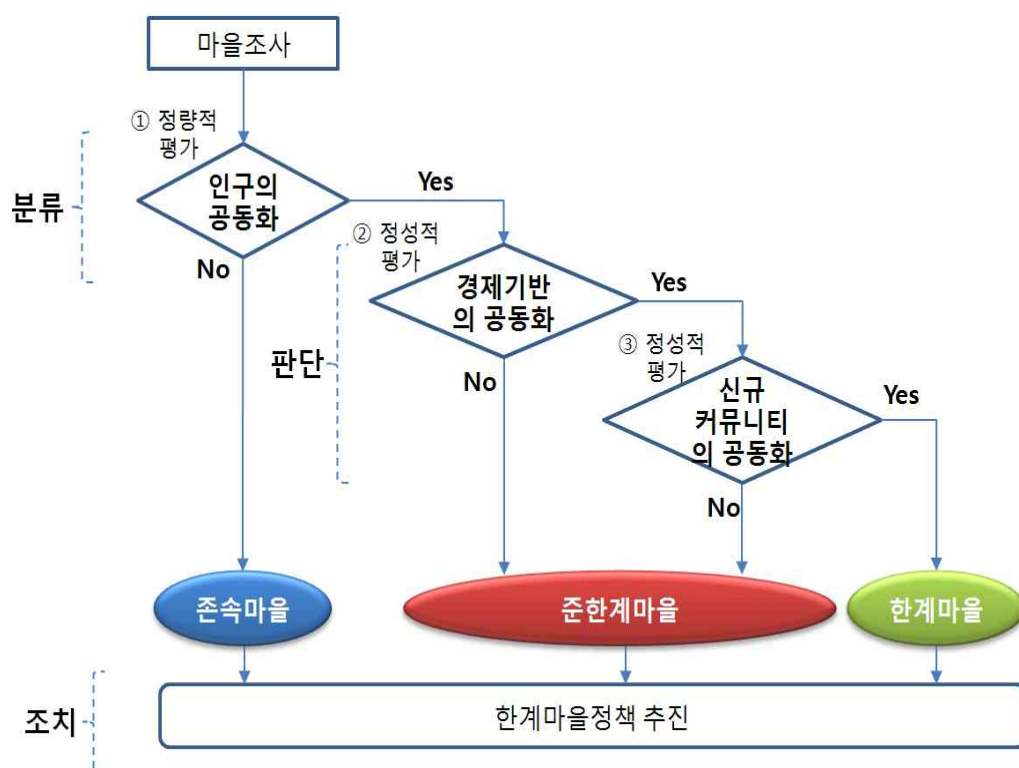
셋째, '분류', '판단'에 의해 도출된 한계마을에 대해 마을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정책을 투입하는 '조치'의 작업을 수행한다. '조치'의 작업은 한계마을의 정책적 대응을 의미하고 이러한 정책대응의 기본방향은 본 장의 '3. 한계마을 정책 방향'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특히, '분류'의 과정은 정량적 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짐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판단'의 과정은 정성적 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과정으로 '경제기반의 공동화' 및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에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사·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표5-1> 참조)

〈표 5-1〉 한계마을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

항목		검토 내용
경제기반의 공동화	토지이용	- 현재 유휴지(휴경지 등) 현황 - 유휴 토지(휴경지 등)의 면적 변화
	농업활동	- 자급자족 이상의 농업생산 활동(소득창출) - 작목반, 농업법인 등의 조직 및 활동현황
	기타 경제활동	- 농외소득활동 및 마을외 직업활동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	자연 증가 인구	- 마을 내 인구의 자연 증가
	인규유입	- 새로운 인구 유입
	공동체 활동	- 새로운 공동체 활동(추진위원회, 도농교류 등) - 인구유입에 의한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

또한, '분류', '판단'의 과정을 통하여 한계마을을 구분하는데 있어 오노야까라(大野晃)가 제안했던 '존속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의 구분을 적용하였다. 즉, 분류의 과정에서 인구의 공동화가 진행되지 않는 마을(인구가 50명을 초과)은 '존속마을'로 간주하고, 인구의 공동화가 진행된 마을(50명 이하의 마을) 중에서 판단의 과정을 통하여 경제기반의 공동화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경제기반의 공동화가 진행되었더라도 신규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마을은 '준한계마을', 그리고 경제기반의 공동화와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마을은 '한계마을'로 간주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상의 '분류', '판단', '조치'의 과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 한계마을정책의 상세 프로세스

2. 한계마을정책의 기본원칙 및 의의

1) 기본원칙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한계마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바탕이 되어야 할 기본원칙(기본전제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마을의 판단은 몇 가지 지표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모든 마을은 각 마을이 갖는 특수한 상황과 마을 고유의 특성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를 몇 가지의 지표로 판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마을의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해 한계마을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력과 사회학적이고 인류학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한계마을의 판단하는 완벽한 지표를 개발하더라도 항상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인구라는 정량적 기준 이외에 경제기반, 신규 커뮤니티 등에 관한 정성적 평가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평가체계는 보편타당하고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계마을을 판단하는 표준화된 기준이다. 즉, 대부분의 마을의 경우, 본 평가체계를 적용하여 한계마을을 판단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다고 반드시 본 평가체계의 결과가 모든 한계마을을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구, 경제기반, 커뮤니티 이외에 한계마을로 진행되는 특수한 상황과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예외적인 한계마을이 반드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셋째, 한계마을 문제의 접근은 국토균형발전, 사회적 평등, 정책투입의 효율성 등 다양한 가치판단의 문제에서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전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한계마을의 문제는 한계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의 문제가 아닌 국토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기초정주단위의 하나인 한계마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한계마을이 갖는 의의와 다양한 기능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대응할 것인가 등의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진리와 정답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절대적인 한계마을정책 방향 역시 존재하지는 않는다. 단순화시켜 이야기 하자면 어떠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라도 유지·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정책투입의 효용성,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넷째, 한계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1차 주체는 해당마을 주민이다. 즉, 한계마을에서 마을이 소멸되는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도 결국 해당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역량에 달려 있고, 또한 한계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투입 및 대안을 결정하는 주체도 결국 마을주민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다.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 한계마을을 해체시키거나 재편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한계마을을 둘러싼 모든 문제의 해결은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반드시 직접적으로 마을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주민들의 결정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단, 한계마을 주민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의식개혁과 스스로의 탈출구 마련을 위한 주민교육과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한계마을 해결을 위해 마을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한계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마을만 국한시켜 고려해서는 안 된다. 한계마을로의 진행과 마을의 소멸은 해당 마을의 문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해당 마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 또는 시·군이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한다. 즉, 한계마을은 한계마을의 내부적 문제를 포함하여 인접한 다양한 위계의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이러한 한계마을의 문제해결 역시 마을내부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위계의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로, 인근지역으로 인구유출이 발생할 경우 인구유출이 발생하는 원인을 인구유입이 되는 지역과 비교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마을이 한계마을화 되는 이유를 인근 지역과 해당 지자체, 때에 따라서는 광역자치단체 이상의 단위에서 원인검토와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마을은 공간이 아니라 사회이고, 한계마을정책의 궁극적 관심은 사람(공동체)에 있다. 한계마을의 가장 큰 특징과 원인은 인구의 감소에 있으며, 인구의 감소는 곧 공동체의 소멸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전통농촌사회가 농업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전승되어 왔고, 이러한 농촌공동체의 활성화는 농촌의 정체성의 확립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농촌지역개발정책에 있어 대부분 농촌공간을 기초로 하는 사업들이 추

진되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반면, 한계마을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간개발정책이 아닌 사람과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한계마을정책은 일반마을정책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 및 농촌개발정책에 있어 낙후지역이나 과소화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된 바 있으나 실제 추진되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농촌지역(마을)에서 추진되는 사업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특히, 최근에 광특회계에 의해 추진되는 일반농산어촌사업 역시 사업대상지역이나 마을이 일반마을인지 한계마을인 등에 관한 마을의 실태 및 잠재역량과는 관련 없이 모두 동일한 형태의 사업이 적용되고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계마을은 마을의 잠재자원, 주민의 역량, 마을의 제약조건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일반마을과 분명히 구분이 되는 마을이며,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명확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계마을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덟째, 한계마을의 개념과 한계마을정책 방향은 시대의 흐름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마을도 한때는 국가적인 산아제한정책에 따라 인구감소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여건이 180도 바뀌어 오히려 인구감소와 마을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즉, 한계마을의 개념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 인구급증에 의해 마을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이 될 수도 있고, 최근과 같이 인구감소로 마을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결국 이와 같이 시대의 흐름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한계마을의 개념과 한계마을정책 방향이 변화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한계마을을 둘러싼 가치판단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그리고 전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어떻게 도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단편적인 예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상 한계마을의 소멸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공식적인 거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소멸시키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한계마을의 소멸이 당연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1 한계마을의 판단은 몇 가지 지표로 단정해서는 안 됨
- 2 항상 예외적인 한계마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 3 한계마을 문제의 접근은 곧 가치판단 및 국민적 합의의 문제임
- 4 한계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1차 주체는 해당마을 주민임
- 5 한계마을 문제해결에 한계마을만 국한시켜 고려해서는 안 됨
- 6 한계마을정책의 궁극적 관심은 사람(공동체)에 있음
- 7 한계마을정책은 일반마을정책과 차별화되어야 함
- 8 한계마을 개념과 한계마을정책 방향은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

〈그림 5-3〉 한계마을정책의 기본원칙(전제조건)

2) 의의 및 필요성

한계마을정책이 갖는 의의 및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농어촌지역에서 당면하고 있거나 미래 당면할 가능성이 높은 한계마을 및 마을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여 전 국민적인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 최근 농어촌마을의 한계마을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자연마을단위에서는 이제까지 소멸되었거나 소멸을 앞두고 있는 마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국토공간의 한 부분을 점유하였던 농어촌마을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중요한 사안으로, 한계마을정책의 도입은 이러한 위기감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 형성과 함께 한계마을의 문제를 풀어나갈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한계마을은 국토정주체계의 최하위 위계의 구성단위(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나의 유형으로, 이제까지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었던 한계마을을 한계마을정책을 통하여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즉, 일반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발전역량으로 인해 직접적인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마을단위의 문제가 그 이상의 위계단위로 전이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씨앗이 항상 잔존해 있었다. 한계마을정책은 이러한 악순환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한계마을정책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이 지닌 다면적(공익적)기능을 유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한계마을은 일반 농어촌마을이 지닌 다면적(공익적)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국토보전의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계승자로서 온전히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계마을정책은 한계마을이 지니고 있는 가치의 재해석과 국가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 등의 촉진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넷째, 한계마을정책은 한계마을을 정책대상으로 하지만, 이는 곧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문제의 종착점은 결국 한계마을의 발생과 한계마을화 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며, 한계마을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은 곧 농어촌지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일치한다. 즉, 한계마을정책은 농어촌지역개발정책의 한 영역임과 동시에 향후 농어촌지역개발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섯째, 한계마을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책이다. 이제까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평등, 공정한 기회의 제공,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의 논리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그 이하의 단위인 지역 내에서의 불균형 발전,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을 지지하는 지방에서조차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스스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한계마을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3. 한계마을정책 방향

1) 기본방향

본 연구에서는 ‘한계마을’을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인하여 마을의 다양한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로, 인구의 공동화, 경제기반의 공동화,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가 발생하는 마을”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한계마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방침과 수단”을 ‘한계마을정책’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마을의 분류에 있어 인구의 공동화가 진행되지 않는 마을은 ‘존속마을’, 인구의 공동화가 진행된 마을 중에서 판단의 과정을 통하여 경제기반의 공동화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경제기반의 공동화가 진행되었더라도 신규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마을은 ‘준한계마을’, 그리고 경제기반의 공동화와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마을은 ‘한계마을’로 구분하였다. 한계마을정책은 이러한 ‘존속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을 대상으로 하되, 이 중에서도 ‘준한계마을’과 ‘한계마을’을 한계마을정책의 주 대상으로 한다.

각각의 마을유형에 따른 정책의 기본방향은 우선 존속마을은 ‘지속가능한 유지·발전 및 거점기능강화’, 준한계마을은 ‘농어촌 지역개발의 주요 타깃으로 한계마을로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치, 정주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한계마을은 ‘마을재생 및 재편’으로 설정하였으며, 마을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특히, 존속마을은 기존의 잠재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 H/W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고, 준한계마을은 한계마을로 진행되지 않기 위한 조직이나 활동, 프로그램의 마련 등 주로 S/W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한계마을에 대해서는 Case By Case에 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마을재생, 신규마을 조성 등의 H/W 위주의 접근이, 때에 따라서는 신규 커뮤니티의 육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등 S/W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한계마을이 진행되어 소멸된 마을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되어 완전히 무거주지가 되었거나 몇 세대가 살고 있더라도 거의 소멸에 가까운 마을로 간주하여, 한계마을정책의 대상으로는 포함하지 않았다. 즉, 소멸마을은 농어촌 지역개발정책에 있어 정주지나 커뮤니티의 정비 및 개발이라는 접근보다는 국토의 토지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표 5-2〉 한계마을정책 대상 및 기본방향

구분	기준	기본방향
존속마을	인구 50명 초과 인구, 경제기반, 공동체의 기능 유지	- 지속가능한 유지·발전 - 거점기능 강화 - H/W적인 접근
준한계마을	인구의 공동화 (인구 50명 이하) 경제기반의 공동화	- 농어촌 지역개발의 주요 타깃 - 한계마을로의 진행 방지 - 인구유치, 정주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 S/W적인 접근
한계마을	인구의 공동화 경제기반의 공동화 신규 커뮤니티의 공동화	- 마을재생 또는 재편 - 신규마을의 조성 - 신규 커뮤니티의 형성
소멸마을	인구, 세대수 없음	- 한계마을정책 대상에서는 제외 - 국토공간의 토지이용계획의 측면에서 접근

2) 존속마을의 정책방향

(1) 특징

존속마을은 한계마을정책의 대상보다는 오히려 농어촌 지역개발정책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일반마을이 한계마을로의 진행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존속마을도 한계마을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존속마을을 인구 50명을 초과하는 마을로, 인구의 공동화, 경제기반의 공동화,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마을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존속마을은 인구, 경제기반, 공동체 활동 등의 기능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잘 유지되고 있어, 현재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고 특별한 외부적인 충격이 없다면 단기적으로는 한계마을로의 진행 가능성이 낮은 마을이라 할 수 있다.

(2) 정책방향

이러한 측면에서 존속마을에 대한 정책은 주로 현재의 인적역량을 바탕으로 경제 및 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유지·발전시킬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공간적으로는 주변지역의 다양한 수요와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적인 관점에서는 존속마을을 둘러싼 다양한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이를 강화시켜 주요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외적인 관점에서는 존속마을을 중심으로 광역단위의 연계개발 및 클러스터 측면에서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러한 개발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 주요 정책(안)

존속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정책으로는 주요 개발축의 핵심지역으로서의 개발, 광역단위의 클러스터 및 연계개발, 지역 내 거점지역으로서의 육성, 주변지역의 다양한 농어촌 서비스 및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기반조성 사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특회계에 의한 사업 중에는 시·도 자율 편성사업에 포함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의 경제기반조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시·군·구 자율 편성사업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소도읍사업, 거점면 종합개발사업) 등 거점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과 읍면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소생활권 단위 개발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표 5-3〉 존속마을의 정책방향

특징	정책방향	주요 정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50명 초과 마을 - 인구, 경제기반, 공동체 활동이 잘 유지되는 마을 - 한계마을로의 진행 가능성이 낮은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유지·발전 - 거점기능 강화 -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 핵심지역으로의 개발 - 소생활권 거점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연계개발 정책 - 농어촌자원 복합사업화 지원(경제기반 활성화)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권역단위 종합정비 - 서비스기반(H/W) 확충

3) 준한계마을의 정책방향

(1) 특징

준한계마을은 농어촌 지역개발정책의 핵심 타깃이 되는 대상으로, 한계마을로 진행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마을이다.

준한계마을은 인구 50명 이하의 마을로, 이미 인구의 공동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커뮤니티의 공동화까지는 진행되지 않았고, 경제기반의 공동화는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경제기반의 공동화가 진행된 마을이다. 즉, 준한계마을은 인구의 감소로 인해 마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나, 경제기반 또는 공동체 활동 등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마을이고, 그러나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면 경제기반과 공동체의 기능까지 위협을 받아 공동화가 진행되고 머지않아 한계마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마을이라 할 수 있다.

(2) 정책방향

준한계마을은 한계화가 진행되지 않은 존속마을과 이미 한계화가 진행된 한계마을 보다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정책적 핵심 대상지역이다. 준한계마을은 향후 한계마을로의 진행 가능성이 높은 마을로, 준한계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마을의 위기의식을 인지하고, 스스로의 동기부여와 역량강화 등의 노력에 의해 마을의 한계화가 진행되지 않고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특히, 인구의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더 이상의 인구유출과 감소를 방지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등의 인구유치 정책과 농어촌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기반의 공동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다시 활성화 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기반의 확충 및 농업소득원 다각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농업 이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농업후계자의 부재로 인한 농지의 황폐화 및 유허농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후계인력의 육성과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잠재자원으로 활용하여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다.

(3) 주요 정책(안)

①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마을공동체의 붕괴, 마을의 소멸 등의 위기의식을 갖는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가 마을이 갖는 다양한 기능 및 잠재자원을 재평가하고, 이러한 기능과 잠재력을 유지·보전하고 마을활성화에 활용하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한다.

특히, 지역문화의 계승 및 마을경관의 보전과 함께 지역 정체성의 형성 및 마을 애향심·애착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을주민과 출향인을 참여시키고 마을기능을 유지·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반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마을주민 스스로가 동기부여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마을의 비전 및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행정은 '지역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참가를 유도하고 주민 스스로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도록 한다.

② 마을 실태 및 현황에 맞는 다양한 농어촌 서비스의 확충

준한계마을은 인구유출 및 감소를 통한 인구공동화가 심각하게 예상되는 마을로 농어촌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인구유출 감소 및 새로운 인구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준한계마을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이나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도록 한다.

특히,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인근 마을과 연계한 서비스의 제공,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민간사업자, NPO 등 다양한 주체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농어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마을기능의 통합이나 공공시설 및 사회적 서비스의 집약화·복합화, 복수의 마을이 연계한 교통서비스의 제공, 민간사업자에 의한 일상품 판매 등 순회 서비스의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4〉 농어촌서비스 기준

부문	항목	내용
주거	주택	최소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
	난방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행정리 비율(%)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기준 충족 행정리 비율(%)
	인도(人道)	인도 설치 도로 비율(%)
교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소규모 학교 중 적정규모 학교 육성 비율(%) ※소규모 학교가 없을 경우 100%로 간주
	방과 후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설치 읍면 비율(%)
보건 의료	순회방문	월 1회 이상 순회방문 마을 비율(%)
	의약품 구입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비율(%)
복지	노인	취약계층 노인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 비율(%)
	아동	방과후 돌봄시설 설치 읍면 비율(%)
	영유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읍면 비율(%)
응급	응급 서비스	30분 내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
	소방 서비스	5분 내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
	도난 방지	CCTV설치 행정리 비율(%)
문화	독서	도서 대출·열람 가능 읍면 비율(%)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월 공연 횟수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수혜 행정리 비율(%)
정보 통신	초고속망	초고속망 가입자 수/총 가구 수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수/총 가구 수

자료 : 김광선 외,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15

③ 귀농·귀촌인구 유치 및 농업후계자 육성

준한계마을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 및 인구공동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제기반의 공동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농업후계자를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운영,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 귀농·귀촌 정책의 제도적 기반 정비, 농업인력은행 및 신규취농지원센터의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④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집중 추진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포괄보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중심기능강화사업(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제외한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경관개선사업, 공동소득사업, 공동문화조성사업, 기타 아이디어사업), 시·군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활용하여 준한계마을을 집중 육성하도록 한다.

물론, 이러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아직 한계화가 진행되지 않는 일정한 경쟁력을 갖춘 존속마을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지만, 존속마을은 준한계마을에 비해 자체역량에 의해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무엇보다 준한계마을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한계화의 진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한다.

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마을 한계화 억제전략 추진

한계화가 진행되는 마을이 포함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그룹과 세대, 지역 내·외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동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한계마을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문제점하고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한다.

특히, 행정을 중심으로 한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항상 예의주시하여 마을주민에게 마을재생의 가능성을 항상 주의시키고, '직접지불제도'나 농촌개발사업 등 마을의 한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토지자원의 현황을 알고 있는 세대가 사망하기 전에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소유권과 관리여부가 불명확한 토지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집적화시키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⑥ 직접지불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확충

농식품부는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¹¹⁾,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¹²⁾가 있다.

이러한 직접지불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장려하여 준한계마을의 공간적·경제적(농업활동)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도록 한다. 특히, 특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있어 그 대상작물을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연, 자운영 중 지역실정에 맞는 작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상작물의 확대뿐만 아니라 농촌경관을 유지하는 건 축물, 농업유산 등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한다. 이 중 농업유산에 관한 농업유산제도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준한계마을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마을 활성화 도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 준한계마을의 정책방향

특징	정책방향	주요 정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50명 이하 마을 - 인구의 공동화가 진행 - 커뮤니티는 유지되는 마을 - 경제기반의 공동화가 진행되었거나 진행가능성이 높은 마을 - 한계마을로의 진행 가능성이 높은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적 핵심 대상마을 - 위기의식 인지를 통한 주민 주도의 노력 - 인구유치 및 인력육성 - 정주여건 개선 및 농어촌 서비스 확충 - 경제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및 지역사회 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 - 농어촌 서비스(S/W) 확충 - 귀농귀촌 인구유치 - 농업후계자 육성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집중 추진 - 마을 한계화 억제전략 - 직접지불제도의 활용 및 확충

11)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 보조하는 제도로써 경지율 22% 이하이면서 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된 법정리 내의 밭 및 초지에 대하여 밭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을 지원함

12)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농촌의 경관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마을별로 작물식재 및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농가별로 10a당 17만원(국고 70%, 지방비 30%)의 보조금을 지급. 지급액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함.

※ 참고 : 한국농어업유산제도

o 농어업유산

- 농어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어업 시스템과 현상

o 국가중요농어업유산

- 농어업유산 가운데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 유산을 말함.

o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대상

- 농어촌자원 중 100년 이상의 전통서를 가진 농어업유산으로서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 보전·유지·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특별한 생물다양성 지역

o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기준

- 유산의 가치성 : 역사성, 대표성, 특징(전통시스템, 생물다양성 등)
- 파트너십 : 협력도, 주민참여도
- 효과성 : 브랜드, 지역활성화

구분	항목(배점)	내용
유산의 가치성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년 이상 전부터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것 • 미래에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분야별로 대표성이 있을 것 -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대표성 • 경관(어메니티)이 수려하여 관광·휴양 상품성이 있을 것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및 수자원 관리 등 아래의 분야(해당되는 1~2항목)에 독특하고 현저한 특징이 있을 것 - 공동체의 농어업 지식체계와 기술 - 농어업 활동을 통한 식량 등 산출물 - 토지·수자원이용 형태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등
파트너십	협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추진의지와 사업비분담 등의 유지 관리계획이 있을 것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 유지, 전승을 위한 지역사회주민(NGO 포함)의 자발적 활동 및 참여가 있을 것
효과성	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지역이미지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활성화 또는 생물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도농교류활동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전통적인 농법의 결과로 생물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거나, 특징적인 작물이 서식할 것

4) 한계마을의 정책방향

(1) 특징

한계마을은 한계마을정책의 중심이 되는 대상으로, 한계화가 진행되어 머지않아 소멸이 예상되는 마을이다. 한계마을은 인구 50명 이하의 마을로, 인구의 공동화와 함께 경제기반의 공동화 커뮤니티의 공동화가 이미 진행된 마을이다.

즉, 인구감소로 인해 마을의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상태이며, 농업활동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능이 실제적으로 거의 마비되어 있고 주민의 커뮤니티 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의 마을이다. 이러한 한계마을은 마을의 자원과 역량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하며, 한계화의 상태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면 마을의 소멸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2) 정책방향

한계마을은 일반 농어촌 지역개발정책과는 차별화 되는 정책투입이 요구된다. 물론, 존속마을이나 준한계마을에 비해 농어촌 지역개발정책 등을 통한 투자에 비해 큰 성과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¹³⁾,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마을재생을 도모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마을의 재편에 주안점을 두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노력에도 소멸이 불가피할 경우 바람직한 소멸의 방법을 조심스럽게 고려하도록 한다.

즉, 고령화·과소화 등의 실정에 맞는 마을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주민의 의사와 발전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마을재생을 도모하도록 한다. 또는, 마을의 범위를 초월한 복수의 마을을 범위로 하는 지역 내의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과 활동을 장려하고, 기존의 마을을 존중하면서 보완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혹은 새로운 마을로의 재편을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포괄보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신규마을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고, 그 외에 민간영역이 참여하는 신규마을조성사업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계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추진방향에 전 국민적인 합의와 해당마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의 마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13) 한 마을의 장년(30~64세) 인구가 한번 4명 이하로 떨어지면 그 뒤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도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실증 연구결과(小田切徳美)가 있음.

기본원칙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3) 주요 정책(안)

① 한계마을 조례제정 및 마을재생 도모

실제 한계마을 중에서도 공동화 형태, 잠재자원 및 잠재력, 마을의 특징 등을 갖는 다양한 마을의 유형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만약 한계마을 중 회생이 가능한 마을이 있고 관련주체의 합의형성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인 마을재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을재생의 기본적인 관점은 ‘마을의 소멸은 곧 사회적 손실을 의미하며 한계마을 소멸의 최종적 피해자는 마을주민임과 동시에 전 국가적인 피해’이며, 극도의 한계화가 진행되더라도 마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입대비 결과의 효용성, 실패의 리스크 등의 경제성이나 비용·편익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 한명이라도 마을에서 살고 있는 한 사회적 비용 및 정책적 투입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한계마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준한계마을에 준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 가. 도농교류 촉진 : 축제 개최, 농가민박 및 체험마을 육성, 관광농원 등
- 나. 정주대책 추진 : 주택의 정비 또는 민영주택 건립 유도, 공가의 등록 및 활용 등
- 다. 지역산업의 육성 : 특산물개발, 농산가공품 직판지원, 신규취농 및 귀농지원 등
- 라. 생활 및 정보기반 정비 : 대중교통수단 확보, 고속인터넷기반정비 등
- 마. 기타 : NGO 및 자원봉사자 확충, 한계마을연락협의회 운영 등

② 마을의 재편전략 추진

마을의 재편은 한계마을을 새로운 시각에서 공간적이나 기능적으로 다시 구조적 조정을 하는 관점으로, 여러 마을을 중심으로 서로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마을재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의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인근 마을과의 통합·합병이나 지역적인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초등학교 단위의 새로운 광역적 조직의 설립, 중심마을 주변지역으로의 마을이전, 복수의 마을이 마을의 기능을 유지

하기 위한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행정적 재편’, ‘기능적 재편’, ‘공간적 재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행정적 재편은 인근 마을과의 통합·합병을 추진하거나, 중심마을이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마을로 한계마을을 흡수시키고, 행정구역의 변경 등을 통하여 행정적 측면에서 재편성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둘째, 기능적 재편은 중심마을의 기능 강화하여 거점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거나, 초등학교 등 지역생활권을 단위로 하는 복수의 마을을 묶어 각각의 마을에 차별화된 기능을 분담하도록 하고 상호 협력과 상호 보완의 관계 속에서 기능적 측면에서의 재편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셋째, 공간적 재편은 행정적 재편과 기능적 재편이 불가능할 경우, 마을의 공간적 이전 및 외부인구의 유입을 통한 신규마을 조성 등의 재편성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③ 신규 커뮤니티의 조성

신규 커뮤니티의 조성은 마을의 공간적 재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한계마을의 토지와 자원을 기초로 하여 외지인(출향인, 후세대, 귀농·귀촌인 등)을 유입시켜 새로운 형태의 마을이나 새로운 기능의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방법과, 남아있는 마을주민을 새로운 정주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방법이 있다.

우선 전자의 방법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마을조성사업(전원마을조성사업)이나 최근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농어촌 뉴타운조성 사업 등이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신규마을조성사업은 새로운 토지를 마련하기 위해 자연생태자원을 훼손하거나 기반조성에 많은 투자비용을 소모하게 되지만, 한계마을을 활용할 경우 기존 마을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이어받아 마을 정체성의 계승과 자연스러운 정주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다.

후자의 방법은 산발적으로 분산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마을과 이격된 부지나 마을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집적화된 주거지를 조성하고 집단적으로 이주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에너지나 기타 비용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고, 고령화된 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와 의료혜택이 가능하게 된다. 단, 이주에 있어서는 일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한 마을에서 거주해 왔던 주민의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이 때문에 사전에 주민의 의견수렴과 합의하는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④ 마을의 소멸전략 추진

마을의 소멸은 이미 한계에 달한 마을을 과감하게 소멸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농어촌 지역개발과 관련된 어떠한 정책적 투입도 모든 농어촌마을이 한계마을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자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소멸을 맞이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한계마을이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마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마을이 존속하고 있는 한 주민의 합의에 의해 마을 내 분포하고 있는 농지와 주택을 관리하고, 마을이 지니고 있는 지식과 재산, 전통문화 등의 자원을 보전·계승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둘째, 한계마을이 소멸의 가능성을 보일 때, 남아있는 주민 스스로 경작할 수 있거나 관리할 수 있는 토지와 그렇지 못하는 토지를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셋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아있는 주민의 삶의 질이 마지막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또는, 이주 시키는 방법도 있음).

넷째, 마을이 완전히 소멸되더라도 출향인이나 후세대에 의해 마을이 재생될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5-6〉 한계마을의 정책방향

특징	정책방향	주요 정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50명 이하 마을 - 인구의 공동화가 진행 - 경제기반의 공동화가 진행 - 커뮤니티의 공동화가 진행 - 마을의 자원과 역량으로 회생 가능성 낮음 - 머지않아 소멸의 가능성이 높은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마을정책의 중심대상 - 투자대비 큰 성과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가능한 범위내에서 마을 재생과 재편을 도모 - 새로운 커뮤니티 조성 - 불가피할 경우 소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제정 및 마을재생 - 마을 재편전략(행정적·기능적·공간적 재편) - 신규 커뮤니티 조성(새로운 인구유치, 이주) - 마을 소멸전략

제6장 결 론

1. 요약 및 결과

본 연구는 농촌마을의 과소화·고령화 등의 실태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칭)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기존의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계마을’의 개념을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인하여 생활적 기능, 생산적 기능 등의 마을의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이라 정의하고, ‘한계마을 정책’은 ‘한계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방침과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한계마을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충청남도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제 한계마을 관련 조사·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충청남도 금산군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라는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우선, 금산군의 전체 마을(행정리) 이장을 대상으로 공동화 실태와 기타 정책투입 현황과 주민의식 실태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구 및 고령인구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고 한계마을을 구분하는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별 마을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금산군 전체의 공간자료를 구축하여 한계마을 관련 공간분석을 실시하여, 한계마을(인구와 고령화)에 미치는 공간적 요인과 패턴을 찾아내고 유형별 마을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실제 금산군의 일부 마을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및 공간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의 검증과 함께 한계마을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한계마을의 특징 및 정책과제, 그리고 한계마을정책의 방향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분석의 결과, 각각의 마을에 따라 한계마을로 진행되는 원인과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이러한 모든 한계마을을 정량화되고 표준화된 기준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기존의 ‘인구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의 한계마을의 지표 대신 ‘인구의 공동화’, ‘경제기반의 공동화’,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의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제안하

였다.

결과로 도출된 한계마을의 특징 및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농 위주의 농업활동과 미약한 농외소득구조를 갖고 있고, 둘째,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어렵다. 즉, 토지공동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의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한계마을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한계마을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개별 공장 및 개발행위가 거의 없는데, 이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마을이거나 개발행위가 거의 없어 인구유입이 어려운 입지적 특징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넷째, 마을별로 분석 시 한계마을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다섯째, 역량을 갖춘 리더가 부재하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았고, 한계마을은 인구유입의 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마을과 구별되는 한계마을 정책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농촌마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인구유치 및 접근성 개선은 한계마을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넷째, 한계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은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기초생활환경 개선이다. 다섯째, 공공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여섯째, 한계마을의 소멸과 유지에 관한 지속적인 전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가칭)한계마을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계마을’은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인하여 마을의 다양한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로, 인구의 공동화, 경제기반의 공동화,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가 발생하는 마을”이며, “한계마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방침과 수단”을 ‘한계마을정책’이라 재정의 하였다. 그리고 한계마을의 판단기준으로 1차(정량적 기준) 인구의 공동화(인구 50명 기준) 여부, 2차(정성적 기준) 경제기반의 공동화 및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 여부를 제시하였다.

한계마을정책의 기본원칙(전제조건)으로는, 첫째, 한계마을의 판단은 몇 가지 지표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둘째, 한계마을의 판단하는 완벽한 지표를 개발하더라도 항상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셋째, 기본적으로, 한계마을 문제의 접근은 국토균형발전, 사회적 평등, 정책투입의 효율성 등 다양한 가치판단의 문제에서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전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넷째, 한계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1차 주체는 해당마을 주민이고, 한계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마을만 국한시켜 고려해서는 안 되고, 다섯째, 마을은 공

간이 아니라 사회이고, 한계마을정책의 궁극적 관심은 사람(공동체)에 있고, 여섯째, 한계마을 정책은 일반마을정책과는 차별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계마을정책의 추진방향으로 먼저, 존속마을은 '지속가능한 유지·발전 및 거점기능강화'를 기본방향으로 기존의 잠재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 H/W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고, 준한계마을은 농어촌 지역개발의 주요 타깃으로 '한계마을로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치, 정주여건개선, 공동체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한계마을로 진행되지 않기 위한 조직이나 활동, 프로그램의 마련 등 주로 S/W 위주의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계마을은 '마을재생 및 재편'을 기본방향으로 때에 따라서는 마을재생, 신규마을 조성 등의 H/W 위주의 접근이, 때에 따라서는 신규 커뮤니티의 육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등 S/W 위주의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표 6-1〉 한계마을정책 방향

	특징	정책방향	주요 정책(안)
존속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50명 초과 마을 - 인구, 경제기반, 공동체 활동이 유지되는 마을 - 한계마을로의 진행 가능성이 낮은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유지·발전 - 거점기능 강화 -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 핵심지역으로의 개발 - 소생활권 거점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연계개발 정책 - 농어촌자원 복합사업화 지원(경제기반 활성화)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권역단위 종합정비 - 서비스기반(H/W) 확충
준한계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50명 이하 마을 - 인구의 공동화가 진행 - 커뮤니티는 유지되는 마을 - 경제기반의 공동화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가능성이 높은 마을 - 한계마을로의 진행 가능성이 높은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적 핵심 대상마을 - 위기의식 인지를 통한 주민 주도의 노력 필요 - 인구유치 및 인력육성 - 정주여건 개선 및 농어촌서비스 확충 - 경제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및 지역사회 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 - 농어촌 서비스(S/W) 확충 - 귀농·귀촌 인구유치 - 농업후계자 육성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집중 추진 - 마을 한계화 억제전략 - 직접지불제도의 활용 및 확충
한계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50명 이하 마을 - 인구의 공동화가 진행 - 경제기반의 공동화가 진행 - 커뮤니티의 공동화가 진행 - 마을의 자원과 역량으로 희생 가능성 낮음 - 머지않아 소멸의 가능성이 높은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마을정책의 중심 대상 - 투자대비 큰 성과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가능한 범위내에서 마을재생과 재편을 도모 - 새로운 커뮤니티 조성 - 불가피할 경우 소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제정 및 마을재생 - 마을 재편전략(행정적·기능적·공간적 재편) - 신규 커뮤니티 조성(새로운 인구유치, 이주) - 마을 소멸전략

2.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농촌마을의 실태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칭)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고, 향후 한계마을정책이 도입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마을과 마을의 소멸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정책방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본문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마을소멸의 위기의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계마을 전략을 ‘재생’, ‘재편’, ‘소멸’의 3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한계마을을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소멸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마을 주민은 어떻게든 마을이 소멸되어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국토의 균형발전, 사회적 손실의 방지 등을 들고 있다. 반면, 한계마을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로는 어차피 소멸될 마을이라면 한계마을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마을을 육성하여 국가적 낭비를 줄이자는데 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답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어촌마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마을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계마을화 되어가는 과정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량적이고 시계열적인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상당수의 농촌마을이 한계마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마을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한 마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맞춤형 정책이 투입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은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이다. 또한, 기존의 농어촌 지역개발정책 내에서 일반마을과 구별되는 한계마을의 대응전략을 별도로 구축하고 개발하여, 커다란 지역사회 속에서 한계마을의 위상과 위치정립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한계마을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다양한 조사·분석의 목적 중 하나는 한계마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한계마을을 구분하는 정량적이고 표준화된 지표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이를 찾는 것이었으나, 결론적으로 이러한 지표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였다. 단지, 일본에서 제시한 한계마을의 기준인 ‘연령 65세 이상 인구 50% 이상’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대신 절대인구 50명이라는 기준이 의미가 있음을 밝혀냈다. 즉, ‘인구의 공동화’로 제시한 것처럼, 50명 이하의 마을에서 대부분의 한계마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물론 특수한 예외 경우는 존재함). 그러나 이 외의 정성적 기준으로 제시한 ‘경제기반의 공동화’와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에 대해서는 가능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는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계마을의 ‘재생’, ‘재편’, ‘소멸’에 대한 상세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마을의 주요전략으로 ‘재생’, ‘재편’, ‘소멸’의 전략을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략적으로만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3가지의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계마을의 재생전략은 일반마을 개발전략과 어떠한 차별화를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편전략으로 ‘행정적 재편’, ‘기능적 재편’, ‘공간적 재편’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의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장·단점은 무엇이고 마을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방법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한 내용인 소멸전략에 있어 현재로는 국민 정서상 공개적인 거론을 회피하고 있지만, 마을소멸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고, 또한 실제거주 주민과 주변 지역사회의 무리가 없이 소멸전략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등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송미령 등, 2009, 기초생활권 유형별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등, 2010, 국가농어촌정책의 추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달기, 2004, 일본 농촌사회의 전통적 사회시스템의 붕괴와 재편 - 촌락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4집 2호, pp.207~246
- 조준범, 2009,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과소화 특성에 관한 연구 - 전남 장흥군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3호, 2009.9/21(3), pp.163~182
- 이병기, 2010, 농촌 과소화 실태와 전망, 농촌지도와 개발 제17권 4호, pp.773~797
- 한경원, 2012, 낙후지역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 유럽연합의 정책동향과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2년 하계학술발표논문집
- 성주인·박시현, 2012, 농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과 재정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2012.6.12), pp.3~48
- 大野晃, 2008.11, 『限界集落と地域再生』, 京都新聞出版センター
- 大野晃, 『山村環境社會學序論- 現代山村の限界集落と流域共同管理』, 農山漁村文化協會, 2005.03
- 小田切徳美, 『農山村再生-農山村再生「限界集落問題」を越えて』, 岩波書店, 2009.10
- 大西隆・小田切徳美・中村良平・安島博幸・藤山浩, 『これで納得集落再生-「限界集落」のゆくえ』, 2011.01, 株式會社ぎょうせい
- 林直樹・齋藤普 (編著), 『撤退の農村計畫-過疎地域から始まる戰略的再編』, 學芸出版者, 2010.08
- 一の瀬友博, 『撤退の農村計畫と農村イノベーション』, イマジン出版, 2010.03
- 守田秀則, 『條件不利地域における集落再編の課題と對策』, 農村計畫學會韓日シンポジウム, 2008.11
- 大野晃, 『限界集落-その實體が問いかけるもの』, 農業と經濟第71巻3号, pp.5-15, 2005.03
- 高野和良, 『「限界集落」過疎地域の生活圏と國土資源の持続性-極小化する家族お農山村高齢化の現状』, 農業と經濟第71巻3号, pp.14-24, 2005.03
- 農村開發企畫委員會, 2007, 限界集落における集落機能の實態等に関する調査報告書

부록 1. 농촌지역 한계마을 실태 및 주민의식 조사표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일련번호

농촌지역 한계마을 실태 및 주민의식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설문조사는 금산군의 모든 농촌마을의 실태를 조사하고, 마을 쇠퇴나 소멸에 대한 주민의식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하여 **2013년 4월 0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내용은 통계자료 이외의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2013년 4월

충남발전연구원장

※ 회답·문의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 충남발전연구원 조영재
Tel/Fax : 041-840-1202/1219, E-mail : choyj@cdi.re.kr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만 세
거 주 지	금산군 읍/면 리	거주 기간	년
직업	① 농업 ② 상업 ③ 서비스업 ④ 공무원 ⑤ 없음 ⑥ 기타 :		
역할	① 추진위원(장) ② 이장 ③ 청년회장 ④ 부녀회장 ⑤ 새마을지도자 ⑥ 영농후계자 ⑦ 일반주민 ⑧ 기타 :		
자연마을 구성	※ 자연마을 모두 표기		

□ 「사람」의 공동화 실태

1.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행정리)의 현재 인구, 가구수, 65세 이상 인구수는?

▷ 인구 : _____ 명

▷ 가구수 : _____ 호

▷ 65세 이상 인구 : _____ 명

2.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행정리)의 최근 5년간 전입(귀농·귀촌 등)인구 수는?

① 10명 미만 ② 10명 ~ 50명 미만 ③ 50명 ~ 100명 미만 ④ 100명 이상

3.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행정리)의 연평균 방문객 수는?

① 50명 미만 ② 50명 ~ 100명 미만 ③ 100명 ~ 1,000명 미만 ④ 1,000명 이상

3-1 방문객의 마을방문 목적은 주로 무엇입니까?

- ① 가족·친지, 출향인의 방문
 ② 주변 지역(관광지 등) 방문을 목적으로 한 단순방문
 ③ 마을의 도농교류, 체험관광, 일반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방문
 ④ 기타 : _____

4.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행정리)의 인구규모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① 급속히 감소 ② 서서히 감소 ③ 현재규모 유지 ④ 서서히 증가 ⑤ 급속히 증가

4-1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낙후된 기초생활 기반(주택, 공공·편의시설 등) ② 소득 및 일자리의 감소
 ③ 열악한 복지·의료·교육 서비스 ④ 외지인의 마을 토지 소유
 ⑤ 인근 거점지역(거점생활권)으로부터의 접근성 불량
 ⑥ 기타 : _____

5.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장래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향후 5년 이내에 소멸될 가능성 있음
 ② 향후 10년 이내에 소멸될 가능성 있음
 ③ 향후 10년 이후에 소멸될 가능성 있음
 ④ 소멸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
 ⑤ 잘 모르겠음

□ 토지의 공동화 실태

6.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의 주된 소득원은 무엇입니까? (1~3순위 표시)

- ① 논농사 () ② 밭농사 () ③ 과수·원예작물 재배 ()
 ④ 인삼·약초재배 () ⑤ 축산 ()
 ⑥ 기타 직업 활동을 통한 농외소득 ()
 ⑦ 자녀송금, 저축·연금 등 비직업 농외소득 ()
 ⑧ 기타 : _____

6-1 가구당 연평균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천만원 이하 ②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
 ③ 2천만원 ~ 3천만원 미만 ④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⑤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⑥ 5천만원 이상

7.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행정리)의 전체 농경지 중 휴경지(경작 포기지)의 비율은?

- ① 80% 이상 ② 60% - 80% 미만 ③ 40% - 60% 미만
 ④ 20% - 40% 미만 ⑤ 20% 미만

7-1 과거에 비해 휴경지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 ① 급속히 증가 ② 서서히 증가 ③ 현재수준 유지
 ④ 서서히 감소 ⑤ 급속히 감소

7-2 휴경지가 증가하고 있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
 ② 농업소득의 감소
 ③ 외지인의 토지소유(또는 개발)로 인한 경작 가능한 토지의 부족
 ④ 자연재해 및 환경변화, 접근성 불량 등에 의한 토지경작 조건 악화
 ⑤ 기타 : _____

8.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행정리)의 가구 중 빈집(공가)은 몇 호입니까?

▷ 빈집(공가) 수 : _____ 호

9.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향후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보다 매우 쇠퇴하고 침체될 것임 ② 현재보다 약간 쇠퇴하고 침체될 것임
 ③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임 ④ 현재보다 약간 더 발전할 것임
 ⑤ 현재보다 매우 발전하여 번성할 것임

□ 공동체의 공동화 실태

10.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행정리)의 공동체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노인회 ② 부녀회 ③ 청년회 ④ 추진위원회 ⑤ 연구회
⑥ 기타 : _____

10-1 마을주민 공동 또는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농작업의 협력(공동경작 등) ② 농기계의 공동사용
③ 마을토지 및 시설의 공동관리 ④ 마을안길 가꾸기 및 정비
⑤ 개인주택의 공동정비 ⑥ 마을잔치 및 공동행사
⑦ 기타 : _____

10-2 현재 마을주민의 힘만으로 마을 공동시설·부지의 관리 및 공동체의 유지가 가능합니까?

- ① 절대적으로 불가능 ② 불가능 ③ 보통 ④ 약간 가능 ⑤ 절대적으로 가능

12.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행정리)의 경제공동체(작목반, 법인 등)를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12-1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농교류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1사1촌 자매결연 ② 농촌관광·체험학습 ③ 주말농장
④ 농가민박 등 숙박 ⑤ 농산물직거래(전자상거래 등)
⑥ 기타 : _____

13. 귀하의 마을(행정리) 공동체 및 경제공동체의 활동은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침체 ② 약간 침체 ③ 변화 없음 ④ 약간 활성화 ⑤ 매우 활성화

□ 정책투입 실태 및 주민의식

14. 최근 5년간 귀하의 마을에 투입된 공공지원 사업이 있다면 해당사항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 ▷ 사업명 : _____ / 사업기간 : _____ / 사업비 : _____
▷ 사업명 : _____ / 사업기간 : _____ / 사업비 : _____
▷ 사업명 : _____ / 사업기간 : _____ / 사업비 : _____
▷ 사업명 : _____ / 사업기간 : _____ / 사업비 : _____

14-1 이러한 사업투자가 마을의 유지·발전,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 ① 전혀 없었음 ② 없었음 ③ 보통 ④ 약간 있었음 ⑤ 매우 크게 있었음

15. 귀하는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마을의 소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어차피 소멸될 거라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어차피 소멸될 마을이라면 신규마을의 조성 등 다른 방향으로 개발시켜야 한다.
 ③ 소멸되기 전까지는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④ 소멸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과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⑤ 잘 모르겠음

15-1 소멸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소멸되도록 두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어차피 소멸될 마을에 금액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다.
 ② 소멸 가능성이 높은 마을은 아무리 투자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③ 마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마을유지가 불가능 하다면, 외부의 노력에 의해 마을을 유지하더라도 마을이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다.
 ④ 이젠 농촌마을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소멸될 마을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마을을 선택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⑤ 기타 : _____

15-2 마을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농촌마을은 국토의 중요공간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②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농촌마을도 투자하여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③ 마을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공동체단위로 마을의 소멸은 곧 사회적 손실이다.
 ④ 마을 소멸의 최종 피해자는 마을주민이고, 이러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⑤ 기타 : _____

16. 귀하는 귀하의 마을이 소멸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령화 등으로 마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긴다.
 ② 마을 소멸을 막으려면 반드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③ 마을 스스로가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개인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마을 소멸을 막아야 한다.
 ⑤ 기타 : _____

17. 귀하가 보시기에 마을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항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1-5까지 숫자로 표기해 주세요.

순위	항목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현금으로 주는 직불금 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
	기초연금, 건강보험/산재보험 보장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
	농촌의 사회서비스(사회복지, 교육, 보건의료, 문화, 교통)가 더 늘어나면 좋겠다
	농촌의 기반시설(도로, 주택, 상하수도, 정보통신)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
	소밀거리(밀도 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밀)가 더 늘어나면 좋겠다

18. 귀하의 마을에서는 다음의 여러가지 농촌사회서비스 중 어떤 항목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1~8까지 숫자로 표기해 주세요.

순위	항목
	보육/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여가
	교통편의
	치안/안전
	정보통신
	주거환경

19. 마지막으로 농촌마을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수고 하셨습니다 ♣

부록 2. 한계마을 주민대표 조사표

한계마을 주민대표 조사표

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충남도내 한계마을의 실태와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파악하고 향후 마을발전을 위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는 **충남도 및 중앙정부의 정책제안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성실히 임해주신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

2013. 5

♣ 문의: 충남발전연구 농촌농업연구부 박경철 책임연구원

충남 공주시 금흥동101 Tel: 041-840-1206, E-mail: kcpark@cdi.re.kr

※ 한계마을이란?: 고령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떨어져 사회·경제적으로 쇠퇴되고 있는 마을

조사마을	피조사자 성명	직책	연락처

I 마을인구 및 정주환경 변화 실태

1. 마을 내 인구와 가구현황은 어떻습니까?

▶ 총 인구() / 초중고 학생수() / 청년수()

65세 이상 인구() / 독거노인수() / 중증환자수()

▶ 총 가구수() / 독거 가구수 () / 빈집 수()

2. 최근 5년간 마을의 인구 변화는 어떻습니까? 증가_____ 감소_____ 정체_____

2.1.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 이유:

2.2. (증가하는 경우) 귀향 혹은 외지인의 전입에 대해 주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그 이유:

2.3. 최근 5년간 마을 내 전출 혹은 전입의 구체적 사례:

사례	연령대	년도	사유	전출지/전입이전지
전출	① ②			
전입	① ②			

2.4. 외지인이 들어와 좋은 사례 혹은 안 좋은 사례가 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 그 구체적 사례:

3. 마을주민들은 대체로 앞으로 마을 내 인구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5년 전후에는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 ② 10년 전후에는 남지 않을 것이다.

③ 앞으로도 비슷할 것이다. ④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3.1. (마을이 소멸 혹은 인구증가가 된다는 의견인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

십니까?

▶ 구체적 설명:

3.2. 마을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장래에 마을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 ② 마을이 소멸되지 않도록 마을주민들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
- ③ 마을이 소멸되지 않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해야 한다.
- ④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할 바가 아니다.
- ⑤ 가족이나 친지들이 내려와 살도록 적극 권유하겠다.
- ⑥ 기타 _____

4. 마을주민들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 ① 좋은 편이다() ② 안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4.1.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대체적으로 어디가 아프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체적 설명:

4.2. 마을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 설명:

4.3. 최근 5년간 고독사나 사고발생 시 응급서비스 부재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사례	사고의 예	결과
1		
2		
3		

4.4. 노인들에 대한 치료나 부양에 대해 마을 자체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 설명:

5. 읍내 출행(시장보기, 행사, 외지방문 등) 시 마을주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 ② 승합차 ③ 버스 ④ 트럭 ⑤ 자전거 및 오토바이 ⑥ 기타(택시 등)

5.1. 마을주민들은 마을의 교통과 도로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열악한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괜찮은 편이다.

5.2. (교통 및 도로여건이 열악한 경우) 어떤 부분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① 마을 내 진입도로를 확장해야 한다. ② 읍내로 오가는 버스를 늘려야 한다.
 ③ 노인전용 이동버스가 필요하다. ④ 유치원·학교버스를 늘려야 한다.
 ⑤ 자가 승용차·트럭이 필요하다. ⑥ 자전거·오토바이(4륜구동 포함)가 필요하다.

▶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이유:

5.3. 마을 내 상하수도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열악한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괜찮은 편이다.

5.4. 마을 내 상점 있는지요? 있다면 몇 개나 있습니까?

없음() 있음(): 개)

5.5. 마을 내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구가 있는지요? 있다면 몇 가구나 됩니까?

없음() 있음(): 가구)

Ⅱ 토지이용 및 환경변화 실태

1. 마을주민의 주 소득원은 무엇입니까?

① 농업 ② 임업 ③ 기타()

1.1. 마을 내 농업소득 이외 겸업소득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겸업소득 비율: 겸업 업종:

1.2. (농업인 경우) 현재 마을 내 전답의 경작비율은 어떻습니까?

논 면적: 밭 면적: 하우스면적:

1.3. 주요 경작 품목과 면적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면적은 비율도 가능)

	품목	면적 또는 비율
1		
2		
3		

1.4. (마을에 유휴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은 얼마이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휴농지 면적(마지기 혹은 비율):

▶ 농지를 놀리는 이유:

2. 최근 5년간 마을 내 농지의 거래는 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 ① 마을 내 임대와 임차 ② 외지인과의 임대 및 임차
- ③ 마을 내 매입 및 매도 ④ 외지인과의 매입

2.1. (외지인이 매입하는 경우) 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매입을 합니까?

▶ 토지 매입자 및 매입 목적:

2.2. (외지인이 마을의 농지, 택지, 산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 ①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② 외지인에게 농토를 파는 것은 가급적 막아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2.3. (외지인에게 농토(택지, 산지 포함)를 파는 것을 가급적 막아야 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민의 구체적 반응:

3. 마을사람들은 향후 대체로 자신의 경작지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① 힘닿는 데까지 농사를 짓는다. ② 장차 자식들에게 넘긴다.
- ③ 농지은행이나 임대를 준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임대 혹은 매도한다.
- ⑤ 요양원 등에 맡긴다. ⑥ 기타

3.1. 위의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 구체적 이유:

3.2. 마을사람들은 향후 자식들에게 농사를 물려줄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아주 많다. ② 조금 있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없다. ⑤ 전혀 없다.

4. 지난 5년 전에 비해 마을 내 물환경(하천, 개천, 물고랑, 상수도 등)은 어떻습니까?

- ① 아주 좋아졌다. ② 조금 좋아졌다. ③ 잘 모르겠다. ④ 나빠졌다. ⑤ 아주 나빠졌다.

4.1. (좋아졌거나 나빠진 경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그 구체적 이유:

5. 마을 내 토지, 산림, 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곳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1.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 구체적 이유:

Ⅲ 공동체 활동과 변화 실태

1. 현재 마을에는 어떤 주민조직들이 있습니까?

- ① 계 ② 노인회 ③ 부녀회 ④ 새마을회
⑤ 청년회 ⑥ 작목반 ⑦ 전통민속 ⑧ 기타(_____)

1.1. 마을주민들은 어떤 모임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구체적 이유:

1.2. (마을주민 전체가 모이는 경우) 주로 언제, 어떤 일로 모입니까?

▶ 구체적 내용:

1.3. 마을주민들이 함께 외부 활동(체육행사, 노래자랑, 관광 등)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있다면 언제, 어떤 활동(행사)입니까?

▶ 구체적 내용:

2. 현재 마을 내 공동체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① 마을회관 ② 경로당 ③사당 혹은 전통민속 관련 시설
④ 마을정자 ⑤ 건강의료 관련 시설 ⑥ 기타(_____)

2.1.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에 자주 모이십니까?

- ① 자주 모인다. ② 가끔 모인다. ③ 마을 일이 있을 때만 모인다.
④ 거의 모이지 않는다. ⑤ 기타

2.2. (자주 혹은 가끔 모이는 경우) 마을회관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 ① 마을사람들과 어울려서 얘기한다. ② 함께 식사를 한다.
③ 공동작업을 한다. ④ 마을잔치를 연다. ⑤ 체조, 요가 등 체육활동을 한다.
⑥ 기타_____

▶ 구체적 활동 내용:

2.3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내에서 주민 간 특별한 활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있다(____) ② 없다(____)

▶ 구체적 내용:

2.4. 마을회관에 군이나 면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구체적 지원내용:

▶ 그 중 선호하는 지원과 이유:

3. 마을사람들은 대체로 이 마을에 사는 것에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② 만족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③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④ 그저 그렇다. ⑤ 잘 모르겠다.

3.1. (만족 혹은 불만족인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구체적 이유:

4. 마을주민들은 계속 이 마을에 정주하기를 희망하니까?
① 계속 희망하는 편이다. ② 희망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거주한다.
③ 기회만 닿는다면 자식이 있는 도시로 나가려고 한다.
④ 그저 그렇다.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_____)

4.1. (계속 정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체적 이유:

4.2. 지난 10년 전에 비해 마을주민들 간 사이는 어떻습니까?

① 더 좋아졌다. ② 더 나빠졌다. ③ 변함이 없다. ④ 잘 모르겠다.

4.3. (마을주민 간 사이가 좋아지거나 나빠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구체적 이유:

Ⅳ 마을주민의 인식과 정책적 태도

1. 마을주민들은 이곳 마을이 주변의 다른 마을에 비해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발전하고 있다. ② 정체되고 있다. ③ 쇠퇴하고 있다.

1.1. (마을이 쇠퇴하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① 마을이 너무 외진 곳에 있기 때문 ② 도로 및 교통여건이 불리해서
③ 교육 여건이 불리해서 ④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해서 ⑤ 경제적 소득원이 없어서
⑥ 주거환경이 낙후돼서 ⑦ 정부의 정책지원이 없어서 ⑧ 자연재해가 많아서 ⑨ 기타

▶ 그 구체적인 이유:

1.2. 이곳 마을이 한계마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마을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비슷비슷하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1.3.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그 구체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구체적인 이유:

2. 한계마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마을에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2.1 (지원과 혜택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었습니까?

▶ 구체적인 지원과 혜택 내용:

①

②

2.2. 이곳 마을이 한계마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더 많은 관심과 정책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2.3. (정책을 투입이 필요하다는 경우) 어떤 부분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순위(_____) ② 순위(_____) ③ 순위(_____)

예) ① 노령복지연금 등의 확대 ② 농업직불금 확대 ③ 도로, 교통, 상수도 확대
④ 마을주민 간 단합된 활동 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시설 확충
⑥ 의료서비스 확대 ⑦ 귀향 및 귀농·귀촌자 적극 유치 ⑧ 출산장려금 확대 ⑨ 기타

3. 끝으로 마을이 지속적으로 존속 내지 발전하기 위해서 마을주민이나 정부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주민들에 대한 요구:

▶ 정부에 대한 요구: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